

충남 마을소멸 실태 분석 및 대응방안 - 청양군을 대상으로

저자

윤정미 외



◀ 주요연구내용 및 정책제안

▣ 주요연구내용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인구감소에 따라 지방소멸의 위기의식이 확대되고 있다. 이에 지방소멸에 대응하기 위해 국가 차원의 정책 추진 및 제도 개정, 지자체 차원의 인구감소 대응 체계 구축 및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지방소멸에 대한 논의와 함께 농촌마을소멸에 대한 심각성을 우선적으로 인지하고 마을소멸 대응 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노력이 추진되어야 하나, 실제 마을소멸에 대한 실태 진단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실정이다.

본 연구는 저출산·고령화로 소멸 위기의식이 확대되고 있는 현시점에서 지방소멸이 아닌 마을소멸 대응을 위한 마을(행정리) 단위 소멸 실태를 분석·진단하고, 이를 바탕으로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연구의 공간적 범위는 충청남도 청양군 행정리 단위를 기준으로 연구를 진행하며, 시간적 범위는 2023년, 2018년, 2013년 데이터를 이용하여 시계열 분석을 수행하였다. 연구 내용으로 선행연구 및 정책 고찰, 청양군의 소멸 실태분석, 추진된 마을사업 효과 분석, 설문조사 및 인터뷰 조사를 추진하였고 이를 통해 청양군 마을소멸 대응 방안을 제시하였다.

연구 결과 사람 중심의 정책, 정주여건 개선 및 일자리 창출, 도시와 농촌 소통, 우수한 자연경관 활용, 생활인구 및 관계인구 확보, 빈집 및 유휴공간 활용, 행정적·공간적·기능적 재편, 주민자치강화 마을만들기 사업의 지속화, 인식개선 및 조직기반 확충 9개의 정책 방향을 제시하였다.

정책 방향별 방안으로는 첫째, 사람 중심의 정책 추진을 위해 영유아동을 청양군이 책임지고 키우는 철학에 근거한 돌봄 정책, 고령자의 보살핌 받을 권리 보장 돌봄 정책, 고령자 사망요인을 낮추기 위한 응급상황 대비

정책, 활력있는 마을 공동체 조성(사람들과 교류하며 커뮤니티 형성)이 추진되어야 한다.

둘째, 정주여건 개선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해 일자리 + 주거단지 + 생활여건 개선 + 공동체 강화, 고령자 배려 스마트 기술 적용 마을 조성, 고령자 공동홈 조성, 6차 산업 촉진, 마을 주민주도의 마을산업(사회적 경제) 육성, 로컬크리에이터, 지역혁신가, 사회적 기업, 엑셀러레이팅을 통한 일자리 창출 방안이 제시되었다.

셋째, 도시와 농촌 소통을 위해 농촌마을 가치와 매력을 재발견, 알리기(청양 교류 및 유입 유도), 초등학교 교육을 차별화하여 도시 쏠림을 농촌으로 분산, 지방 교류 및 유입 유도(공주 청년마을 '자유도') 등을 통해 사람과 사람, 자연과 사람, 도시와 농촌 소통 정책이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넷째, 농촌의 우수한 경관 자원 활용 정책으로는 외부인을 위한 워케이션 및 코워킹 공간 조성 사업, 유희시설 리모델링으로 주민 생활 및 문화 교류공간이 조성되어야 한다.

다섯째, 생활인구 및 관계인구 확보를 위해 주말농장, 한달살이 체험 등으로 생활인구 확보(클라인가르텐, 다차, 야치요초), 출향민의 관계인구 형성(대도시에서 형성된 네트워크를 지역으로 연계), 고향세의 목적성 사업 기부(폐교 살리기 위한 고향세 목적성 기부 등) 등이 제시되었다.

여섯째, 빈집 및 유희공간 활용 방안으로는 빈집세 부과(농촌 경관세 도입), 임대 아파트 및 정착금 지원, 귀농·귀촌인 주거공간, 예술인 작업공간, 커뮤니티 공간, 한 달 내집, 워케이션 하우스 등 활용 사업이 제시되었다.

◀ 주요연구내용 및 정책제안

일곱째, 행정적·공간적·기능적 재편 방안으로는 작은 거점 발굴 및 기능 강화, 과소고령마을의 재편 정책이 제시되었다.

여덟째, 주민자치강화 및 마을사업 추진방안으로 마을 자치 강화(주민 스스로 살고 싶은 마을만들기), 단계별 마을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이 제시되었다.

마지막으로 인식개선 및 조직 기반 확충 방안으로는 마을 소멸에 대한 공감대 형성, 고령화로 인해 주민의 힘과 역량, 의지만으로 추진이 어렵기에 사회적 기업 조직 운영, 민간주체 활동 활성화, 청양군 - 읍면 - 마을의 상호 간 협력 및 연계를 강화가 제시되었다.

본 연구는 청양군의 마을소멸 실태를 진단하고 이를 통해 대응방안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으며, 이 연구를 통해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인구감소, 마을소멸 대응 정책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 가능하다. 또한 청양군 대상의 파일럿 연구 수행을 통해 향후 충남 전역의 마을소멸 실태 분석 및 진단 시 효율적으로 진행될 것이라 사료된다.

■ 정책 제안

첫째, 지방소멸에 대한 논의와 함께 농촌마을소멸에 대한 심각성을 우선적으로 인지하고 마을소멸에 대한 실태 진단을 실시한다. 지방소멸의 경우 시군, 읍면동 공간 단위에서 데이터 구축 및 분석이 진행되어 다양한 실태 진단과 정책이 추진되고 있으나, 마을 단위는 전무하기에 농촌마을 소멸 대응을 위해 기초적으로 마을 단위의 소멸에 대한 시계열 분석과 진단이 필요하다.

둘째, 지방소멸 정책이 아닌 마을단위의 소멸 정책이 추진되어야 한다. 2020년 자치분권정책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의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중 거점 관련 사업을 제외한 모든 마을 단위 사업이 지방으로 이양되어 국가 차원에서 마을단위의 사업이 추진되기 어렵다. 물론 지자체 차원에서 다양한 노력을 진행하고 있으나, 인구 감소시대에는 읍면소재지를 제외한 마을은 소외되어 마을소멸의 심각성이 더욱 높아질 것이다. 마을의 소멸은 즉, 지방의 소멸이기에 현 지방소멸 정책이 아닌 마을단위의 소멸 정책이 개발되고 추진되어야 한다.

셋째, 마을의 기능 재정립과 마을소멸의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 지방소멸 위기 시대에 마을소멸에 대한 문제의식이 없다. 그러나 마을의 소멸은 지방소멸과 밀접히 연결되어 있기에 마을소멸 대응을 위한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 또한 도시와 다르게 여러 사람들과의 상호관계 속에서 생활을 유지하고, 커뮤니티가 매우 강조되고 있다. 그러나 소멸의 위기 속에서 농촌마을의 제 기능에 대해 재정립하여, 기능에 따른 정책 대응 방안이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 주요연구내용 및 정책제안

넷째, 인구감소 시대에 마을의 소멸은 당연한 문제이기에 마을소멸위기 마을에 대해 실태 분석을 위한 데이터 구축, 모니터링과 마을 기록 DB 구축이 필요하다. 소멸에 대응하기 위해 과거부터 현재까지 아카이브 사업을 추진하여 체계적인 마을 기록 사업이 필요하다.

다섯째, 최근 인구감소 대응방안으로 생활인구 키워드가 대두되고 있기에 마을단위에서 추진할 수 있는 생활인구 시책이 발굴되어야 한다. 그리고 고령화로 인해 주민주도의 사업 추진이 어렵기에 사업추진을 위한 민간주체의 적극적인 발굴이 필요하다.

목 차

제1장 서론	1
1. 연구 배경 및 목적	3
1) 연구 배경	3
2) 연구 목적	7
3) 정책 활용	7
2. 연구 범위 및 방법	9
1) 연구 범위	9
2) 연구 방법	12
3. 연구 내용 및 수립 방법	14
4. 분석의 틀	15
제2장 선행 연구 및 정책 환경 고찰	17
1. 소멸 관련 선행연구 고찰	19
1) 지방소멸 대응 연구 고찰	19
2) 마을소멸 관련 연구 고찰	28
3) 행정리 마을 단위의 마을소멸 관련 연구	35
4) 연구의 차별성	37
2. 마을소멸지수(행정리소멸지수) 고찰	38
1) 마을소멸지수 산정 개념 모형	38
2) 선정 지표 설명	40
3) 마을소멸지수와 지방소멸지수 비교	42
3. 농어촌지역개발사업 고찰	44
1) 농어촌지역개발사업	44
2)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47

3) 충남형 마을만들기사업	50
4) 농촌자원 복합산업화 지원사업	53
4. 국내외 마을소멸 정책 및 사례 분석	54
1) 국내 정책 및 사례 분석	54
2) 일본 정책 및 사례 분석	68
5. 소결	87
1) 국내 사례 검토를 통한 전략 방향	87
2) 일본 사례 검토를 통한 전략 방향	92

제3장 청양군 마을 실태 및 지원사업 효과 분석 97

1. 청양군 인구 현황	99
1) 인구 및 세대 현황	99
2) 자연적 인구 및 사회적 인구 증감 현황	100
3) 전입·전출 사유	102
2. 청양군 마을 인구 현황	103
1) 읍면별 인구 현황	104
2) 행정리별 인구 현황	106
3) 행정리 마을 연평균 인구 증감 분석(2014~2023년)	108
4) 행정리 고령인구 비율(70세 이상) 변화 분석	110
5) 청년인구(20-44세) 변화 분석	113
6) 청년 여성인구(여성 20-44세) 변화 분석	114
7) 전입인구 변화 분석	115
8) 전출인구 변화 분석	116
9) 과소고령마을 분석	117
10) 마을소멸지수 시계열 분석	120
3. 청양군 인구정책 추진 현황	123
4. 청양군 마을만들기사업 추진 현황 및 효과 분석	127
1) 마을만들기사업 추진 현황	127
2) 마을만들기사업 효과 분석	132

3) 결론 및 시사점	136
5. 소결	137
1) 청양군 인구 현황	137
2) 청양군 마을 인구 현황	138
3) 청양군 인구정책 추진 현황	139
4) 청양군 마을지원사업 추진 현황 및 효과 분석	139
제4장 설문 및 인터뷰조사	141
1. 설문조사	143
1) 조사 개요	143
2) 전체 행정리 설문조사 결과	144
3) '소멸 위기 마을' 설문조사 결과	150
2. 인터뷰조사	160
1) '소멸 위기 마을' 심층 인터뷰	160
2) 전문가 인터뷰	167
제5장 정책 대응 방안	173
1. 정책 방향	175
2. 부문별 정책 방안	176
1) '사람' 중심의 정책	176
2) '정주여건 개선 및 일자리 창출' 정책	177
3) '도시와 농촌의 소통' 정책	177
4) '우수한 자연경관 활용' 정책	178
5) '생활인구, 관계 인구' 확보로 잠재 인구 증대 정책	179
6) 늘어나는 '빈집 및 유휴공간 활용' 정책	179
7) 행정적·공간적·기능적 재편 정책	180
8) 주민자치강화와 마을만들기 사업의 지속화 정책	180
9) 인식개선 및 조직 기반 확충 정책	181

제6장 결론 및 정책 제언	185
1. 결론	187
2. 정책 제언	191
참고문헌	193
부록	199
1. 전략과제 착수연심회 의견 및 반영 사항	201
2. 전략과제 중간연심회 의견 및 반영 사항	202
3. 전략과제 최종연심회 의견 및 반영 사항	203
4. 전략과제 선정위원회 의견	204
5. 착수연심회 사전 자문회의 의견	205
6. 의존도 분석 결과(충청권)	206
7. 행정리 조사표	207
8. 마을 심층 인터뷰 조사표	208
9. 10년간 행정리 마을 인구(6월말 기준)	210

표차례

〈표 1-1〉 청양군 행정구역 현황	9
〈표 2-1〉 지방소멸 방지 정책	21
〈표 2-2〉 지역인구감소 대응 종합대책의 개념과 세부 범위	23
〈표 2-3〉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정부 협력 과제 및 지역별 대응 방안	24
〈표 2-4〉 연구과정별 도출된 문제점과 해결 방안	27
〈표 2-5〉 한계마을 유형별 정책 방향 및 주요 정책(안)	35
〈표 2-6〉 마을소멸지수별 구분	39
〈표 2-7〉 인구 구간별 가중치 설정 및 기준 근거	40
〈표 2-8〉 마을소멸지수별 행정리 마을 분포	42
〈표 2-9〉 지방소멸지수별 행정리 마을 분포	42
〈표 2-10〉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유형 및 내용	48
〈표 2-11〉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의 기능별 구분	49
〈표 2-12〉 충남형 마을만들기사업	50
〈표 2-13〉 사업의 단계	51
〈표 2-14〉 충남 마을만들기사업의 기능별 구분	52
〈표 2-15〉 농촌자원 복합산업화 지원사업	53
〈표 2-16〉 인구감소지역(89개 지역) 지정 현황	58
〈표 2-17〉 인구감소지역 분야별 특례 지원 내용	59
〈표 2-18〉 행안부 청년마을 만들기 지원사업 선정 마을 현황	63
〈표 2-19〉 지방소멸 대응 지자체 시범사업의 주요 추진 내용	66
〈표 2-20〉 지자체 수요조사: 지역특화 및 신규 시책 제언(142건)	67
〈표 2-21〉 마을이전 관련 사업 개요	70
〈표 2-22〉 기존 마을 토지 활용 여부에 따른 마을이전 유형	72

〈표 2-23〉 마을기능 저하에 따른 사회기반 등 현황(과소지역 시정촌)	75
〈표 2-24〉 마을 기능 저하에 따른 영향	76
〈표 2-25〉 일본의 마을 지원 사업 개요	77
〈표 2-26〉 일본의 지방창생 관련 정책 개요	79
〈표 2-27〉 지역인구감소를 대처하기 위한 특정지역만들기사업 추진에 관한 법률 개요 ..	83
〈표 2-28〉 국내 마을소멸 선행연구와 정책사례의 카테고리 구분	88
〈표 3-1〉 최근 5년간 인구 및 세대 현황(명, %)	99
〈표 3-2〉 최근 3년간 인구 구조 현황(명, %, 12월 기준)	100
〈표 3-3〉 청양군 자연적 인구 및 사회적 인구 증감(명)	101
〈표 3-4〉 청양군 읍면별 인구 증감 현황(명)	101
〈표 3-5〉 전출·전입 사유(명, %)	102
〈표 3-6〉 마을 인구 분석 내용	103
〈표 3-7〉 청양군 읍면별 인구 현황(명)	104
〈표 3-8〉 청양군 읍면별 인구 구조 현황(명)	105
〈표 3-9〉 행정리 인구 분포	106
〈표 3-10〉 읍면별 행정리 인구 70명 미만 분포(개, %)	107
〈표 3-11〉 행정리 마을의 10년간 연평균 인구 증감 실태	108
〈표 3-12〉 행정리 마을의 10년간 연평균 인구 증감 읍면별 실태	109
〈표 3-13〉 연평균인구증감율 상위, 하위 마을	109
〈표 3-14〉 행정리 고령인구 변화 분석(70세 이상)	110
〈표 3-15〉 읍면별 행정리 고령인구 40% 이상 분포	112
〈표 3-16〉 행정리 청년인구(20-44세) 변화 분석	113
〈표 3-17〉 행정리 청년 여성 인구(20-44세) 변화 분석	114
〈표 3-18〉 행정리 전입인구 변화 분석	115
〈표 3-19〉 행정리 전출인구 변화 분석	116
〈표 3-20〉 과소고령마을 변화 분석(인구 70명 이하 and 65세 고령화율 50% 이상) ..	117
〈표 3-21〉 2023년 과소고령마을 현황(인구 70명 and 65세 고령화율 50% 이상) ..	118

〈표 3-22〉 마을소멸지수별 행정리 분포	120
〈표 3-23〉 마을소멸고위기 마을 목록	121
〈표 3-24〉 마을소멸매우낮음 마을 목록	122
〈표 3-25〉 청양군 인구정책 추진 전략 및 과제	123
〈표 3-26〉 각 분야별 부서별 추진과제(50개)	124
〈표 3-27〉 청양군 마을사업 추진 현황	129
〈표 3-28〉 변수의 통계량	134
〈표 3-29〉 분석 결과	134
〈표 4-1〉 설문조사 개요 및 항목	143
〈표 4-2〉 설문조사 소결	149
〈표 4-3〉 청양군 ‘소멸 위기 마을’ 선정	151
〈표 4-4〉 ‘소멸 위기 마을’의 인구 부문 실태	152
〈표 4-5〉 ‘소멸 위기 마을’의 토지 및 경제기반 부문 실태	155
〈표 4-6〉 ‘소멸 위기 마을’의 커뮤니티 부문 실태	156
〈표 4-7〉 ‘소멸 위기 마을’의 마을 전망 부문 실태	158
〈표 4-8〉 청양군 ‘소멸 위기 마을’의 설문조사 소결	159
〈표 4-9〉 심층 인터뷰 개요 및 항목	160
〈표 4-10〉 주거 및 환경	161
〈표 4-11〉 토지 및 경제 부문	162
〈표 4-12〉 문화·공동체 부문	162
〈표 4-13〉 마을 이슈	164
〈표 4-14〉 전문가 인터뷰 개요 및 항목	167
〈표 4-15〉 전문가 인터뷰 소결	172

그림차례

[그림 1-1] 공간적 범위	10
[그림 1-2] 청양군 행정리 지도	10
[그림 1-3] 연구의 내용적 범위	12
[그림 2-1] 인구감소지역의 생애주기에 따른 대응방안 모색	26
[그림 2-2] 충남 농어촌 과소지역 부문별 활성화 전략	30
[그림 2-3] 마을 차원의 대응전략	31
[그림 2-4] 정책 추진전략	34
[그림 2-5] 마을소멸지수 충남 분포도(2022년)	43
[그림 2-6] 지방소멸지수 충남 분포도(2022년)	43
[그림 2-7] 지방이양사업 변화	45
[그림 2-8] 역대 정부의 농촌개발사업 변천 과정	46
[그림 2-9] 인구정책 추진방향 체계도	55
[그림 2-10]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의 정책체계도	57
[그림 2-11] 시·군·구 인구 활력 계획의 시도 및 국가 인구감소대응계획 반영	60
[그림 2-12] 지방소멸대응기금 운영 절차	61
[그림 2-13] 지방소멸 대응 지자체 시범사업 추진 현황	65
[그림 2-14] 일본의 '마을 기능' 개념	74
[그림 2-15] 과소지역등 집락네트워크권 형성지원사업 개요	80
[그림 2-16] 지역인구감소를 대처하기 위한 특정지역만들기사업 추진에 관한 법률 개요	84
[그림 2-17] 특정지역만들기사업 협동조합 활용 방법 개념	84
[그림 2-18] 지역운영조직 유형	86
[그림 3-1] 2022년 전입·전출 사유	102
[그림 3-2] 읍면별 인구 현황	104

[그림 3-3] 읍면별 인구 구조 그래프	105
[그림 3-4] 행정리별 시계열 인구 분포	106
[그림 3-5] 청양군 행정리 인구 분포	107
[그림 3-6] 읍면별 행정리 인구 70명 미만 분포 그래프	107
[그림 3-7] 행정리 고령인구(70세 이상) 변화 분석 그래프	110
[그림 3-8] 청양군 70세 이상 고령화율 행정리 인구 분포	111
[그림 3-9] 읍면별 행정리 고령인구 40% 이상 그래프	111
[그림 3-10] 고령인구(70세 이상) 40% 이상 행정리	112
[그림 3-11] 행정리 청년인구(20-44세) 변화 그래프	113
[그림 3-12] 행정리 청년 여성인구(20-44세) 변화 그래프	114
[그림 3-13] 전입인구 그래프	115
[그림 3-14] 전출인구 그래프	116
[그림 3-15] 과소고령마을(인구 70명 이하 & 65세 고령화 50% 이상)	117
[그림 3-16] 2023년 과소고령마을 분포	118
[그림 3-17] 청양군 마을소멸지수 분포	121
[그림 3-18] 마을소멸고위기 행정리 시계열 분포	122
[그림 3-19] 청양군 인구정책사업 전략별 비중	126
[그림 3-20] 청양형 마을만들기 단계별 사업 지원	127
[그림 3-21] 마을만들기 사업 단계별 추진 현황	130
[그림 4-1] '소멸 위기 마을' 선정 방식	150

제 1 장

서론

1. 연구 배경 및 목적
2. 연구 범위 및 방법
3. 연구 내용 및 수립 방법
4. 분석의 틀

1. 연구 배경 및 목적

1) 연구 배경

인구감소 및 지방소멸의 위기 가운데 일본에서는 1990년대 초부터 과소고령, 한계마을, 지방소멸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우리나라보다 과소·고령화 현상이 심각한 일본의 경우, 1990년대 초부터 과소·고령화에 따른 공동체 유지가 한계에 달한 마을을 한계(限界)마을로 정의하고 다양한 논의와 노력이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2014년에는 인구감소로 인해 지방이 소멸한다는 지방소멸론에 따른 위기의식을 바탕으로 지방상생전략 등 다양한 국정과제가 추진 중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본격적인 인구감소시대 도래와 함께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인구감소와 지방소멸의 위기의식이 확대되고 있다. 2018년 고령사회 진입, 2020년 베이비붐 세대의 노인 세대 진입으로 인해 2025년이면 고령인구 20%를 돌파하여 초고령사회 진입으로 고령화가 매우 심각한 상황이다. 고령화만 심각한 것이 아니라 저출산도 매우 심각하다. 우리나라는 1984년 합계출산율 2.1명 이하로 저출산국, 2001년 합계출산율 1.3명으로 초저출산¹⁾국 진입, 2017년 1.05명, 2019년 0.92명, 2020년 0.8명으로 출산율로 인한 인구구조 변화가 매우 심각하다. 영국 옥스퍼드 인구문제연구소에 따르면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소멸 국가 1호는 한국이 될 것이며 지구상에서 2750년 대한민국이 사라질

1)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기준 저출산은 합계출산율이 2.1명 이하, 초저출산은 합계출산율 1.3명 이하인 현상

것이라고 전망²⁾하고 있다.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국가적 차원에서 인구감소 및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 및 법 제정 등 다양한 노력이 진행되고 있다. 지역 주도의 인구감소·지방소멸 문제 대응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고 있으며, 인구감소 문제 대응을 위한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주거·교통·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 걸친 종합지원을 위한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이 제정되었다. 또한 지자체 주도적으로 인구감소 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국가는 지방소멸대응 기금 등 행·재정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이 시행되고 있다. 그동안은 인구감소 완화에만 주력했던 기존의 대책에서 더 나아가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인구구조의 변화를 분석하고 대응하는 법 발의 등 많은 노력이 진행되고 있다.

인구감소와 지방소멸에 대한 정책 및 연구도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지자체에서는 인구감소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인구유입, 인구유출방지, 정주여건 개선, 생활(관계)인구 늘리기, 인구활력 제고 등 다양한 인구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지방소멸위기지수, 지방소멸 위기 대응 정책 연구를 추진한 지자체, 고향사랑기부금을 활용한 지방소멸위기 대응 방안, 지방소멸 대응 정책간담회, 지방소멸방지를 위한 정책대응 과제 제시 등 지방소멸에 대한 다양한 연구, 정책, 논의가 진행 중이다.

그러나 지방소멸에 대한 논의와 함께 농촌마을소멸에 대한 심각성을 우선적으로 인지하고 마을소멸 대응 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노력이 추진되어야 하나, 실제 마을소멸에 대해서는 실태 진단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실정이다.

행정리(마을)는 국토정주체계의 정체성을 대변하는 커뮤니티의 기본단위로 마을소멸의 이슈를 정확히 분석하기 위해서는 읍면동 공간 단위 뿐만 아니라

2) 유선종, 노민지, 2018 지방소멸 어디까지 왔나? 매일경제신문사, pp.33-34

행정리(마을) 단위의 분석이 필요하다. 행정구역은 시도 - 시군구 - 읍면동 - 법정리 - 행정리의 위계이며, 일반적으로 행정리는 공공 정책 및 사업이 추진 되는 가장 기초가 되는 단위이자 농어촌마을의 기본 공간단위로 규정할 수 있다.

그동안 행정리(마을) 단위의 연구가 많이 진행되지 못했던 것은 행정리(마을) 단위의 데이터 구축이 국가차원에서 구축되지 않아 어려움이 있었으나, 최근 본 연구원에서 지방소멸지수가 아닌 마을(행정리) 단위의 소멸지수를 개발하는 연구가 진행되었고 행정리 공간데이터가 구축되어 있기에 지방소멸이 아닌 마을소멸에 대한 연구가 가능하다.

지방소멸의 경우 시군, 읍면동 공간 단위에서 데이터 구축 및 분석이 진행되어 농어촌마을에 대한 마을소멸 위험 실태 진단의 한계를 가지고 있기에 농촌 마을소멸 대응을 위해 기초적으로 마을 단위의 소멸에 대한 시계열 분석과 진단이 필요하고 이를 기초로 한 정책 대응 방향 제시가 필요하다.

※ 기존 연구(이상호 2016, 2018)인 지방소멸지수를 농어촌마을에 적용하는 한계³⁾

- 지방소멸 지표는 65세 이상 고령인구 수 대비 20-39세 여성인구 수로 정의
- 소멸지수 값이 1.0 이하(즉, 20-39세 여성인구가 65세 이상 고령인구 수 보다 적은 상황)로 하락하는 경우 소멸 주의단계 및 소멸위험지역으로 정의됨
- 이상호(2018)의 연구에서 충청남도(연구 대상지)를 살펴보면 시군으로 분석 시 10개 시군이 소멸위험진입 단계(주황)인 것으로 도출되었음
- 그러나 읍면동 차원으로 분석 시 많은 읍면이 소멸고위험 단계(빨강)인 것으로 분석됨
- 공간 단위에 따른 집계오류가 발생하기에 분석 목적에 따른 공간 단위 설정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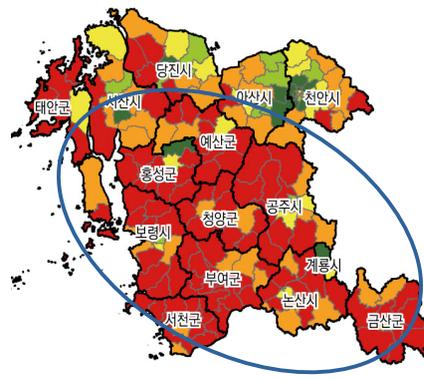
- 즉, 지방소멸의 경우 시군과 읍면동 공간단위 분석이 합당하나 마을소멸의 경우 소지역 공간 단위인 행정리 단위의 분석 및 진단이 필요함

소멸위험지수 기준(이상호, 한국의 지방소멸 2018, 한국고용정보원, p.9)

구분		범례	지수
소멸위험지역	소멸고위험		0.2 미만
	소멸위험진입		0.2~0.5 미만
주의단계			0.5~1.0 미만
소멸위험보통			1.0~1.5 미만
소멸위험 매우 낮음			1.5 이상



시군(2018)



읍면동(2018)

※ 2013년, 2018년 충청남도 시군과 읍면동 지방소멸지수 (Lee, 2018, p.9)

3) 윤정미, 2021, 저출생·고령화에 대응한 농어촌 행정리소멸지수 개발 및 적용, pp. 3-4

2) 연구 목적

본 연구는 본격적인 인구감소시대 도래와 함께 저출생·고령화로 소멸 위기의 식이 확대되고 있는 현시점에서 지방소멸이 아닌 마을소멸 대응을 위한 마을(행정리) 단위 소멸 실태를 분석·진단하고, 이를 바탕으로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3) 정책 활용

본 연구를 통해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인구감소, 마을소멸 대응정책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 가능하다. 또한 청양군을 대상으로 한 파일럿 연구 수행을 통해 향후 충남 전역의 마을소멸 실태 분석 및 진단 시 효율적으로 진행될 것이라 사료된다. 그 동안 추진되었던 정책지원 사업들에 대한 효과 유무 등을 제시하는 분석 방법 마련으로 향후 인구관리정책 및 시책 추진 시 본 연구 결과를 토대로 마을 유형별로 정책 효과가 높은 지원사업 중심으로 대응전략 마련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 본 연구에서의 마을소멸 정의⁴⁾

- 본 연구에서의 마을소멸은 일본의 사회학자 오오노아키라(大野晃)가 1980대 후반 최초로 제기한 마을의 기능 유지가 한계에 달해 머지않은 장래에 소멸될 가능성이 높은 마을인 ‘한계(限界)마을’과 비슷한 개념으로 정의한다.
- 오오노아키라의 한계마을은 65세 이상의 인구 비율이 50% 이상인 마을로 고령화 진행으로 공동체의 기능 유지가 한계에 이른 상태 마을을 의미한다. 즉, 한계마을은 사람의 공동화, 토지의 공동화, 마을(공동체)의 공동화로 인해 마을 기능 유지가 한계에 달한 마을을 의미한다.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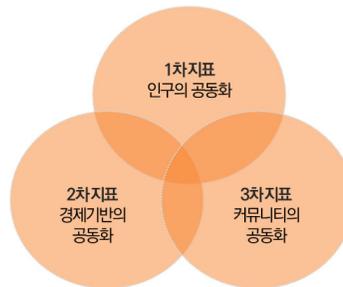
정의	존속마을 55세 미만 인구 비율 50% 이하	준한계마을 55세 이상 인구 비율 50% 이상	한계마을 65세 이상의 인구 비율이 50% 이상	소멸마을 인구 없음
내용	공동체 기능을 다음 세대가 이어갈 수 있는 상태	현재 공동체 기능 있음 그러나 다음 세대가 없어 한계마을이 될 수 있는 상태	고령화 진행으로 공동체의 기능 유지가 한계에 이른 상태	현재 취약 소멸된 상태
가구 유형	젊은 부부 취학중인 아동 후계자	부부만 거주 준노인* 부부	노인 부부 독거 노인	없음

[그림] 한계마을 정의 및 내용

주: 준노인이란 55세부터 64세 인구 의미

자료: 오오노아키라, 2008, “한계취락과 지역재생”, 시즈오카신문사, p.28

- 본 연구에서의 마을소멸은 인구 공동화와 함께 토지 및 경제기반의 공동화, 커뮤니티의 공동화가 진행된 마을로 정의하며⁶⁾, 연구에서 인구 공동화 분석은 기존의 인구 50명이 아닌 인구 70명 이하이면서 65세 고령화율 50% 이상 마을로 정의하여 분석하였다(청양군 인구 50명 이하 마을 거의 없음).
- 인구가 전혀 없는 마을은 무거주 마을로 소멸 마을이며, 연구의 ‘마을소멸’은 인구 0명이 아닌 인구공동화, 토지 및 경제기반 공동화, 커뮤니티 공동화가 일어나는 과정에 있는 마을을 의미한다.



- 4) 서천군, 2018, 서천군 한계마을 실태분석 및 유형별 정책 대응방안, pp.13-14
조영재·유학열·윤정미·이관률·박경철·엄성준·김정하 2013, 과소화·고령화에 대응한 ‘한계마을정책’ 도입을 위한 기초연구, 충남연구원
- 5) 小田切徳美, 農山村再生-限界集落問題を越えて, 2009.10
- 6) 조영재·유학열·윤정미·이관률·박경철·엄성준·김정하 2013, 과소화·고령화에 대응한 ‘한계마을정책’ 도입을 위한 기초연구, 충남연구원, p.2

2. 연구 범위 및 방법

1) 연구 범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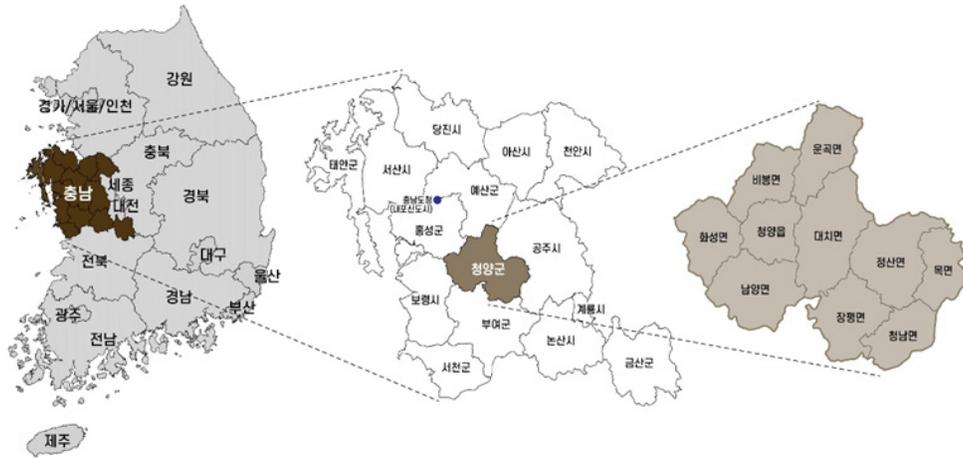
(1) 공간적·시간적 범위

공간적 범위는 충청남도 청양군 행정리 단위를 기준으로 연구를 진행하며, 시간적 범위는 2023년, 2018년, 2013년 데이터를 이용하여 시계열 분석을 수행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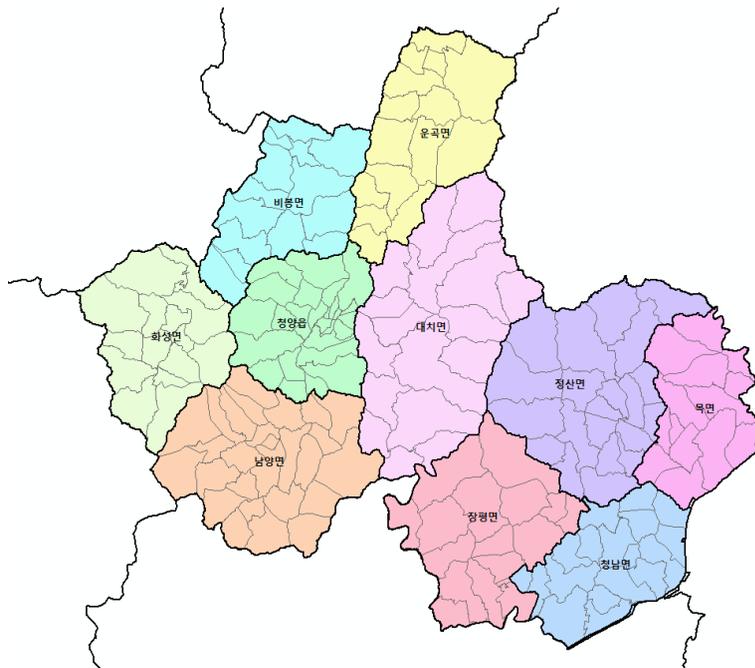
- 청양군 행정구역(1개 읍, 9개 면, 183개 행정리)

〈표 1-1〉 청양군 행정구역 현황

구분	면적(km ²)	행정구역		
		읍	면	행정리
충남	8,226.14	25	136	4,364
청양군	479.20	1	9	183
청양읍	36.14	1	-	26
운곡면	47.01	-	1	15
대치면	74.42	-	1	17
정산면	62.08	-	1	21
목면	34.39	-	1	14
청남면	35.11	-	1	17
장평면	50.71	-	1	17
남양면	58.93	-	1	27
화성면	42.40	-	1	15
비봉면	38.01	-	1	14



[그림 1-1] 공간적 범위



[그림 1-2] 청양군 행정리 지도

※ 청양군 선정 이유

- 충남에서 가장 인구가 적은 시군이며, 연말 대비 인구 감소율이 가장 높은 시군임

충남 인구 현황

구분	2022년말(A)	인구수 (23.01)(C)	연말대비증감 (C-A)	증감율(%)
천안시	657,559	656,955	-604	-0.09
공주시	102,571	102,460	-111	-0.11
보령시	97,157	96,999	-158	-0.16
아산시	334,539	336,098	1,559	0.47
서산시	176,413	176,341	-72	-0.04
논산시	112,617	112,399	-218	-0.19
계룡시	44,475	44,425	-50	-0.11
당진시	168,253	168,377	124	0.07
금산군	50,092	50,062	-30	-0.06
부여군	62,343	62,178	-165	-0.26
서천군	49,964	49,929	-35	-0.07
청양군	30,266	30,163	-103	-0.34
홍성군	98,068	97,905	-163	-0.17
예산군	77,385	77,462	77	0.1
태안군	61,335	61,160	-175	-0.29

- 의존도 조사 결과 충남 15개 시군 중 청양군이 충청권 지역에서의 의존도 가장 높음
- 주변도시로(충청권)의 유출이 가장 많은 시군임

※ 의존도는 주변도시에서 총 유출된 수 대비 중심도시로 유출된 수의 비율로 모도시로의 유출 의존도를 살피는 지표(주변도시에서 중심도시로 유출된 수/주변도시의 총 유출자 수)

각 시군의 충청권 의존도 분석

구분	천안시	공주시	보령시	아산시	서산시	논산시	계룡시	당진시
계	0.377	0.293	0.188	0.244	0.151	0.190	0.188	0.169
구분	금산군	부여군	서천군	청양군	홍성군	예산군	태안군	
계	0.139	0.276	0.163	0.417	0.351	0.414	0.297	

(2) 내용적 범위



[그림 1-3] 연구의 내용적 범위

2) 연구 방법

(1) 문헌 고찰 - 선행연구, 지표 고찰, 사업 및 정책 환경 고찰

- 마을소멸 관련 선행연구 고찰, 마을소멸 지표 및 지수 고찰, 농촌마을지원 사업 고찰, 국내외 정책 사례 문헌 고찰

(2) 데이터 분석, 통계분석 - 실태 분석

- 주민등록인구시스템 데이터를 활용한 청양군 인구 실태를 분석(인구 증감, 인구 구조, 사회적 인구 증감 등)
- 기 개발된 마을소멸지수를 이용하여 청양군 행정리 마을소멸의 현 위치 도출

- 시계열 분석을 통해 과소고령마을 도출, 소멸 위기 마을 도출
- 통계분석을 통해 농촌마을지원사업 효과 분석

(3) 행정 조사 - 실태 분석

- 청양군 행정 조사를 통해 행정리의 인구적 측면, 경제적 측면, 공동체적 측면의 소멸 실태를 파악

(4) 현장 방문 및 심층현지 조사 - 인구 증감 원인 분석, 정책 발굴

- 마을 현지 관찰, 개별면접조사법과 집합조사법 병행 실시
- 청양군 소멸 위기 마을과 인구 증가 마을을 선정하여 인구 증감 원인 분석
- 마을에 대한 미래 인식, 마을 활성화를 위한 정책 수요 파악

(5) 설문조사 - 실태 분석, 진단, 정책 발굴

- 설문조사와 인터뷰를 통해 실 거주 인구 현황 조사, 경제적·공동체적 측면의 마을 실태 및 대응 방안 수요를 조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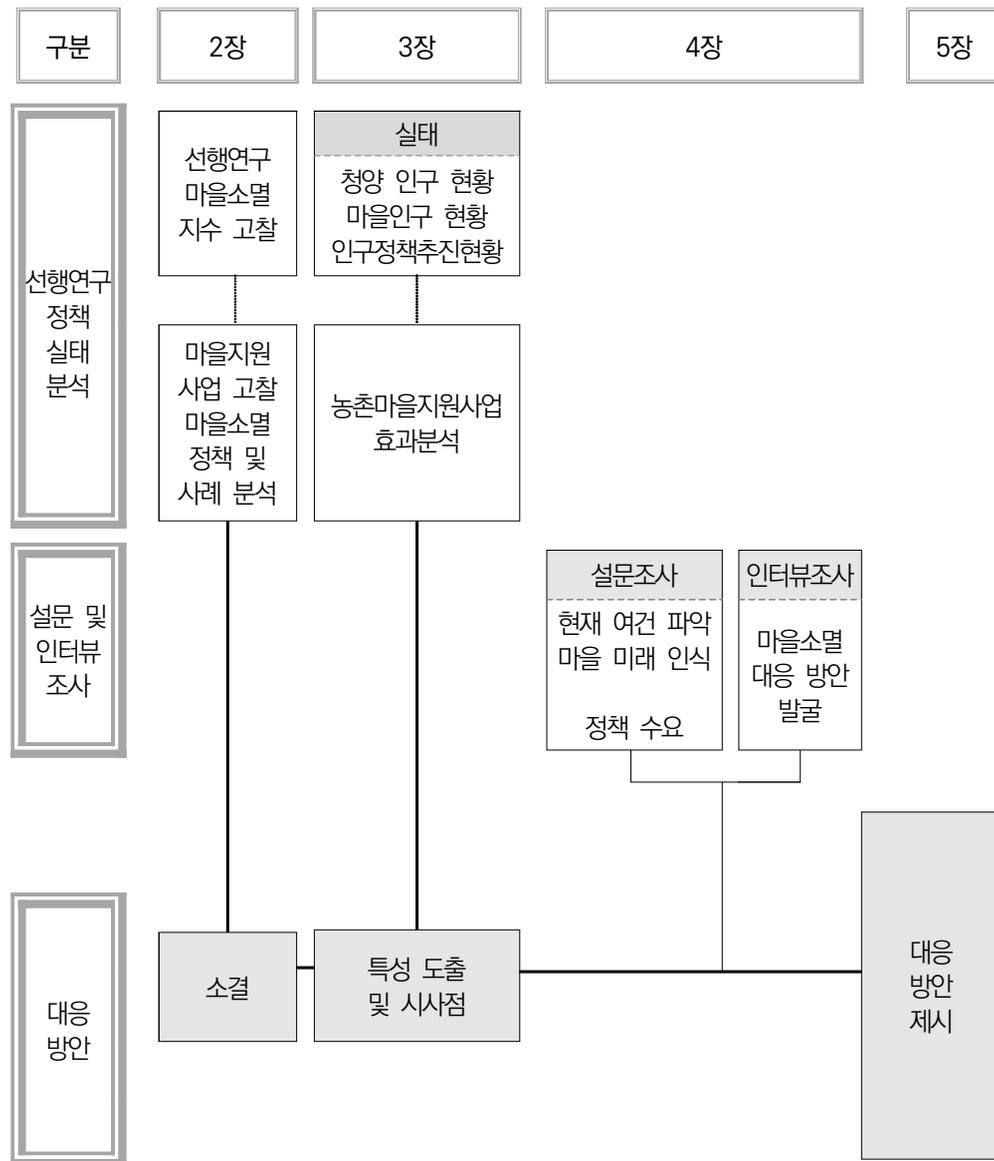
(6) 전문가 자문 회의 - 대응 방안 수립

- 행정, 전문가 회의를 통해 대응 방안 도출

3. 연구 내용 및 수립 방법

	과업 내용	방법	수립주체
서론	1. 연구 배경 및 목적 2. 연구 범위 및 방법		
선행 연구 및 정책 환경 고찰	1. 소멸 관련 선행연구 고찰 2. 마을소멸지수 고찰 3. 농어촌지역개발사업 고찰 4. 국내외 마을소멸 정책 및 사례 분석 5. 소결	문헌고찰	전문가
청양군 마을 실태 및 지원 사업 효과 분석	1. 청양군 인구 현황 2. 청양군 마을 인구 현황 3. 청양군 인구정책 추진 현황 4. 청양군 마을만들기사업 추진 현황 및 효과분석 5. 소결	데이터 분석 문헌고찰 통계분석 전문가 자문회의	전문가 주민 행정
설문 및 인터뷰조사	1. 설문조사 2. 인터뷰조사	FGI 행정 조사 현장 조사 심층인터뷰조사 전문가 자문회의	주민 행정 전문가
정책 대응 방안	1. 정책 방향 2. 부문별 대응 전략	전문가 자문회의	전문가
결론 및 정책 제언	1. 결론 및 요약 2. 정책 제언		전문가 행정

4. 분석의 틀



제 2 장

선행 연구 및 정책 환경 고찰

1. 소멸 관련 선행연구 고찰
2. 마을소멸지수(행정리소멸지수) 고찰
3. 농어촌지역개발사업 고찰
4. 국내외 마을소멸 정책 및 사례 분석
5. 소결

1. 소멸 관련 선행연구 고찰

소멸과 관련된 국내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지방소멸/마을소멸/한계마을/인구감소의 ① 개념 정의 및 진단 지표를 설정·적용하여 실태를 파악하는 연구와 ② 대응 전략 방향을 설정하고 방안을 모색하는 연구로 크게 구분된다.

본 장에서는 지방소멸 대응, 마을소멸 실태 및 대응 연구, 한계마을 연구 그리고 충남연구원에서 그동안 진행한 마을소멸 관련 선행연구를 주로 고찰하여 마을소멸에 대한 대응 전략과 정책과제의 방향성 설정 및 도출에 활용하고자 한다.

1) 지방소멸 대응 연구 고찰

지역소멸 대응을 위한 지방자치의 법적 과제(조진우, 2023)에서는 우리나라 인구변화 상황과 이와 관련된 국가의 인구에 대한 개입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인구감소시대에 지방자치단체의 대응 방안과 과제를 논의하였다. 지역소멸 대응을 위한 지방자치의 과제로는 ① 국가주도 인구정책의 관점 전환, ② 국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조정, ③ 지방자치단체 도시기본계획의 재편, ④ 인구감소와 특별지방자치단체, ⑤ 인구감소지역 지원특별법의 개정, ⑥ 지방소멸대응기금의 개선, ⑦ 청년기본조례의 강화를 제시하였다.

전라북도 농촌 활성화를 위한 관계인구의 개념과 정책과제(조원지, 2022)에서는 심각한 고령화·과소화와 청년 유출이 진행되고 있는 전라북도 농촌의 인

구 증가를 위해 관계 형성, 관계 성장, 관계 활성화로 구분하여 관계인구 확보 전략을 제시하였다. '관계 형성'은 전북 농촌과의 첫 만남 또는 단절됐던 관계를 회복하는 전략으로 산업관광, 체험, 도농교류, 농·특산물 연계 교류 등이 포함된다. '관계 성장'은 전북 농촌지역과 지속적인 관계를 형성하는 전략으로 전북형 농촌 살아보기, 워케이션 in 전북, 고향사랑 기부자 일촌맺기를 제시하였다. '관계 활성화'는 농촌지역에 정기적으로 방문하거나 체류하면서 지역과의 공고한 관계를 형성하는 전략으로 워킹홀리데이 in 전북, 생생마을 청년아카데미, 전북 생생농촌대학, 전북 이노베이션 스페이스를 제안하였다.

한국의 지방소멸위험지수 분석과 시사점(고문익, 2021)은 지방소멸위험지수를 활용하여 경상북도 의성군 인구정책 방안을 제시하였다. 연구 방법으로 문헌 연구, 지방소멸위험지수 산출 및 현장조사, 상관분석, 회귀분석, 주성분 분석 등 계량분석, 공무원과 주민 인터뷰를 수행하였다. 연구 내용은 지방소멸위험지수, 자연적 증감률, GRDP, 재정자립도, 독거노인가구 비율, 보험료부담 대비 급여비 비율, 기초연금 수급률, 사회적 증감률, 출생지수, 독거노인가구 비율, 빈집 비율 등의 변수를 활용하여 고령화요인, 저출산요인, 경제요인 등을 도출/ 현장 조사와 인터뷰를 통해 수요를 조사하여 인구 정책 방안을 제시하였다.

국가위기 대응을 위한 지방소멸 방지전략의 개발(김현호 등, 2021)은 국가적 중요 과제인 지방소멸 위험을 저감·방지·해소하고, 지역의 인구성장과 활력을 보다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전략을 제시하였다. 종래의 저출산 고령화 시책 위주의 인구·사회학적 접근의 정책기조에서 벗어나 지역의 인구 유지와 인구 창출을 위한 매력 창출이라는 지역개발적 접근으로의 이동 통합으로의 정책 전환 아래, 이를 추진하기 위한 시책들을 제시하였다. 지방소멸을 방지하기 위한 시책은 인구/경제/공간/융복합/제도 혁신의 5가지 분야에서 지방소멸 지역이 선택·추진할 수 있는 주요한 시책들을 개발하여 제시하였다.

〈표 2-1〉 지방소멸 방지 정책

구분	시책
인구	도시청년시골파견제 커뮤니티 위성 오피스 개발 및 지원 소멸지역 작은 학교 살리기 의료서비스 지원 청년 경험 충전소 사업
경제	향토기업 등 지역활력 산업 지원 마을기업, 사회적 경제 활성화 지원 청년 일자리 지원 도시청년 위기지역 장인 상생일자리 창출 미활용 농공단지 창업 용도변경 허용
공간	세컨드 하우스 조세 감면 관계인구 창출 및 연계 강화 스마트 빌리지 공간 조성 지역 문제 해결형 공간 조성 혁신 창출 거점 공간 플랫폼 조성
융복합	소멸위기지역 유토피아 사업 유니버설 베이직 서비스 제공 공공 플레이어 모델 사업 앵커조직 연계 융합발전 공간 조성 자립형 복합 정주자립 공간 조성
제도혁신	인구소멸 위기지역 규제특구 지정 국책 및 중요사업 예비타당성 면제 복수주소제 도입 위기지역 졸업제, 패밀리 닥터제 도입

자료: 김현호 등, 2021, 국가위기 대응을 위한 지방소멸 방지전략의 개발, p.252

지방소멸 대응 정책 방향과 추진 전략(차미숙 등, 2021)은 지방소멸 대응 정책 패러다임 전환에 따른 지방소멸 대응 정책 목표와 전 생애에 걸쳐 건강하고 품격있는 생활 실현, 매력공간 창출, 일자리 확충, 공존의 문화 확산, 지역 주도 역량 강화에 대한 추진전략을 제시하였다. 연구 방법으로는 전문가-정책실무자 대상 의식조사, 문헌연구, 국내외 사례조사를 실시하였다.

도시재생수법을 적용한 지방소멸지역의 활성화 방안 연구(조영미, 2020)는

지방소멸지역의 유형에 맞는 도시재생수법을 제시하여 지방소멸지역의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였다. 정책 현황 분석을 바탕으로 2014년(11곳)과 2016년(28곳) ① 도시재생 선도지역에서 적용된 도시재생 수법과 사업효과를 분석하고, ② 지방소멸지역을 유형화하기 위해 경북의 지방소멸고위험지역 7곳의 특성을 분석하여 유형화하였으며, ③ 지방소멸지역의 유형에 따른 도시재생수법을 제시하고 유형별 활성화 전략을 제시하였다.

지역 인구 변화에 따른 정책 과제와 대응 방안(장인수 등, 2020)에서는 우리나라 기초 지자체 단위의 인구 변화 양상을 고찰하고, 인구 변화와 지역 불균형 간 상호 연관성 내지 인과관계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여 지역 인구 변화와 지역 불균형의 복합적 양상에서 비롯되는 지역 측면의 주요 정책 과제와 대응 방안을 포괄적으로 제시하였다. 지역 인구 변화 분석에 따라 도출된 주요 이슈 중 지방재정 여건 제고, 지자체 협력, 연계 및 기능공간, 장소 기반 정책과 관련된 정책과제와 대응 방안을 논의하였으며, 향후 지역 인구정책 방향의 정책과제로 ① 지역간 불균형 양상의 극복 당위성 검토, ② 지역 인구동태의 명확한 관측, ③ 지역 인구정책 추진 여건의 사전적·체계적 검토, ④ 지역 인구정책의 추진(관리 및 조율) 주체를 설정하고 대응 방안을 마련하였다.

지역인구감소 대응을 위한 종합대책 마련 연구(박진경 등, 2019)는 ‘인구감소지역의 포용적 성장 및 활력 촉진’을 비전으로 설정하였으며, 지역인구의 사회적 유출 방지 및 유입 촉진을 목표로 한다. 추진전략 및 과제는 지역인구감소의 원인별 대책 관점에서 인구활력/경제회복/공간혁신으로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인구활력 대책으로는 ① 새로운 인구 유입 촉진 및 정착, ② 지역인재 육성, 양육·돌봄·교육 연계를 제시하였고, 경제회복 대책으로 ③ 지역자산기반 특화 산업·관광 육성, ④ 사회적 경제·지역순환경제 활성화를 제시하였으며, 공간혁신 대책으로 ⑤ 스마트 생활공간 육성, ⑥ 공동체 앵커공간 조성을 제안하였다.

또한 기반구축을 위해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 통합추진체계 구축, 규제완화(인센티브 강화)를 제안하였다.

〈표 2-2〉 지역인구감소 대응 종합대책의 개념과 세부 범위

대책(원인)	기본목표	성과평가(예시)	세부 범위
인구활력 대책 (사람활력 저하지역)	새로운 사람의 유입 촉진	주민등록이전수, 젊은인구 취업률, 총인구 저지율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젊은 인구 유입촉진, 정착사업(젊은 인구가 정착하여 육아, 교육하기 좋도록 저출산·고령사회대책을 연계하여 지자체차원에서 복합화되는 사업) • 귀농귀촌 활성화, 은퇴자 유치, 다문화가정 지원 등 인구유치사업 • 중앙공무원 파견사업, 도시청년파견제 등 인구의 이동을 지원하는 사업, 인재육성사업 등
경제회복 대책 (경제활력 저하지역)	안정된 지역 소득·일자리 창출	고용창출수, 소득 수준 변화율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경제기반이 붕괴되고 생산가능인구 감소, 일자리부족이 고착화된 지역의 지역소득 창출사업, 특화산업 육성, 비즈니스 모델개발사업 • 지역의 자산을 활용한 지역산업 경쟁력 강화, 지역 홍보 및 마케팅 사업 • 도농순환형 지역경제체제 구축, 사회적 경제조직을 활용한 경제 공동체 육성, 지역금융 활성화 사업 • 지방채용, 취업 확대, 앵커기업 유치사업 등
공간혁신 대책 (공간활력 저하지역)	인구감소시대에 맞는 공간 혁신, 주민 삶의 질 확보	스마트빌리지수, 생활서비스 집약도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ICT 기술을 활용한 생활서비스 거점 육성사업 • IoT 기술을 활용한 지역 안심·안전 생활기반 확보 • 인구감소지역의 생활공간 혁신, 공급방식 혁신, 연계·협력·협동 사업 등

자료: 박진경 등, 2019, 지역인구감소 대응을 위한 종합대책 마련 연구, p.213

지역소멸 예방을 위한 사례조사 연구-평생직업교육과의 연계(조은상, 2018)에서 지방소멸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을 찾고, 지역소멸 예방을 위해 산업 및 지역 일자리, 평생직업교육, 문화 예술 여가 생활, 지역 활성화 정책을 카테고리별로 구분하여 사례 조사를 실시하여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정책 제언, 중소도시에 대한 정책 제언, 농촌지역에 대한 정책을 제시하였다.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지역소멸 대응방안 연구(전국 시도연구원협의회, 2017)

는 저출산 현상의 원인이 될 수 있는 주요 지표와 인구의 변화, 고령인구 변화 실태, 소멸위험지수 등을 전국과 각 광역지자체별로 분석하여 지역 여건에 맞는 지역 소멸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 정부 협력 과제를 도출하였다. 정부 협력 과제로는 지방중심 법·제도 구축, 지방분권형 지방행정체제 정비, 중앙-지방 네트워크 전담조직 구성, 자치구 통합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1인 2주민등록지 규제 특례, 고향사랑기부제 도입 등으로 의견이 수렴되었고, 지역차원에서의 추진과제로는 도시 재생, 정주환경 개선, 공동체 강화, 지역 균형 발전, 저출산 극복, 청년인구 유출 방지, 고령화 시대 적응, 인구정책 전담부서 신설을 제시하였다.

〈표 2-3〉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정부 협력 과제 및 지역별 대응 방안

추진 과제		세부 추진 전략
정부 협력 과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중심 법·제도 구축 • 지방분권형 지방행정체제 정비 • 중앙-지방 네트워크 전담조직 구성 • 자치구 통합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 1인 2주민등록지 규제 특례 • 고향사랑기부제 도입
지역별 대응방안	도시 재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도심 활성화 • 도시공간 재편 및 기반시설 구축 • 도시재생 뉴딜정책과 연계한 전략 마련
	정주환경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희시설 기능 재편 • 정주 여건 개선으로 삶의 질적 향상 방안 • 교통 인프라 확충 • 낙후지역 정주 여건 개선 • 농촌지역 정주환경 개선 및 귀농귀촌 활성화 • 지역활력특구 시범사업 • 소멸취락 리질리언스 등 취락 재편 추진
	공동체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 커뮤니티 형성을 위한 정책적 지원 강화 • 지역 공동체 유지를 위한 공간 재설정 • 지역공동체 가치 확보
	지역 균형 발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행정구역 조정 • 지역간 정주여건 격차 해소 • 지역균형 발전 방안 마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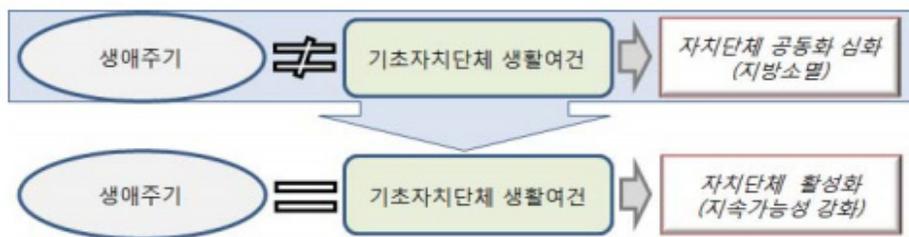
추진 과제	세부 추진 전략
저출산 극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출산 및 보육지원 사업 확대 • 다자녀출산 지원 • 자녀 꿈키움 통장(안) 개설 운영 • 교육여건 개선 • 아동맞춤 사회복지
청년인구 유출방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자리 창출 및 일자리 지원사업 확대 • 공공기관 지역인재할당 제도 개선 • 청년 희망 통장(안) 개설 운영 • 신산업 육성을 통한 신규 일자리 창출 • 대졸자 취업기회 다양화 • 일자리의 양과 질 개선 • 청년창업 지원 • 권역별 중핵도시 육성 • 청년 맞춤 사회복지
고령화시대 적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령친화 도시 조성 • 향토 문화 사업 추진 • 외국인 유입 확대 • 치매안심마을 조성 • 노인일자리 사업 확대 • 독거노인 공동거주제 • 노년맞춤 사회복지
인구정책 전담부서 신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구위원회 구성 운영 • 인구정책 추진 기반 구축 • 인구정책관 신설 • 인구종합계획 수립 • 인구 마스터 플랜 수립

자료: 전국시도연구원협의회, 2017,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지역소멸 대응방안 연구, p.640

인구감소시대의 지역활성화와 지방분권(하동현, 2017)은 일본의 지방소멸론과 지방창생을 소재로 출산율을 높이는 전략, 젊은 층의 대도시권 이동을 지역거점도시로 유도하는 전략을 제시하였다.

인구감소에 따른 기초자치단체의 지속가능성 강화 방안(이병기, 2017)은 인구감소 변화가 뚜렷한 기초자치단체를 사례지역(강원도 양양군과 화천군)으로 선정하여 인구감소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분석하고 일본 사례와의 비교분석 결

과를 토대로 지속가능성 강화의 측면에서 대안을 모색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주민들의 “생애주기”가설에 맞는 “생활환경여건”이 최소한이라도 충족될 수 있어야만 지속가능성을 담보할 수 있다고 가정하였다. 인구감소에 따른 지속가능성 강화방안으로 사업추진체계 개선, 지역계획수립에 따른 중앙정부차원의 지원체계 구축, 인구감소대책의 선순환 구조 마련을 제시하였다.



[그림 2-1] 인구감소지역의 생애주기에 따른 대응방안 모색

자료: 이병기, 2017, 인구감소에 따른 기초자치단체의 지속가능성 강화방안, p.137

강원도 인구구조 분석과 지역소멸 대응 방안(박상현 등, 2017)은 지역소멸로 연계될 수 있는 강원도 사회 전반의 지표를 검토하고, 소멸위험지역을 구분하여 강원도 지역 특성에 맞는 지역소멸 대응 방안을 모색하였다. 인구 유입 부문과 정주환경 개선, 고용 및 경제·산업 부문, 보건·복지 및 교육·문화 부문별로 강원도 지역소멸 대응 방안을 제시하고, 유형별 전략 방안으로는 유아숲체험원 조성, 휴양단지개발을 통한 인구구조 변화, 도심지 재생, 빈집 활용 방안, 소규모 시범학교 모델, 사회복지시설의 소규모 다기능화, 귀농·귀촌단지 조성, 농업지역협력대 시범사업, 인구감소에 강한 커뮤니티 조성, 두지역 거주를 통한 수도권 별장인구 유치, 아이안전 부모안심 양육마을 조성을 제시하였다.

인구감소 지역의 지역쇠퇴 대응을 위한 정책과제 연구(기정훈, 2011)는 인구감소에 따른 지역쇠퇴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이에 대한 대응방안과 정책적 제안

을 마련하고자 인구감소 및 지역쇠퇴의 주요 요인 및 문제점, 인구감소 대응 정책 및 문제점을 분석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특별법(가칭)’ 제정, ② 인구쇠퇴 유형별 지원법 마련, ③ 지역별 경제 및 산업기반 연구, ④ 인구감소지역의 규모 및 산업기반에 따른 차별적, 선별적 지원, ⑤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지원창구 일원화 및 재원 마련, ⑥ 교육 및 의료기관 지원정책을 지역 활성화를 위한 정책과제와 입법적 과제로 도출하였다.

〈표 2-4〉 연구과정별 도출된 문제점과 해결 방안

	인구감소 요인 및 문제점	인구감소대응 정책 및 문제점	정책적 시사점 (정책과제와 입법적 과제)
선행 연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저출산 및 고령화 구도심 인구유출 국가정책적 요인 산업재구조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도시의 유형화에 따른 접근 도시재생을 위한 산업기반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구쇠퇴 유형별 지원법 마련 지역별 산업기반 연구
국내외 사례	<ul style="list-style-type: none"> 농촌지역 고령화 기반산업의 몰락(철강산업 등) 낮은 출산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도시재생을 위한 산업기반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구쇠퇴 유형별 지원법 마련 지역별 산업기반 연구
법규의 검토	<ul style="list-style-type: none"> 낙후지역의 오지, 도서, 접경 지역, 개발촉진 지구 및 기타 낙후지역으로 나누어서 지원 중앙정부의 각 부서별로 광역의 낙후지역들에 대해서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속적인 혜택 부족 지역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안됨 중복지원의 문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낙후지역에 대한 지원창구의 일원화 지속적 지원을 위한 재원 마련
통계 자료 분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시군구 별 인구감소요인의 차별성 군의 경우 인구감소의 지역 쇠퇴효과가 심각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구감소하는 군에 대한 선별 및 지원 확대 지역의 규모에 따른 차별적인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역의 규모에 따른 차별적인 지원 교육 및 의료기관 지원법 마련
설문 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역주민, 지역공무원, 중앙공무원 간의 시각차 현저 지역 간 혹은 도시 규모, 도시경제기반 별로 인구감소 요인 차이 현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일자리 창출 및 기업체 지원 유입인구에 대한 직접적, 경제적 지원 지역별 차별화된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역의 경제 및 산업기반별 차별적인 지원 인구쇠퇴 유형별 지원법 마련
심층 면접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방광역권 내에서의 주변 대도시로의 인구유출 심각 의료 및 교육시설 등 지역의 기본적인 필요조차 위협 인구감소 구의 사회적 쇠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역별 수요와 필요에 기반한 미시적 지원 지역의 정책 제안에 대한 중앙정부의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교육 및 의료기관 지원정책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

자료: 기정훈, 2011, 인구감소 지역의 지역쇠퇴 대응을 위한 정책과제 연구, p.78

2) 마을소멸 관련 연구 고찰

(1) 마을소멸 실태 및 예측 연구

지방소멸지수를 이용한 행정리 마을소멸위험 변화 분석(윤정미, 2021)에서 지방소멸 이전에 마을소멸의 중요성을 언급하였다. 기존에 제시된 지방소멸지수를 행정리 마을에 적용하여 마을(행정리) 차원의 인구특성 실태 분석, 지방소멸지수를 마을(행정리) 단위에 적용하여 마을소멸 위험 실태 분석·진단을 수행하였다. 연구 방법으로 행정리 공간데이터 구축, 행정리 인구데이터 구축, 지방소멸지수를 행정리에 적용 분석, GIS 공간분석을 수행하여 행정리 공간데이터 구축과 함께 행정리마을소멸에 대한 실태를 진단하였다.

저출생·고령화에 대응한 농어촌 행정리소멸지수 개발 및 적용(윤정미, 2021) 연구는 그동안 읍면동 단위에서 분석되었던 마을소멸의 실태의 모순에 대해 밝히고 마을단위에 적용할 수 있는 행정리 소멸지수를 개발하였다. 연구 목적은 지방소멸지수가 아닌 행정리소멸지수를 개발하고, 개발된 지표를 정책이 투입되는 최소 단위인 마을(행정리) 공간단위에 적용하는 것이다. 주요 연구 내용으로는 소멸관련 문헌 고찰 및 빅데이터 분석, 전문가 인터뷰조사 등을 통해 마을소멸과 관련된 지표를 선정하고 행정리소멸지수를 개발하여 행정리 단위에 적용·검증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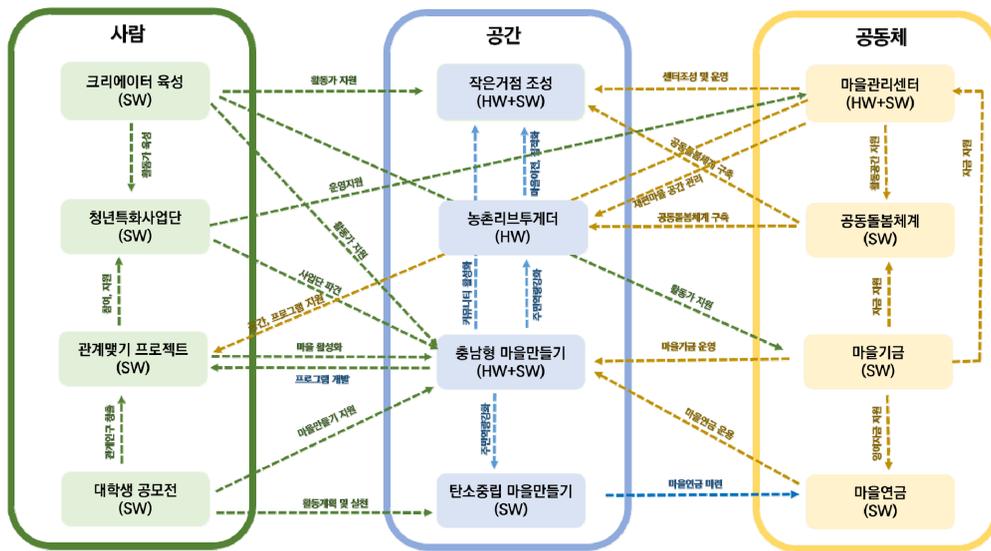
한계마을 특성분석 및 변화예측: 충청남도를 사례지역으로(윤정미, 김동한, 2017) 연구는 한계마을에 대한 개념 고찰을 통해 한계마을을 총인구 20명 이하이면서(과소화) 65세 이상이 50 퍼센트 이상인(고령화) 마을을 한계마을로 정의하였다. 한계마을의 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공간적 특성요인을 분석하고 향후 한계마을로의 전이 가능성이 높은 지역 등을 사전에 예측하여 이를 정책적 대응방안 마련에 활용하기 위한 시사점 등을 제시하였다.

충남 기초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방안 연구 I - 마을차원의 기초공간데이터 구축(윤정미, 2014) 연구는 마을 연구를 위한 소지역 기초 공간데이터가 부족한 한계를 지적하며 실효성 있는 농촌 계획 수립을 위해 전국 최초로 마을단위인 행정리와 자연마을의 공간경계 데이터를 구축하였다. 또한 2014년 기준 행정리와 자연마을의 실제 거주 인구와 65세 이상 실제 거주 인구, 75세 이상 실제 거주 인구 데이터를 구축하였다. 이를 통해 과소마을 도출, 고령화가 심각한 마을 도출 그리고 과소고령마을인 한계마을 현황을 분석하였다. 구축된 공간데이터와 통계청 센서스 원시자료를 연계하여 자연마을과 행정리의 인구, 고령화비율, 인구구조, 가구수, 건축연도, 노후도 등 마을의 실태를 분석하였다.

충남 자연마을(소지역) 차원의 인구·가구·주택 특성분석 및 정책과제(윤정미 외, 2016) 연구는 2014년에 구축된 행정리와 자연마을 경계, 그리고 통계청 센서스 속성자료를 연계 분석하였다. 2000년, 2005년, 2010년 센서스 자료의 인구, 가구, 주택의 일반현황을 파악하고, 이 자료와 2014년 기 구축된 충남 소지역 경계 자료와 연계하여 시계열 변화 특성을 분석하였다. 특성을 도출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통계적 탐색적 분석, 증감지역에 따른 시계열 특성분석, Hot Spot 분석을 통한 특성분석, 무게 중심점(gravity center) 공간패턴분석을 통한 특성분석, 표준 거리(standard distance)는 통계 분석을 수행하였다. 또한 정책적 활용성 분석을 위해 기존의 한계마을 기준인 과소인구와 고령화비율 이외의 변수를 선정하여 새로운 한계마을 기준 정립 및 재설정을 시도하였다. 한계마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도출되는 변수는 주거환경부문의 총가구수와 노후주택수, 주민역량 및 인구잠재력부문의 생산가능인구, 가임여성비율, 고학력자수 그리고 소외계층부문의 독거노인수와 1인가구수의 7개 변수가 선정되었다.

(2) 마을소멸 대응 방안 연구

지방소멸위기에 대응한 충남 농어촌 과소지역 활성화 전략; 사람, 공간, 공동체를 중심으로(유학열 등, 2022) 연구는 지방소멸 위기에 놓여 있는 충남 농어촌 과소지역이 대응해 나가야 할 구체적 전략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사람, 공간, 공동체 3가지 측면에서 농어촌 과소지역 활성화 전략을 제시하였다. ‘사람’ 부문은 충남 과소지역의 인적 역량강화 전략, 관계인구 창출 및 확대 전략. ‘공간’ 부문은 안정적인 정주체계의 구축 및 농촌공간의 재생·재편 전략, 과소지역 유희공간 효율적 관리 전략, ‘공동체’ 부문에서는 마을기금연금 관리 및 창출 지원 전략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공동체 활성화 전략을 제시하였다.



[그림 2-2] 충남 농어촌 과소지역 부문별 활성화 전략

자료: 유학열 등, 2022, 지방소멸위기에 대응한 충남 농어촌 과소지역 활성화 전략; 사람, 공간, 공동체를 중심으로, p.132

인구감소시대에 대응한 지방정부의 농촌지역정책 구상(조영재 등, 2020)은 인구감소시대 지방소멸 위기 및 지방분권 등의 이슈에 대응해 충남도의 새로운 농촌지역정책을 구상하고 추진전략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새로운 농촌지역정책 구상의 세부전략으로 농촌지역 공간 및 기능의 재편 방안으로는 ① 소멸위험지역의 지속적 모니터링과 관리, ② 농촌지역 공간체계 재편, ③ 농촌지역 기능 재편(기능 복합화, 특화기능 강화, 서비스 연계)을 제시하였다. 농촌지역 마을(행정리) 차원의 대응 전략으로 ① 마을(행정리) 차원의 공간 및 기능 재편 전략, ② 마을소멸지수 개발 및 배후마을 연구사업 추진, ③ 마을(행정리) 차원의 DB 구축 및 시계열 모니터링을 제시하였다. 커뮤니티 재생 전략으로 ① 농촌마을 자치기능 강화, ② 외부 주체와의 인적 네트워크 강화, ③ 농촌마을 내 사회적자본 형성, ④ 고령자 삶의 질 서비스 지원 강화를 제시하였다.

마을(행정리) 차원의 공간 및 기능 재편	1. 과소고령마을에 인접된 활성화된 마을과의 재편 정책 2. 작은거점 발굴을 통한 공간 및 기능 재편 정책 3. 중간거점 기능 강화 정책
마을소멸지수 개발 및 배후마을 연구사업 추진	1. 충남 마을(행정리) 차원의 마을소멸지수 개발 및 관리 2. 과소고령마을과 한계마을에 대한 연구 사업 추진
마을(행정리) 차원의 DB 구축 및 시계열 모니터링	1. 시군 차원의 대응 연구 2. 행정리 차원의 공간 기능 DB 구축 및 분석 3. 시계열 실거주 인구 조사 및 마을 모니터링 DB 구축

[그림 2-3] 마을 차원의 대응전략

자료: 조영재 등, 2020, 인구감소시대에 대응한 지방정부의 농촌지역정책 구상, p.210

과소지역 농촌마을의 공간적 재편에 관한 정책사례 및 주민의식조사 연구(조영재·윤정미, 2018)는 과소지역 농촌마을의 다양한 공간적 재편방법에 대해

고찰하고, 관련정책 사례연구와 주민의식조사 연구를 바탕으로 공간적 재편의 적용가능성 검토 및 정책과제를 제언하였다. 과소지역 농촌마을의 공간적 재편과 관련된 정책추진의 6가지 기본방향을 제시하고, 향후 정책 과제로는 ① 농촌마을 모니터링·진단, 관리체계의 구축, ② 경관저해요소에 대한 강력한 규제 강화, ③ 마을 유희자원에 대한 활용성 제고, ④ 마을역사 아카이브의 구축, ⑤ 일부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공간적 재편부터 적용 확대를 제시하였다.

(3) 한계마을 정의 및 대응방안 연구

① 한계마을의 정의

한계마을은 일본 사회학자 오노아키라에 의해 처음 제기된 개념으로 65세 이상 고령자가 50% 이상을 넘어 마을 공동생활 유지가 어려운 상태에 놓인 마을이다. 그는 마을 한계 프로세스를 사람의 공동화, 마을의 공동화, 한계마을화, 소멸에 이르는 단계를 제기하였다. 즉, 한계마을이란 마을의 기능이 한계에 달해 소멸 가능성이 높은 마을임을 의미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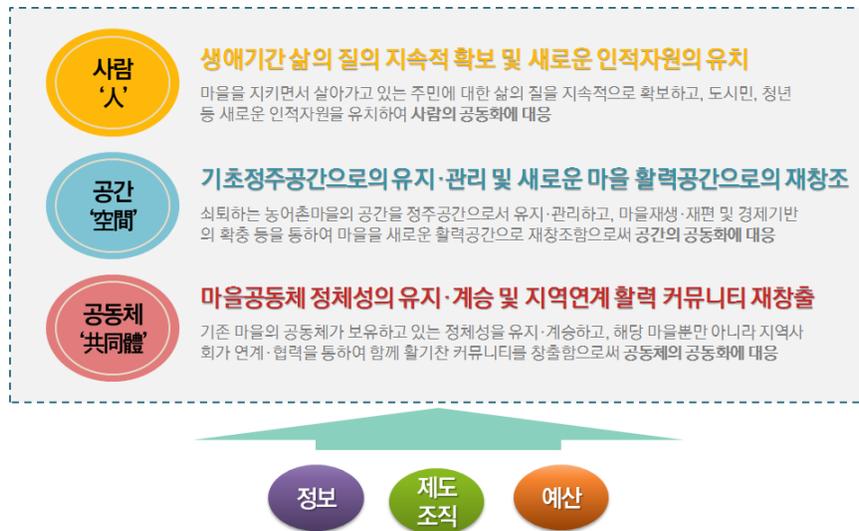
우리나라의 경우 2010년 초부터 한계마을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었고 저출산·고령화로 인해 마을 한계에 달해 소멸할 수 있다는 위기 의식이 고조되고 있는 실정이다. 한계마을 선정을 위해 다양한 기준이 논의되나 본 원의 연구에서는 충청남도 내 마을 인구 절반이 65세 이상이면서 마을주민수가 50명 이하인 마을이면서(사람의 공동화), 경제적 공동화와 공동체의 공동화가 진행되는 마을을 한계마을로 정의하고 있다.

즉, 과소고령화가 진행되어 마을이 경제적 공동화와 공동체 기능이 유지되기 어려운 상태의 마을이 한계마을이다.

② 한계마을 대응 방안 연구

한계마을정책 개발을 위한 최근 일본의 한계집락 관련 논의 및 정책 동향 연구(조영재 등, 2018)에서 일본 한계마을 정책의 배경과 정책에 대해 제시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국내 도입방안 및 존속마을, 준한계마을과 한계마을로 유형화하여 정책의 기본 틀을 제시하였다. 제시된 정책 방향을 살펴보면, '존속마을'은 '진흥정책'을 중심으로 추진하고, '준한계마을'은 '재생정책'을 중심으로 추진하며, '한계마을'의 경우는 재생정책과 재편정책, 소멸정책을 제시하였다. 또한 가장 선행되어야 할 점으로는 해당 마을 주민을 포함한 전 국민적인 합의 및 공감대 형성에 대해 강조하였다.

서천군 한계마을 실태분석 및 유형별 정책 대응방안(충남연구원, 2018) 연구는 서천군 전체 316개 행정리(마을)를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한계마을 이론 고찰 및 국내외 사례 분석, 서천군 현황 분석을 바탕으로 서천군만의 한계마을 기준을 마련하여 현황조사와 주민의식조사를 바탕으로 유형별 대응 정책 방안을 제시하였다. 한계마을의 유형을 일반(존속)마을/준한계마을/한계마을의 3가지로 구분하고, 정책 기본방향과 추진전략을 제시하였으며, 한계마을의 정책 추진전략으로는 ① 생애기간 삶의 질의 지속적 확보 및 새로운 인적자원의 유치(사람), ② 기초정주공간으로의 유지·관리 및 새로운 마을 활력공간으로의 재창조(공간), ③ 마을공동체 정체성의 유지·계승 및 지역연계 활력 커뮤니티 재창출(공동체), ④ 관련 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행·재정 지원시스템의 마련(추진체계)을 제시하였다.



[그림 2-4] 정책 추진전략

자료: 충남연구원, 2018, 서천군 한계마을 실태분석 및 유형별 정책 대응방안, p.139

농촌마을 과소화 고령화에 대응한 마을재편 방안 연구(조영재 등, 2014)는 마을의 행정적 재편, 기능적 재편, 공간적 재편의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 커뮤니티 연합 및 통합형, 행정구역 합병 또는 편입형, 마을리모델링 및 커뮤니티 재편형, 집단 이전 또는 일부 이전형 등 4가지 유형별 마을재편 방안을 제시하였다.

과소화 고령화에 대응한 '한계마을정책' 도입을 위한 기초연구(조영재 등, 2013)는 한계마을정책을 '존속마을', '준한계마을', '한계마을'로 유형화하여 유형별 기본방향을 제시하였다. 존속마을은 '지속가능한 유지·발전 및 거점기능 강화', 준한계마을은 한계마을로의 진행을 방지하기 위한 인구유치, 정주여건 개선, 공동체 활성화', 한계마을은 '마을재생 및 재편'으로 설정하였으며, 각 한계마을의 유형에 따라 차별화된 정책이 추진되어야 함을 제언하였다.

〈표 2-5〉 한계마을 유형별 정책 방향 및 주요 정책(안)

구분	정책 방향	주요 정책(안)
존속 마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속가능한 유지 발전 • 거점기능 강화 • 경제 및 공동체 활성화 • 핵심지역으로의 개발 • 소생활권 거점개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광역 연계개발 정책 • 농어촌자원 복합사업화 지원(경제기반 활성화) • 읍면소재지 종합정비 • 권역단위 종합정비 • 서비스기반(H/W) 확충
준한계 마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책적 핵심 대상마을 • 위기의식 인지를 통한 주민 주도 노력 • 인구유치 및 인력육성 • 정주여건 개선 및 농어촌 서비스 확충 • 경제기반 확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민 및 지역사회 참여에 의한 마을만들기 • 농어촌 서비스(S/W) 확충 • 귀농·귀촌 인구유치 • 농업후계자 육성 • 농어촌 지역개발사업의 집중 추진 • 마을 한계화 억제전략 • 직접지불제도의 활용 및 확충
한계 마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계마을정책의 중심대상 • 투자 대비 성과 효과 기대 어려움 • 가능한 범위 내에서 마을 재생과 재편을 도모(불가피할 경우 소멸 검토) • 새로운 커뮤니티 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례제정 및 마을재생 • 마을 재편전략(행정적·기능적·공간적 재편) • 신규 커뮤니티 조성(새로운 인구유치, 이주) • 마을소멸전략

자료: 조영재 등, 2013, 과소화·고령화에 대응한 ‘한계마을정책’ 도입을 위한 기초연구, p.219

3) 행정리 마을 단위의 마을소멸 관련 연구⁷⁾

연도	내용
201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행정리 마을 자원조사 - 충청남도 살기 좋은 희망마을 만들기 추진의 일환으로 16개 시·군 4,511개 마을(행정리)에 대한 자원조사를 행정의 주도로 진행(실제, 3,824개 마을 조사) - 인구 및 가구수, 전입인구, 마을기금 및 경제조직, 마을리더 및 주민 교육, 마을사업 현황 등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였으나, 행정계통을 통한 조사체계의 문제로 결과에 대한 낮은 신뢰도로 활용도 미흡

7) 조영재 윤정미 한승석, 2019, 인구감소시대에 대응한 마을 모니터링 체계 구축 및 관리방안 연구, 충남연구원 전략과제, pp.4-5

윤정미, 2021, 충남 마을소멸 시계열 실태 분석 및 대응 전략 - 청양군을 대상으로 -, 충남연구원, pp.22-23

연도	내용
201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산군 한계마을 현황 및 대책과 관련된 연구(현안연구) - 주민등록인구를 중심으로 개략적인 한계마을을 파악하였으나 시계열 마을 데이터의 부재로 변화실태나 전망을 진단하기에는 한계점 존재 확인
201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계마을정책 도입을 위한 기초연구(전략연구) - 금산군의 농촌마을을 대상으로 세부적인 현장연구를 진행하였으며, 자연마을 단위에서의 마을소멸 및 소멸 가능성 파악 - 주민등록인구수와 실거주 인구수의 큰 차이를 확인하였으며, 체계적인 마을 실태 파악 및 관리를 위해서는 실거주 인구수에 대한 시계열적 자료구축이 필수적임을 확인
201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4,242개 행정리 및 10,830개 자연마을 단위 공간경계 구축 및 실제 거주인구 관련 속성데이터 구축(전략연구) - 전국 최초로 연구진행 및 다양한 분석결과 도출(정책지도, 지도로 보는 충남 농어촌 마을 이야기 등의 발간으로 정책관련 도민 소통 제고) - 자료조사 관련 체계적인 행정시스템 부재와 관련정책 및 예산 부족의 문제 확인 - 마을이장의 이해 및 인식부족으로 신뢰성 높은 데이터 구축에 어려움 존재
201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어촌지역개발사업이 추진된 충남 농어촌 마을 실태 연구 진행(전략연구) - 농식품부 권역단위 종합개발사업이 추진된 마을에 대한 조사가 진행되었으며, 마을사업에 대한 사후관리체계나 관련 데이터 조차 구축되어 있지 않음을 확인
201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센서스 자료를 활용한 충남 자연마을(소지역) 차원의 특성분석 및 정책과제 도출 연구 진행(전략연구) - 센서스 자료를 바탕으로 시계열분석을 진행하였으나, 기본적으로 통계청의 협조를 구해 자료를 구축하기가 쉽지 않았으며, 충남 전체의 경향은 파악할 수 있었으나 실거주 인구 데이터가 없어 실제 농촌마을의 실태를 파악하기는 불가능함
201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천군 한계마을 실태분석 및 유형별 정책 대응방안 연구 용역 - 한계마을 이론 고찰 및 국내외 사례 분석 - 한계마을 기준 선정 - 서천군 한계마을 실태 및 주민의식조사를 바탕으로 유형별 대응방안 제시
201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산군 257개(행정리) 농촌마을의 공간적 재편에 관한 주민의식조사 진행(전략연구) - 농촌마을의 활성화 및 한계화의 진행 정도는 인구수, 고령화 등 정량적 지표에 기인하지 만, 반면 마을주민들의 마을활성화에 대한 의지, 마을소멸에 대한 인식, 정주민족도 등 정성적 지표와의 유의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 - 즉, 정량적 지표와 함께 정성적 지표의 조사와 시계열적 자료구축도 필요할 것으로 판단
201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구감소시대에 대응한 마을 모니터링 체계 구축 및 관리방안 연구 - 시계열적으로 변화하는 마을단위의 상황을 정기적으로 조사하고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마을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고 관리방안을 마련하여 관련 정책의사결정의 기초자료로 활용하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다. - 마을단위의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고 이러한 체계를 운영관리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

연도	내용
20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구감소시대에 대응한 지방정부의 농촌지역정책 구상(충청남도를 중심으로) - 인구감소시대 지방소멸 위기 및 지방분권 등의 이슈에 대응한 충남도의 새로운 농촌지역 정책을 구상하고 세부 추진전략을 마련하는 데 목적 - 첫째, 인구감소시대의 이슈와 관련하여 충남의 지방소멸 위기지역 및 과소·고령마을 등의 실태를 조사 분석하여, 충남의 상황을 명확히 진단·망 - 둘째, 지방분권의 측면에서 충남도의 정책 현황을 점검하고, 지방정부 스스로가 인구감소시대 지방소멸 등에 대응할 수 있는 충남도의 새로운 농촌지역정책 구상 - 셋째, 새로운 농촌지역정책 구상의 세부전략으로 농촌지역 공간 및 기능의 재편 방안과 농촌지역 커뮤니티 재생 방안 제시
202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저출생·고령화에 대응한 농어촌 행정리소멸지수 개발 및 적용 - 본 연구는 농어촌 마을의 저출생·고령화 대응 정책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연구 - 첫째, 지방소멸지수가 아닌 마을소멸지수를 개발하고 - 둘째, 개발된 지표를 정책이 투입되는 최소 단위인 마을(행정리) 공간단위에 적용

4) 연구의 차별성

최근 연구를 살펴보면 지방소멸에 대한 연구, 인구감소에 대응하는 인구정책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지방소멸에 대한 논의 전에 마을소멸에 대한 논의가 제시되어야 하나 마을소멸에 대한 실태 분석 등이 거의 없는 실정이다. 2021년 충남연구원 전략과제로 마을소멸을 진단할 수 있는 행정리마을소멸지수가 개발되었기에 이를 기초로 본 연구에서는 마을소멸 분석 및 진단을 시계열로 수행하기에 선행연구와 차별성이 있다. 또한 마을차원의 소멸 대응방안을 제시하는 점에서 타 연구와 차별성이 있다.

2. 마을소멸지수(행정리소멸지수) 고찰⁸⁾

1) 마을소멸지수⁹⁾ 산정 개념 모형

마을소멸지수는 자연적 인구 증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과 사회적 인구 증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그리고 마을소멸 속도를 조절(마을소멸 현 상태 진단)하는 지표를 포함한다.

마을소멸지수는 ‘(인구 증가에 영향을 미치는 지표/인구 감소에 영향을 미치는 지표) × 마을소멸 속도 조절 지표(마을소멸 현 상태 진단 지표)’이며, ‘인구 증가에 영향을 미치는 지표’가 ‘인구 감소에 영향을 미치는 지표’보다 적은 상황이면서 마을소멸 속도 조절 지표(마을소멸 현 상태 진단 지표)가 1 이하일 경우 마을이 소멸 또는 소멸 진입(마을소멸지수 1.0 이하)하는 것으로 정의한다. 즉, 마을소멸지수는 (20-44세 젊은 여성인구수 + 전입인구수)/70세 이상 인구수 × 인구수(구간별 가중치)로 도출한다.

$$\frac{20-44세 여성인구 수 + 전입인구수}{70세 이상 인구수} \times \text{인구 가중치}$$

70세 이상 인구 수: 자연적 인구 감소 영향 요인

20-44세 여성 인구 수: 자연적 인구 증가 영향 요인

8) 윤정미, 2021, 저출생·고령화에 대응한 농어촌 행정리소멸지수 개발 및 적용, 충남연구원, pp.64-67

9) 기존 연구의 “행정리소멸지수”를 본 연구에서는 “마을소멸지수”로 명명함

전입인구 수: 사회적 인구 증가 영향 요인

인구 가중치: 마을소멸 속도 조절 지표, 마을 현 상태 진단 지표

인구 가중치 단계:

인구 구간	가중치
50명 미만	0.5
50~100	1
100~200	1.5
200~500	2
500명 이상	2.5

(20~44세 여성인구수+전입인구수)/70세 이상 인구수 값이 1 이하이고 인구 가중치(인구수가 50-100명 사이)가 1인 값보다 적으면 마을이 소멸 진입 또는 마을소멸위기 지역인 것으로 판단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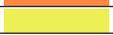
〈표 2-6〉 마을소멸지수별 구분

구분		범례	지수
소멸 위기 마을	마을소멸 고위기		0.2 미만
	마을소멸 위기		0.2~0.5 미만
마을소멸 진입			0.5~1.0 미만
마을소멸 보통			1.0~1.5 미만
마을소멸 낮음			1.5~2.0 미만
마을소멸 매우 낮음			2.0 이상

※ 기존의 지방소멸지수(이상호)

$$\text{지방소멸지수} = \frac{\text{20-39세 여성 인구 수} \times \text{자연적 인구 증가 영향 요인} + \text{출산 관련 지표}}{\text{65세 이상 인구 수} \times \text{자연적 인구 감소 영향 요인} + \text{사망 관련 지표}}$$

지방소멸위험지수 기준(이상호, 한국의 지방소멸 2018, 한국고용정보원, p.9)

구분		범례	지수
소멸위험지역	소멸고위험		0.2 미만
	소멸위험진입		0.2~0.5 미만
주의단계			0.5~1.0 미만
소멸위험보통			1.0~1.5 미만
소멸위험 매우 낮음			1.5 이상

2) 선정 지표 설명

(1) 인구수 지표

인구수 지표는 농어촌 소멸의 대표적 이론인 한계마을을 선정하기 위해 과소마을과 고령화 마을을 선정하고 있으며 과소마을은 거주인구 50명 이하, 인구 30명 이하 등의 기준이 사용되고 있다. 이에 마을소멸지표를 도출함에 있어 인구수에 대한 지표가 선정되었다.

소멸은 거주 인구가 0명을 의미하고 최근 10년 과소고령을 분석하였을 때 50명 이하 마을이 소멸된 사례가 없다. 이에 마을에서는 거주 인구수가 지표로 포함되어야 하고 인구 구간에 따른 가중치가 설정되어야 한다. 이에 전문가 5인의 의견 수렴을 통해 인구수에 대한 가중치를 0-50명 미만, 50-100명 미만, 100-200 미만, 200-500명 미만, 500명 이상의 5개 구간으로 나누어 0.5~2.5까지의 가중치를 설정하였다. 이 구간 설정은 일반적으로 행정리 인구 구간을 분석할 때 사용되는 일반적인 구분이다. 인구 50-100명이 거주하는 마을을 인구 유지 1의 가중치를 부여하여 구간을 설정하였다. 이는 앞장의 총인구 분석에서 가장 많은 인구가 분포된 구간이기에 이를 인구 유지 구간으로 설정하였고, 이 구간보다 인구가 적을 경우 소멸 가능성이 있고 이 구간보다 인구가 많을 경우 소멸 가능성에서 거리가 멀어지는 가중치를 부여하였다.

〈표 2-7〉 인구 구간별 가중치 설정 및 기준 근거

총인구수	가중치	기준 근거
50명 미만	0.5	
50~100명	1	행정리 인구 분석 시 가장 많이 인구가 분포된 구간임 ¹⁰⁾
100-200명	1.5	
200-500명	2	
500명 이상	2.5	

(2) 20-44세 젊은 여성 인구 지표

기존의 지방소멸지수에서 사용되는 '20-39세 젊은 여성 인구수'는 출산이 가능한 여성을 의미하고 있다. 최근 의료 기술의 발달 등으로 인해 출산 가능 인구 연령이 높아지고 또한 늦은 결혼으로 인해 출산 연령도 고령화되고 있기에 젊은 여성인구 연령을 '20-44세'로 확대하여 선정한다.

(3) 70세 이상 고령인구수

기존의 지방소멸지수는 65세 이상 고령인구수에 대한 지표가 사용되는데 이는 사망에 영향을 미치는 지표이다. 2019년 기준 한국인의 기대수명(사망수명)은 83.3세로 수명이 늘어나고 있고, 농어촌은 60대가 청년회장을 하고 70세가 넘어서도 생산활동을 활발히 하고 있다. 정부에서도 고령인구 연령을 상향 조정(경로우대 제도 기준 연령 상향)하는 논의를 시작하기에 고령인구 연령을 70세로 확대하여 사용한다.

(4) 전입인구수

농어촌은 인구감소,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지방소멸, 마을소멸에 대응하기 위해 귀농귀촌 정책이 활발히 진행되어 인구를 유입시키고 있다. 외부인이 유입되는 마을의 경우 마을 내 토지 확보가 가능하고 마을 주민들이 외부인에 대한 개방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하고 이로 인해 소멸을 늦추는 영향요인으로 작용되기에 '전입인구수' 지표가 선정되었다.

10) 50명 미만 6.8%, 50-100명 미만 32.9%, 100-150명 미만 26.9%, 150-200명 미만 13.5%, 200명-500명 미만 14.6%, 500명 이상 5.3%

3) 마을소멸지수와 지방소멸지수 비교

개발된 마을소멸지수에 따라 충청남도 15개 시군 행정리 마을 구분을 살펴 보면 마을소멸 고위기 7.7%(339개), 마을소멸 위기 24.4%(1,071개), 마을소멸 진입 30.0%(1,320개)로 도출되었으나, 기존 지방소멸지수를 행정리에 적용한 결과는 소멸고위험 71.1%(3,124개), 소멸위험진입 19.4%(851개), 주의단계 4.4%(192개)로 도출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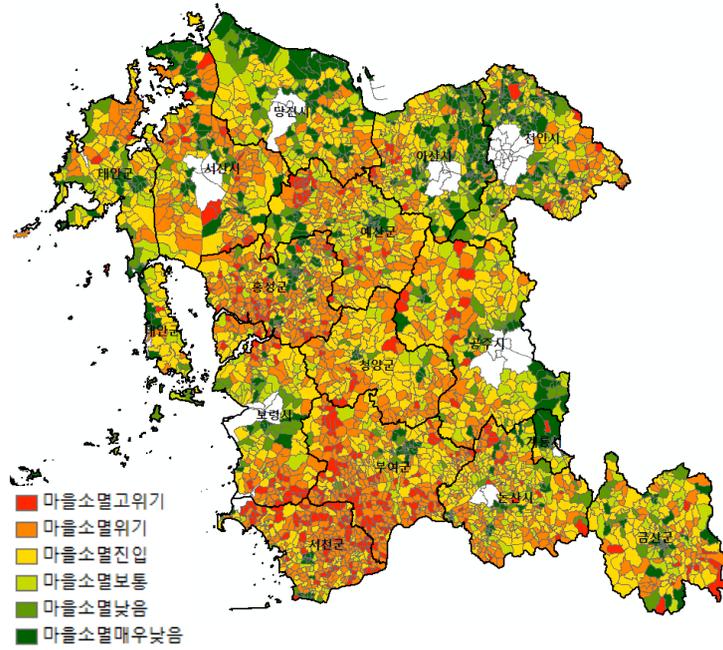
마을소멸지수를 적용하여 마을소멸위기 정도를 분석한 결과 소멸 대응이 시급한 마을에 대한 변별력 등이 가능하였으나, 지방소멸지수를 적용한 결과 마을 대부분이 소멸위험으로 도출되어 소멸 대응 마을 도출 등을 위한 정책 의사 결정 지원이 불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2-8〉 마을소멸지수별 행정리 마을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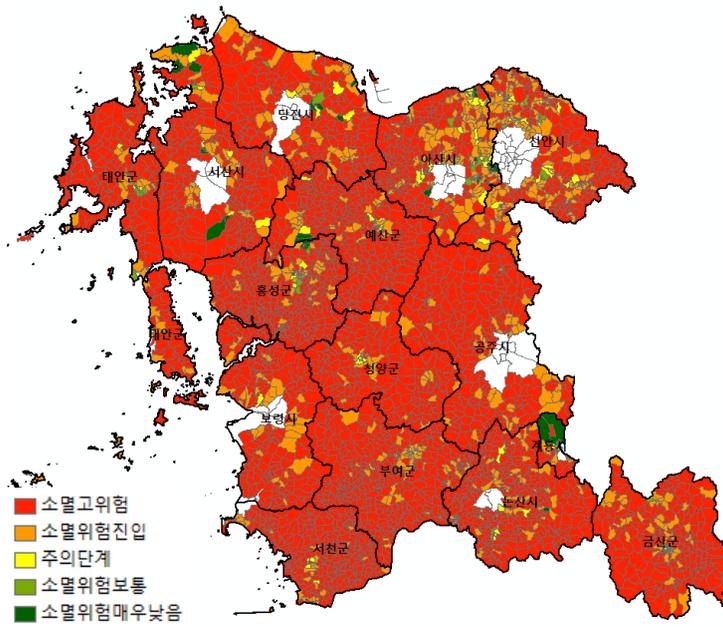
구분		지수	마을수	비율
소멸 위기 마을	마을소멸 고위기	0.2 미만	339	7.7%
	마을소멸 위기	0.2~0.5 미만	1,071	24.4%
마을소멸 진입		0.5~1.0 미만	1,320	30.0%
마을소멸 보통		1.0~1.5 미만	542	12.3%
마을소멸 낮음		1.5~2.0 미만	267	6.1%
마을소멸 매우 낮음		2.0 이상	855	19.5%
계		-	4,394	100.0%

〈표 2-9〉 지방소멸지수별 행정리 마을 분포

구분		지수	마을수	비율
소멸위험지역	소멸고위험	0.2 미만	3,124	71.1%
	소멸위험진입	0.2~0.5 미만	851	19.4%
주의단계		0.5~1.0 미만	192	4.4%
소멸위험보통		1.0~1.5 미만	80	1.8%
소멸위험 매우 낮음		1.5 이상	147	3.3%
계		-	4,394	100.0%



[그림 2-5] 마을소멸지수 충남 분포도(2022년)



[그림 2-6] 지방소멸지수 충남 분포도(2022년)

3. 농어촌지역개발사업 고찰

1) 농어촌지역개발사업¹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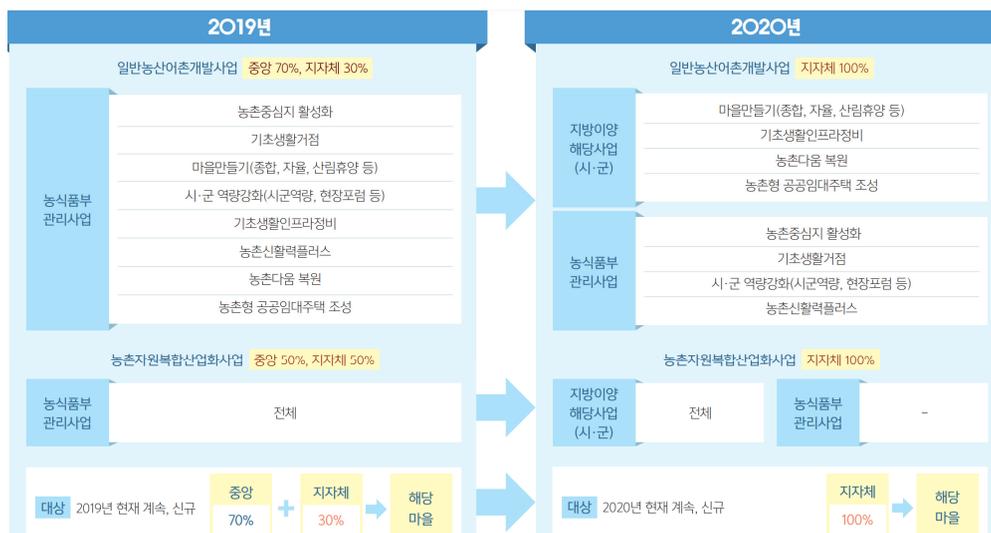
우리나라는 농산어촌 지역의 고령화와 인구감소 및 지역사회 침체 등 어려움이 가중되면서 2004년 「농림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 지역개발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였고, 이에 근거하여 2005년부터 농어촌의 지속 가능한 개발과 단순한 식량 생산공간에서 벗어나 삶과 휴양 산업이 조화된 정주 공간으로 전환하여 지역 활성화를 목적으로 ‘농어촌지역개발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다. 농어촌지역개발사업이 시작된 2005년부터 2016년까지 권역단위종합정비사업, 거점면소재지종합개발사업, 읍 면소재지종합정비사업 등을 포함하여 약 1,508개 지역에서 사업이 추진되었다. 대표적인 성과는 농어촌 지역주민의 복지 증진, 주민 생활환경 개선, 어메니티 증진, 지역특화자원을 활용한 소득기반 확충, 주민 공동체조직 구성 및 지역역량강화, 귀농·귀촌 증가 등이다.¹²⁾

- 11) 농림축산식품부, 2023, 2023년도 일반농산어촌개발 사업설명회 자료
구자인, 2021.05.14., 농촌지역개발사업, 반성없는 도돌이표 안된다, 한국농어민신문
김솔희·서교·박지영·이성우·전정배, 2020, 정부별 국정운영 방향과 농촌지역개발사업 변화 분석, 한국농촌계획학회, 26(1), pp.123-136
김경민, 2020, 지방재정 이양에 따른 변화와 농촌협약제도, 진안군마을만들기지원센터 마을광장 (66), p.3
김형주, 2021, 자치분권시대의 주민참여형 농촌지역개발사업 추진방안
- 12) 신병건, 2021, 농어촌지역개발사업에 대한 성과 및 만족도 분석: 금성산성·금안·돈지권역 사업을 사례로, 전남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pp.1-2

2018년 8월 「자치분권 종합계획」을 수립하였고 2019년 4월 '20년 균특회계 예산편성으로 10개 부처, 3개 청의 39개 세부사업(110개 내역사업)을 지방에 이양하기로 결정하였다.

기존의 농식품부 주도의 거점 조성 관련 사업은 유지되고, 지역밀착형 사업인 마을만들기사업은 지자체로 이양되었다. 농식품부 사업은 농촌중심지활성화(150억원±알파), 기초생활거점육성(40억원±알파), 농촌신활력플러스(70억원), 그리고 시군 역량강화(3억원±알파) 4개 사업만 남았다. 지자체 이양 사업은 마을만들기, 기초생활인프라 정비, 농촌다움 복원, 농촌현장포럼, 농촌형공공임대주택 시범사업, 농촌재능나눔 등 약 4,387억 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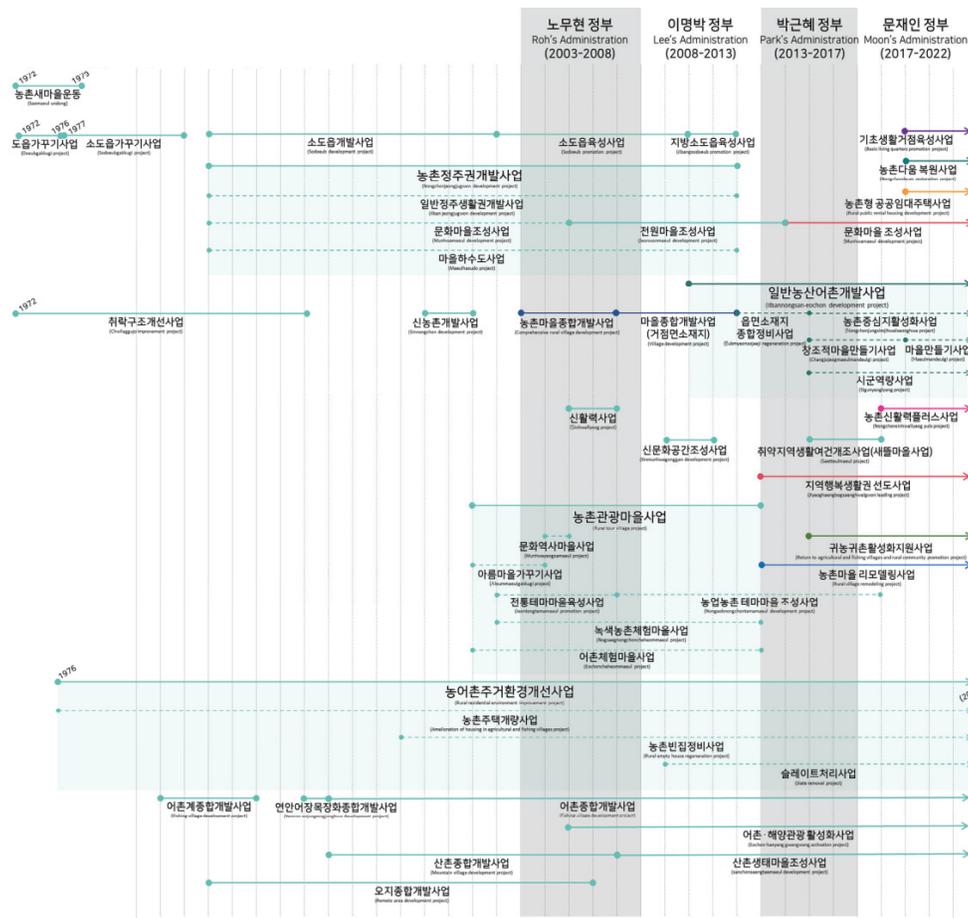
농식품부 이양 사업 중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과 농촌자원복합산업화사업이 마을만들기와 관계된 사업이다.



[그림 2-7] 지방이양사업 변화

자료: 김경민, 2020, 지방재정 이양에 따른 변화와 농촌협약제도, 진안군마을만들기지원센터 마을광장 (66), p.3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은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과 기초생활거점, 마을만들기 (종합, 자율, 산림휴양 등), 시군 역량강화(시군역량, 현장포럼 등), 농촌다움 복원사업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 중 마을만들기와 농촌다움복원사업 등이 지방(시·군)으로 이양되었다. 농촌자원복합산업화사업은 농촌의 6차산업과 관련된 사업들로 이루어져 있으며, 전체사업이 광역자치단체(도·시)로 이양되었다.



[그림 2-8] 역대 정부의 농촌개발사업 변천 과정

자료: 김솔희 외, 2020, 정부별 국정운영 방향과 농촌지역개발사업 변화 분석, 한국농촌계획학회, 26(1), p.131

2)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¹³⁾

(1) 개요 및 추진방향

농촌지역개발사업의 많은 사업 중 2010년부터 시작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이 가장 대표적이며¹⁴⁾,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은 농산어촌지역 주민의 소득과 기초생활수준을 높이고, 농산어촌의 어메니티 증진 및 계획적인 개발을 통하여 농산어촌의 인구 유지 및 지역별 특화발전을 목적으로 한다.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지역 간 생활SOC 시설 공급 격차를 해소하고, 주민생활과 밀접한 기초생활 서비스 조성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예산은 농촌협약을 통해 패키지 지원한다. 농촌협약은 농촌의 정주여건 개선, 지역 공동체 활력 제고 등 공동의 정책 목표 달성을 위해 농식품부와 지자체가 협력적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이에 필요한 사업을 패키지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2)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유형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은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일반형, 테마형),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 시군역량강화사업 3가지와 2022년에 선정 완료된 농촌신활력플러스 사업이다.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일반형은 농촌중심지의 서비스 공급 기능 확충과 함께 하위 거점, 배후마을로의 서비스 제공 및 전달 기능을 확대하는 사업이다. 읍면 소재지에 서비스 공급 거점 조성을 위한 생활 SOC 시설 확충, 서비스 공

13) 농림축산식품부, 2023, 2023년도 일반농산어촌개발 사업설명회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2022, 농촌 신활력플러스사업 설명 자료

14) 구자인, 2021.05.14., 농촌지역개발사업, 반성없는 도돌이표 안된다, 한국농어민신문
김솔희·서교·박지영·이성우·전정배, 2020, 정부별 국정운영 방향과 농촌지역개발사업 변화 분석, 한국농촌계획학회, 26(1), pp.123-136

급 및 배후마을로의 서비스 전달을 위한 시설 및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테마형은 읍면소재지의 유희시설을 활용하여 서비스를 공급하는 거점 조성사업이다.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은 읍면소재지(1, 2 계층 제외)에 서비스 공급 거점 조성을 위한 생활 SOC 시설 확충, 서비스 공급 및 배후마을로의 서비스 전달을 위한 시설 및 프로그램 등을 지원한다. 시군역량강화사업은 지역 주도의 농촌지역개발 추진 및 공동체 활성화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은 지역에 산재한 유무형의 자원과 민간조직을 활용한 특화산업 육성, 공동체 활성화 등으로 농촌의 자립적 성장기반 구축을 목적으로 한다. 특히, 민간 추진주체 및 활동가 등 지역의 인적자원 양성에 중점을 둔다. 참여정부 신활력사업 후속인 '농촌 신활력플러스사업'은 2018년~2022년까지 100개소, 7,000억원(국비 70%, 지방비 30%) 선정·추진되었다.

〈표 2-10〉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유형 및 내용

사업유형		지원요건	지원한도 사업기간	사업내용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	일반형	일반농산어촌지역 1·2계층 읍·면	150억+ α 이하 5년 이내	농촌중심지인 읍·면 소재지에 서비스 거점지구를 조성하기 위해 농촌형 생활 SOC 복합 센터를 조성하고, 서비스 공급 기능 시설 확충뿐 아니라 배후마을로의 서비스 전달기능을 확대함으로써 농촌지역 주민 전체의 삶의 질을 개선
	테마형	일반농산어촌지역 전체 읍·면지역	5억 이하 2년 이내	
기초생활거점조 성사업		일반농산어촌지역 1·2계층 외 읍·면	40억 이하 5년 이내	
시군역량강화사업		일반농산어촌지역 전체 시·군(123개)	3억+ α 이하 1년 이내	시군역량강화사업을 통해 주민, 중간지원 조직, 지자체 담당자의 역량 강화 및 완료 지구 사후관리, 활성화 프로그램운영 등을 위한 S/W 사업을 지원
농촌신활력 플러스(~2022)		일반농산어촌지역 전체 시·군(123개)	70억 이하 4년 이내	지역의 유무형 자원을 활용한 신상품 개발 및 상품화, 가공시설·장비 개선, 창업 및 지역주민 커뮤니티 공간 등 지원

(3) 일반농산어촌개발 기능별 사업 내용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을 기능별로 구분하면 기초생활기반확충, 지역역량강화 등으로 구분한다. 기초생활기반확충의 세부사업으로는 보육, 교육, 문화체육, 복지, 보건의료, 교통, 주택 및 거주환경개선, 지역경제활성화, 재해안전으로 구분되며, 지역역량강화의 세부사업으로는 교육훈련, 지역활성화이다.

농식품부에서 제시한 사업 예시는 다음과 같다.

〈표 2-11〉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의 기능별 구분

구분	세부사업	사업 내용 예시
기초 생활 기반 확충	보육	공동육아센터·놀이방, 아이돌봄센터, 국공립어린이집 증축·리모델링
	교육	도서관, 노인교실, 다문화가족 공부방, 방과후학습방 등
	문화체육	복합문화센터, 다목적체육관, 다목적마당(예: 야외공연장, 어린이놀이터, 운동·레포츠 시설, 쉼터 등), 배후마을 연계 문화시설
	복지	주민공동이용시설(예: 작은목욕탕·찜질방, 이미용시설 등), 다목적복지시설, 복지서비스 전달시설 1)(이동식 세탁소·도서관 등) 등
	보건의료	보건소·보건지소 증축·리모델링, 다목적 의료·보건시설, 건강관리센터, 응급처치장비 등
	교통	커뮤니티 버스, 버스 승강장, 공동주차장, 교통안전환경개선, ICT 연계 교통시스템 등
	주택 및 거주환경개선	빈집 철거·정비·개축, 유휴시설 활용 임대주택 조성, 지붕 및 담장정비, 쓰레기 공동집하장 및 분리수거장, 혐오시설 철거, 수질오염 방지시설 등
	지역경제활성화	전통시장(5일장) 간판 정비·비가림시설, 공용주차장 등
	재해안전	재난대피안내시스템, 지능형 영상보안 장비(CCTV), 보안등, 공동 방역시설·장비, 범죄예방환경조성(CPTED), 우수유출저감시설(자연재해대책법 관련) 등
지역 역량 강화	교육훈련	지역리더 양성, 전문가 양성(체험지도사, 응급처치 등), 교육관련 비품·장비 구입, 국내·외 선진지 견학 등
	지역활성화	중심지와 배후마을간 연계 프로그램, 사회적경제조직 등 전문조직 발굴·육성, 공동체 조직 발굴·활성화, 지역주민 화합마당, 시설운영 활성화프로그램 등
부대 사항	기획설계 감리	기본·시행계획 수립, 건축기획·사전검토, 건축물 설계·감리, 관련 법령에 따라 시행하는 각종 인허가·조사(문화재지표조사, 환경영향평가 등) 등
	사업지원	기초계획지원단 또는 PM단 운영, 사무장·주민위원회 지원, 지역역량강화 사 전활동(교육·모임) 지원 등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2023, 2023년도 일반농산어촌개발 사업설명회 자료, p.23

3) 충남형 마을만들기사업¹⁵⁾

(1) 충남형 마을만들기사업의 목적

농촌지역 마을 주민의 소득과 기초생활 수준을 높이고, 계획적인 개발을 통하여 인구유지 및 마을 활력, 특화발전을 도모하며, 농촌마을의 정책 융복합을 통해 주민주도형 공동체 활동을 장려하고, 저출산, 고령화, 양극화 등 근본과제에 대응하는데 목적이 있다.

(2) 충남형 마을만들기사업의 주요내용

농촌 마을주민의 공동체적 삶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기초생활기반확충, 지역 소득증대, 지역경관개선, 지역역량강화사업, 시군 및 마을자율 S/W 프로그램 등을 지원한다. 사업유형으로는 마을만들기 자율개발, 종합개발 등 사업공모를 통해 추진한다. 사업기간은 3년간이며 사업비는 2억부터 10억까지 지원한다.

〈표 2-12〉 충남형 마을만들기사업

구분	자율개발		종합개발
	소규모	중규모	
지원한도 사업기간	2억원 이하 3년간	5억원 이하 3년간	10억원 이하 3년간
주요내용	프로그램 사업 중심 소규모 하드웨어 사업	중규모 하드웨어 사업 사회적경제조직 육성	마을 협력 네트워크 사업업면 사회적경제조직 육성(자율개발 주요사업 포함)
대상	충남도 15개 시군 농촌지역 마을(해양수산물 소관 일반농산어촌사업 추진 마을 제외)		

자료: 충청남도, 2021, 충남형 마을만들기사업 시행지침, p.2

15) 충청남도, 2021, 충남형 마을만들기사업 시행지침

(3) 사업 단계별 지원

신청마을은 충남형 마을만들기 단계별 지원방식을 유지해야 한다. 예비단계 일반마을은 현장포럼을 시작으로 씨앗마을, 새싹마을, 꽃마을, 열매마을 단계에 걸쳐 단계적 사업을 추진한다.

〈표 2-13〉 사업의 단계

예비단계 일반마을	1단계 씨앗마을	2단계 새싹마을	3단계 꽃마을	4단계 열매마을	
현장포럼	희망마을 선행사업	자율개발 (소규모:2억)	종합개발 (10억)	사후유지관리	
		자율개발 (소규모:2억)			자율개발 (중규모:5억)
		자율개발 (중규모:5억)			

자료: 충청남도, 2021, 충남형 마을만들기사업 시행지침, p.2

(4) 사업의 기능 구분

총사업비 20% 이상 지역역량강화 사업과 시군, 마을자율 S/W프로그램 사업을 의무적으로 추진하며 모든 개발 사업은 아래에 제시된 기능별 사업 중 3개 이상을 의무적으로 포함하여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표 2-14〉 충남 마을만들기사업의 기능별 구분

구분	세부사업	사업 내용 예시
기초 생활 기반 확충	지역 주민이 공동체적 삶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기반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마을 내 도로, 상·하수도, 배수로, 교량, 주차장 등 • 지역사회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한 다목적회관, 마을도서관, 야외공연장 등 • 지역사회 유지 및 도시민 유치 지원을 위한 기초생활 인프라 구축(빈집공유 등) • 농촌주민을 위한 작은도서관, 작은영화관, 공동생활홈 등의 생활밀착형 사업(유희시설 활용 및 리모델링)
지역 소득 증대	지역에서 생산되는 특산물의 부가가치를 높여 마을발전에 도움을 주거나, 도농교류를 통해 농촌의 다원적 가치 제고와 활력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독기반시설(특산물 가공시설, 선별·집하장, 공동저온 저장고 등) • 체험관광시설(폐교활용, 체험시설, 야영장 등) 등
지역 경관 개선	쾌적한 주거공간 조성과 농촌다운 자연경관 유지를 위한 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붕담장정비, 경관수목식재, 향토자원 등의 정비사업 등 • 마을 정비와 활성화를 위한 가로경관 개선 및 향토·전통시장 간판정비사업 등 • 안전한 마을안길, 깨끗한 하천, 소규모 근린공원, 주민 참여형 경관 가꾸기 활동 등 • 폐비닐·폐농약 용기 집하장, 둠벙 정비, 마을도랑 살리기, 마을 샘 복원 등
지역 역량 강화	기능별 사업의 추진을 위한 기본·시행계획 수립비와 부대경비 - 지역주민의 역량강화 및 주민참여 촉진을 위한 S/W 교육·훈련 프로그램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역량 강화하기 위한 교육·문화·복지·환경 등 소규모, 단기간 프로그램 사업(건강체조교실, 치매 진단·예방 프로그램, 글쓰기·독서교실, 평생학습교실, 브랜드 개발 등) • 학습동아리와 사회적경제조직 발굴 및 육성 등
시군 및 마을 자율 S/W 프로그램	창의적인 아이디어 제시 및 정책 융복합 프로그램 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빈집 정비와 마을 한달 살기, 폐선(폐광) 터널 활용 마을 공동 소득사업단 설립, 독거노인 공동생활홈(주간보호센터) 운영을 위한 사회복지 전문 법인 설립, 로컬푸드 학교급식 공급을 위한 기획생산 시스템 구축, 유희시설을 활용한 청년창업공간 제공, 마을가꾸기 및 경관환경정비 사업단 설립 등 • 마을경제 활성화 역량강화 교육 및 사회적경제조직 육성 • ‘찾아가는 마을복지 서비스’ 구축 • ‘작은 거점’ 기능 수행을 위한 마을 연계 프로그램 사업 • 마을 기반의 사회적경제조직을 육성하여 일자리 창출 • 마을공동체복지, 마을공동체농업, 마을후계자 육성 등

자료: 충청남도, 2021, 충남형 마을만들기사업 시행 지침, pp.13-15

4) 농촌자원 복합산업화 지원사업¹⁶⁾

(1) 농촌자원 복합산업화 지원 사업의 목적

사업의 목적은 농촌의 다양한 자원을 기반으로 1,2,3차 복합산업화를 촉진하고 창업 및 기업유치를 활성화함으로써 지역의 경제활동 다각화와 소득·고용 기회 증대를 도모하는 사업이다.

(2) 농촌자원 복합산업화 지원 사업의 내용

지원 내용은 농산물제조가공지원, 농산물체험전시지원, 농촌융복합산업화지원이며, 총 사업비 7,700백만원(2023년 기준)으로 보조사업자 당 총사업비 중 최대 59% 도비지원 사업이다(도비 59%, 시·군비 21%, 자부담 20%). 지원 대상은 농업인조직, 생산자단체, 농림축산물 제조가공 및 마케팅업체, 농업법인, 시장군수 등이다.

〈표 2-15〉 농촌자원 복합산업화 지원사업

사업 유형		사업량 (개소)	총사업비			
			개소당 지원금액 (최소 ~ 최대)	도비	시군비	자부담
농촌융복합산업 제품 생산기업(제조·가공)	창업	15	0.5억원 ~ 10억원	59%	21%	20%
	보육					
	육성					
	마케팅					
	식품소재 등					
농림축산식품 체험 전시지원		3	1억원 ~ 5억원			
농촌융복합산업화 지원		2	2억원 ~ 10억원			

16) 충청남도, 2023, 농촌자원복합산업화 지원사업 공모

4. 국내외 마을소멸 정책 및 사례 분석

1) 국내 정책 및 사례 분석

(1) 중앙정부의 지방소멸·인구감소 대응 정책

① 인구위기대응 TF 및 인구구조 변화 대응 방안¹⁷⁾

새정부 출범 이후 정부는 심화하는 인구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기존의 인구정책 TF를 「인구위기대응 TF」로 전환해 인구정책 추진체계를 강화하고,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 관계부처 차관회의 등을 통해 「인구구조 변화와 대응방안」을 발표하였다.

「인구구조 변화와 대응방안」은 축소사회 적응 및 미래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과제까지 아우르는 인구위기대응 종합대책으로서, 4대 분야·6대 핵심과제를 선정하여 집중 추진할 계획을 담고 있다. 정부는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적응하기 위한 4대 분야별(경제활동인구 확충, 축소사회 적응, 고령사회 대비, 저출산 대응) 대응방안을 강구하되, 특히 6대 핵심과제를 선정·집중 추진할 계획이며 6대 핵심과제를 통해 고령자 고용연장 및 복지제도 개편 등 구조개혁 과제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본격화하고, 양육·보육지원 등 기존 정책에 대한 효과성 분석을 기반으로 과감한 제도 정비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17) 기획재정부 보도자료(2022.12.28.), 인구구조 변화와 대응방안 4대분야·6대 핵심과제 선정



[그림 2-9] 인구정책 추진방향 체계도

자료: 기획재정부 보도자료(2022.12.28.), 인구구조 변화와 대응방안 4대분야·6대 핵심과제 선정, p.3

②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 및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¹⁸⁾¹⁹⁾

참여정부 출범 이후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을 제정(2005년)하고,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설치·운영(2006년)함으로써 저출산·고령화 대응에 초점을 둔 인구사회정책을 추진하였다.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1차, 2차, 3차, 4차)에 따라 중앙정부 부처 및 지자체에서 ‘인구의 자연증가’에 초점을 두어 인구감소 및 지방소멸 대응시책을 추진하였으며, 인구·사회적 측면에서 본격적인 출산장려 시책을 추진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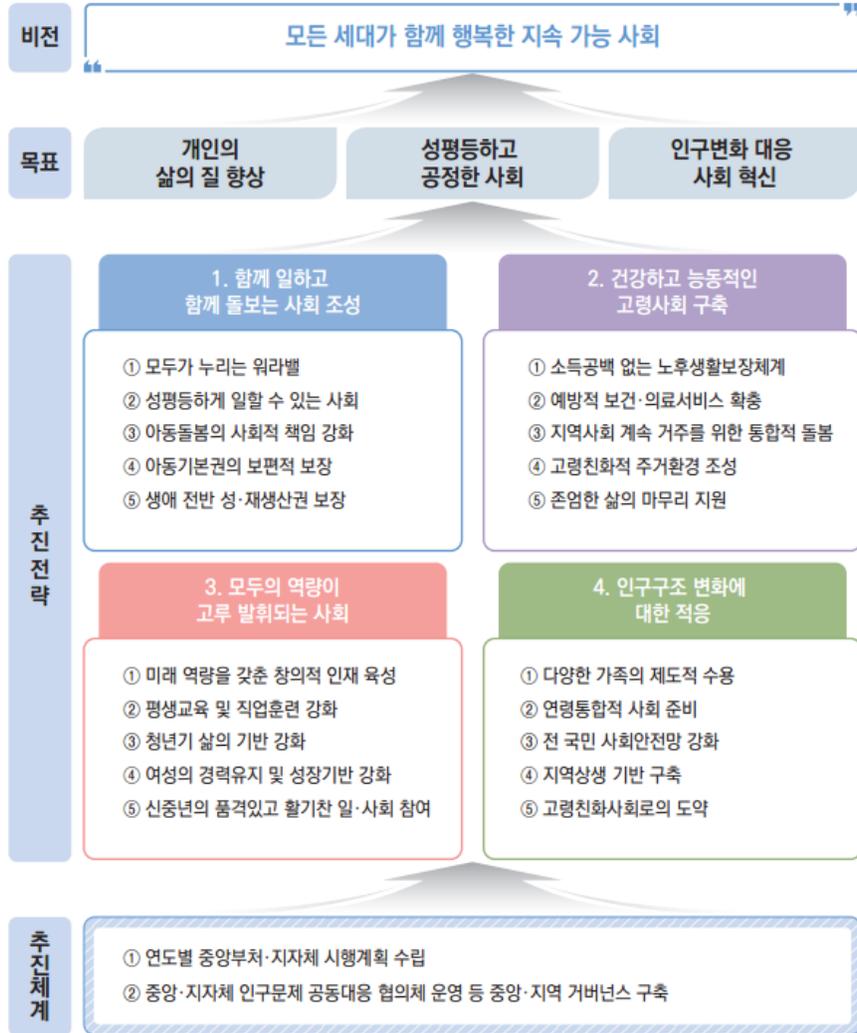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2006~2010)은 국가 주도의 출산장려 정책으로 주로 저소득 가정 중심의 보육 지원 확대에 초점을 두었으며,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2011~2015)의 저출산 분야는 정책의 국민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맞벌이 부부 등 정책 수요가 높은 계층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였다.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2016~2020)에서는 만혼, 비혼 추세가 심화됨에 따라 일자리, 신혼부부 주거 등 구조적 대응을 시도하였고,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2021~2025)은 생애주기별 지원대책을 마련하고, 최초로 지역 관점을 포함(청년, 귀향 베이비부머 등 세대별 지원과 삶의 여건인 공간적 균형 회복을 통해 인구 분산과 세대 공존형 지역사회 조성 제시)하였다.

주요 정부지원시책 분야는 저출산 대책(임신·출산·육아지원, 일-가정 양립 지원, 아동·청소년의 건전한 성장환경 조성), 고령사회 대책, 인구변화 대응 기반 강화 등을 다루고 있다.

18) 차미숙 등, 2021, 지방소멸 대응 대책 수립 연구, 국토연구원, pp.40-44 참고

19) 대한민국정부,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제4차 기본계획의 정책체계도



[그림 2-10]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의 정책체계도

자료: 대한민국정부,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p.43

③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에 따른 인구감소지역 지정²⁰⁾²¹⁾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개정(21년 6월 시행)으로 인구감소지역 지정 근거를 마련하였다. 이 법에서 정의하는 ‘인구감소지역’이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2조 제9호에 따라 지정된 지역으로, 인구감소로 인한 지역소멸이 우려되는 시(특별시 제외)·군·구를 대상으로 출생률, 65세 이상 고령인구, 14세 이하 유소년인구 또는 생산가능인구의 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인구감소 관련 8개 지표(연평균인구증감률, 청년순이동률, 고령화 비율 등)를 통해 인구감소지수를 개발하고, 이를 토대로 89개 인구감소지역을 지정·고시하였다. 인구감소지역은 5년 주기로 지정하되, 이번에 최초 지정인 점을 감안해 앞으로 2년 동안 상황을 면밀히 분석하여 지정을 보완할 계획이다.

〈표 2-16〉 인구감소지역(89개 지역) 지정 현황

부산 (3)	동구 서구 영도구
대구 (2)	남구 서구
인천 (2)	강화군 옹진군
경기 (2)	가평군 연천군
강원 (12)	고성군 삼척시 양구군 양양군 영월군 정선군 철원군 태백시 평창군 홍천군 화천군 횡성군
충북 (6)	괴산군 단양군 보은군 영동군 옥천군 제천시
충남 (9)	공주시 금산군 논산시 보령시 부여군 서천군 예산군 청양군 태안군
전북 (10)	고창군 김제시 남원시 무주군 부안군 순창군 임실군 장수군 정읍시 진안군
전남 (16)	강진군 고흥군 곡성군 구례군 담양군 보성군 신안군 영광군 영암군 완도군 장성군 장흥군 진도군 함평군 해남군 화순군
경북 (16)	고령군 군위군 문경시 봉화군 상주시 성주군 안동시 영덕군 영양군 영주시 영천시 울릉군 울진군 의성군 청도군 청송군
경남 (11)	거창군 고성군 남해군 밀양시 산청군 의령군 창녕군 하동군 함안군 함양군 합천군

자료: 행정안전부 보도자료(2021.10.18.), 인구감소지역 89곳 지정 지방 살리기 본격 나선다, p.2

20) 행정안전부 보도자료(2021.10.18.), 인구감소지역 89곳 지정 지방 살리기 본격 나선다 - 행안부, 89개 지역을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 행정·재정적 지원 추진 -

21)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④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 및 지원²²⁾

행정안전부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은 인구감소 위기 대응을 위한 지방 자치단체의 자율적·주도적 지역발전과 국가 차원의 지역 맞춤형 종합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지방자치단체 간 및 국가-지방자치단체 간 연계·협력 활성화 방안과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특례 등을 규정함으로써 인구감소지역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지역의 활력을 도모하여 국가 균형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²³⁾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내용은 첫째, 기본계획(5년 단위)과 시행계획(1년 단위)을 상향식(시·군·구 계획→시·도 계획→국가 계획)으로 수립한다. 둘째, 생활인구 지원시책 마련, 셋째, 자치단체 간 연계·협력을 활성화, 넷째, 보육, 교육, 의료, 주거, 문화 등 다양한 분야의 특례 지원을 포함하고 있다.

〈표 2-17〉 인구감소지역 분야별 특례 지원 내용

분야	주요 내용
보육	인구감소지역에 국공립어린이집 우선 설치 등
교육	유·초·중·고등학교의 시설·설비 및 교원 등의 통합 운영, 정규 교육과정 이외의 교과 및 특기·적성 프로그램 운영 지원 등
의료	의료기관을 직접 이용하기 어려운 사람 대상으로 방문 진료사업 지원 등
주거	인구감소지역으로 이주하는 사람에게 공공임대 주택 우선 공급 등
문화 등	박물관 또는 미술관 학예사 운영 등에 관하여 특례 지원, 인구감소지역 체류 외국인에게 사증 발급 절차, 체류자격 변경 등 특례 지원 등

자료: 행정안전부 보도자료(2022.05.29.), 인구감소지역, 정주여건개선·지역활력도모 체계적 지원 확대, p.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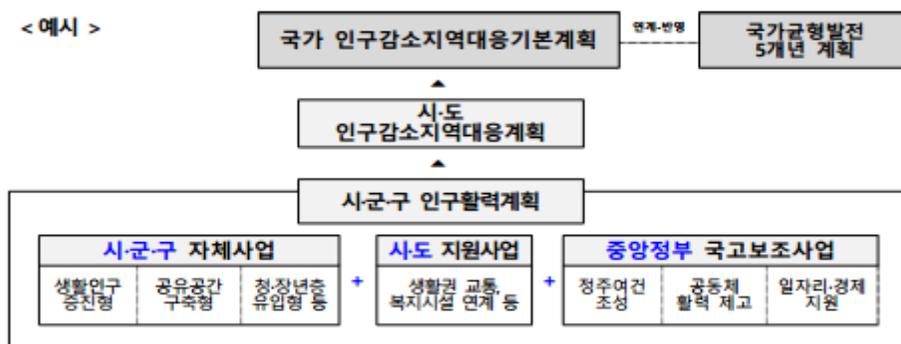
22) 행정안전부 보도자료(2022.05.29.), 인구감소지역, 정주여건개선·지역활력도모 체계적 지원 확대 -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국회 본회의 통과 -

23)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⑤ 지역 주도 상향식 인구활력계획 수립 지원²⁴⁾²⁵⁾

인구감소지역이 주도하여 종합적인 인구활력계획을 수립·추진하고, 중앙은 지원하는 체계를 구축하였다. ‘시·군·구’는 인구활력 증진을 위해 인구감소 원인, 지역 특화자원 등 지역 실정을 고려하여 시군구 계획을 수립하고, ‘시·도’는 시·군·구 간 연계·협력을 위한 광역 단위 사업, 시·군·구 개별적 지원사업 등을 제시한다. ‘중앙부처’는 국고보조사업 중 인구감소 위기 대응에 적합한 사업을 지역의 인구활력계획 수립 시 활용하도록 제시하고 컨설팅을 지원(행정안전부는 지역이 인구활력계획 수립 시 실정에 맞는 전략 수립, 사업 발굴 등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컨설팅 지원사업 추진 - 2년 신규사업)한다.

인구감소지역 주도로 수립된 인구활력계획은 시·도 및 국가의 인구감소대응 계획(국가 인구감소지역대응기본계획(’22~’26), 제5차 국가균형발전 5개년계획(’23~’27))에 연계·반영할 계획이다.



[그림 2-11] 시·군·구 인구 활력 계획의 시·도 및 국가 인구감소대응계획 반영

자료: 관계부처합동, 2021, 지역소멸 선제대응 방안, p.14

24) 행정안전부 보도자료(2021.10.18.), 인구감소지역 89곳 지정 지방 살리기 본격 나선다 - 행안부, 89개 지역을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 행정·재정적 지원 추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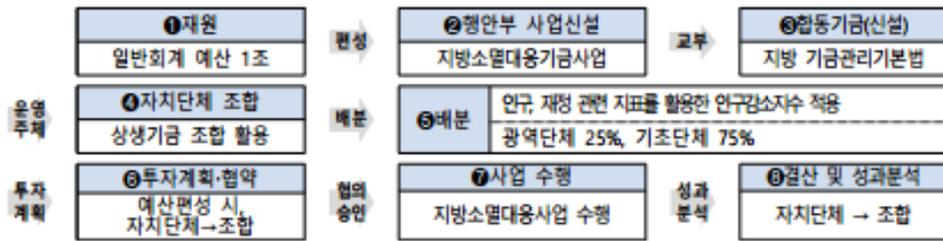
25) 관계부처합동, 2021, 지역소멸 선제대응 방안

⑥ 지방소멸대응기금(매년 1조, '22년~'31년) 지원²⁶⁾²⁷⁾

지방소멸 대응을 위해 지역이 주도하여 투자계획을 수립하고, 국가는 이를 지원하는 방식의 지방소멸대응기금(연1조원)을 도입한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인구감소지역에 집중적으로 투입하여 일자리 창출, 청년인구 유입, 생활인구 확대 등 다양한 인구활력 증진사업이 시행되도록 뒷받침한다. 인구감소 대응에 적합한 국고보조사업(52개, 총 2조5,600억 규모)에 대해서도 공모 시 가점 부여, 사업량 우선 할당, 지역특화 전용사업 등을 통해 범부처가 협업하여 인구감소지역을 지원한다.

지역 주도로 투자계획을 수립·추진하면, 행안부는 계획수립·사업추진·성과 분석 등 전반에 대한 컨설팅 지원하여 효율성을 제고할 계획이다.



[그림 2-12] 지방소멸대응기금 운영 절차

자료: 관계부처합동, 2021, 지역소멸 선제대응 방안, p.15

26) 행정안전부 보도자료(2021.10.18.), 인구감소지역 89곳 지정 지방 살리기 본격 나선다 - 행안부, 89개 지역을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 행정·재정적 지원 추진 -

27) 관계부처합동, 2021, 지역소멸 선제대응 방안

⑦ 행안부 생활인구 확대 '고향올래(GO鄕 ALL來)' 프로젝트²⁸⁾

행안부는 생활인구 확대를 위해 두 지역 살아보기, 로컬유학 생활인프라 조성, 은퇴자 공동체 마을 조성, 청년 복합공간 조성, 워케이션(worcation) 사업을 추진한다. 이는 생활인구 증가, 지역 일자리 창출 등을 목표로 주민등록상 거주자가 아닌 체류형 생활인구 확대를 통한 질적 인구 늘리기 프로젝트이며, 지역 간 소모적 경쟁 최소화, 지역 간 인적 교류를 통해 지방소멸에 공동 대응하는 정책이다.

두 지역 살아보기는 독일의 클라인가르텐을 벤치마킹하여 도시 거주자가 정기적, 반복적으로 지역에 체류하여 해당 지역과 관계를 가지며 추가적인 생활 거점을 갖는 사업이다. 로컬유학 생활인프라 조성사업은 도시지역의 초중학생이 농촌학교에 일정기간 전학하여 도시에서 경험하기 어려운 생태학습을 경험할 수 있도록 유학마을 조성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은퇴자 공동체 마을 조성 사업은 은퇴자들을 위해 2-3달 정도의 전원생활을 체험할 수 있도록 마을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빈집이나 농어촌 체험관 등의 유휴공간을 개조하여 주거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다. 공무원연금공단은 '18년부터 지자체와 협약을 통해 은퇴자 공동체 마을을 운영 중에 있다. 청년 복합공간 조성사업은 청년층 생활인구를 확대하는 사업으로 청년층의 주거공간과 창업 인큐베이팅, 구직 상담, 편의 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현재 청양군에서 청년 복합공간을 조성·운영 중으로('22. 9월 완공) 복합공간 내 주거공간, 청년 창업공간 및 일자리 정보 센터 등을 운영하고 있다.

28)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2122111164976756>
<https://blog.naver.com/planshin/223032330195>
<https://blog.naver.com/mopaspr/223059649394>

⑧ 행안부 청년마을 만들기 지원 사업²⁹⁾

지역의 유희공간을 주거, 소통, 창업 공간으로 조성하여 청년을 양성하고, 재능 있는 청년 생활인구를 확보하여, 청년과 지역을 함께 성장시키는 사업이다. 청년마을 사업은 청년들에게 일정 기간 지역에 머무를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탐색, 일거리 실험, 지역사회 관계 맺기 등을 통해 청년 정착을 지원한다. 선정된 청년단체에는 첫째 사업비 2억원 지원, 이후 사업성과를 평가해 향후 2년 동안 연 2억 원씩 추가 지원한다. 2023년 선정된 12개 청년마을은 와인, 스마트팜, 동물·자연 치유, 뮤직 빌리지 등 지역마다 독특한 주제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청양군은 2021년 로컬몬스터 사업을 지원받았다.

〈표 2-18〉 행안부 청년마을 만들기 지원사업 선정 마을 현황

2018년	전남 목포시 '관찰아마을'		
2019년	충남 서천군 '삶기술학교'		
2020년	경북 문경시 '달빛탐사대'		
2021년	부산 동구 '이바구 마을' 인천 강화군 '강화유니버스' 울산 울주군 '365발마을'	강원 강릉시 '강릉살자' 충북 괴산군 '뽕하농' 충남 청양군 '로컬몬스터'	충남 공주시 '자유도' 전북 완주군 '다음타운'
2022년	강원 속초시 '라이프밸리' 강원 태백시 '관광스토리지' 강원 영월군 '발명' 충남 아산시 'DOGO온천 마을' 충남 태안군 '오락발전소' 전북 군산시 '술익는마을'	전남 강진군 '병영창작상단' 경북 경주시 '가자미마을' 경북 의성군 '나만의-성' 경북 예천군 '생텨마을' 경남 하동군 '오히려 하동'	경남 함양군 '고마워, 할매' 전남 신안군 '주섬주섬마을' 경북 상주시 '이인삼각' 경북 영덕군 '뚜벅이마을' 경남 거제군 '아웃도어 아일랜드'
2023년	세종시 연서면 강원 홍천군 충북 보은군 충북 진천군	충남 홍성군 충남 예산군 전북 익산시 전남 고흥군	전남 영암군 경북 영천시 경북 고령군 경남 의령군

29) https://newsis.com/view/?id=NISX20230407_0002258731&cID=10305&pID=10300
<https://localro.co.kr/village/search>
 행정안전부, 2023년 청년마을 만들기 공모사업 선정 결과

⑨ 국토부 ‘지역활력타운’ 사업(국토부 등 7개 부처 협업)³⁰⁾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중소벤처기업부가 함께 추진하는 지역활력타운 사업은 은퇴자·청년층 등의 지역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주거·문화·복지·일자리 등이 복합 지원되는 주거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 실현이라는 국정목표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맞춤형 주거 공간을 제공하고 생활 필수 서비스인 돌봄·일자리·여가 공간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2023년 시행하는 지역활력타운은 강원 인제군, 충남 예산군, 충북 괴산군, 전남 담양군, 전북 남원시, 경남 거창군, 경북 청도군 등 7곳에 주거·문화·복지 인프라를 갖춘 ‘지역활력타운’이 선정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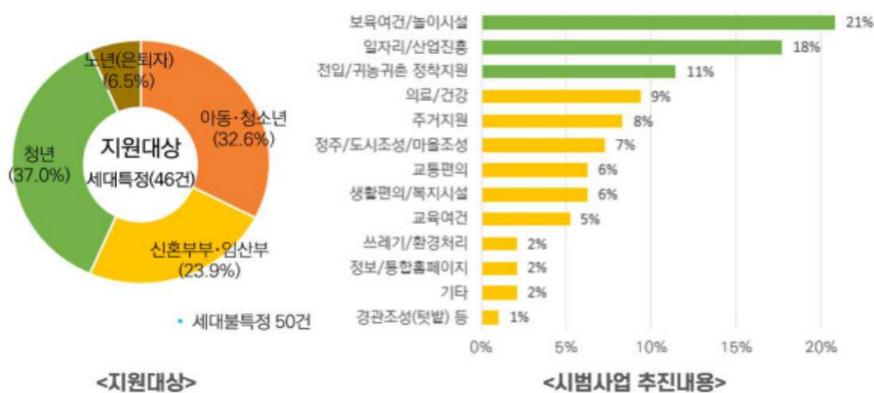
강원 인제는 KTX 인제역 인근에 타운하우스와 청년임대 주택 90세대를 조성하고 스포츠센터와 비건 산업으로 주민 일자리를 제공한다. 충남 예산은 예산시장을 중심으로 창업하는 지역 청년의 정착을 위해 공동주택 25세대 건축을 추진한다. 충북 괴산은 은퇴자와 귀농 귀촌자를 대상으로 타운하우스 40호와 단독주택 15호 그리고 ‘마을 통째로 정원화(정원식물 스마트팜, 사회적 농업 케어팜)’ 사업을 추진한다. 전남 담양은 500세대 규모의 귀농·귀촌 은퇴자 주거지 및 예술인 특화단지, 농촌 유학시설, 파크골프장 계획을 추진한다(총사업비 1267억원). 전북 남원은 타운하우스(36호), 단독주택(32호), 임시주거시설 10호를 조성하고, 경남 거창은 대학연계형 은퇴자 마을(타운하우스 32세대·단독주택 18세대)을, 경북 청도는 주거·취업·창업 공간을 결합한 마을(단독주택 20호·임대주택 30호)을 조성한다.

30) <https://blog.naver.com/mopaspr/223013972352>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15856>

(2) 지자체의 지방소멸대응 사업추진 현황³¹⁾

지방소멸 위기 대응을 위해 지자체 차원에서 다양한 시범사업 추진 중이다. 지방소멸 대응 지원 시범사업 추진 현황 실태 조사(광역·기초지자체 대상)를 실시하여 전체 취합된 96건의 시범사업을 분석한 결과, 지원 대상은 주로 청년층, 추진 내용은 저출산 극복 및 일자리 창출 지원, 전입 및 귀농귀촌 정착지원 사업 위주로 나타났다.



[그림 2-13] 지방소멸 대응 지자체 시범사업 추진 현황

자료: 차미숙 등, 2021, 지방소멸 대응 대책 수립 연구, 국토연구원, p.48

지자체의 지방소멸 대응 지역특화 및 신규 지원시책 제안 조사 결과, 일자리, 보육·교육, 생활편의, 정주기반 등 총142건의 지역특화 및 신규 시책을 제안하였다. 일자리 및 산업진흥 시책이 3건으로 가장 높으며, 보육·교육여건 및 놀이시설(26건), 생활편의 및 복지시설(16건), 정주기반 및 마을조성 지원(14건) 순으로 제안되었다.

31) 차미숙 등, 2021, 지방소멸 대응 대책 수립 연구, 국토연구원, pp.48-50 참고

〈표 2-19〉 지방소멸 대응 지자체 시범사업의 주요 추진 내용

부문	사업내용	세부 추진사업(해당 지자체)
보육·교육 및 놀이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영유아 대상 놀이시설·프로그램 지원 및 작은 학교살리기 사업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우리아이 건강도시락(경남 거제) 다자녀세대 체험놀이 지원(경남 고성) 농어촌 소규모 어린이놀이터 조성(경북 영주) 작은학교살리기 사업(전남 곡성, 경남 함양)
의료·건강 및 생활편의 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의료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의료·건강 지원 사업 및 생활편의 시설 개선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건강새마을 조성사업(경북 청도 외 32개 마을) 맥가이버 선정 지원(전남 순천) 산모·아이 돌봄 10일 대작전(경북 김천) 의료환경개선 보건의료원 업무대행 의사 채용(경북도)
전입 및 귀농·귀촌 정착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귀농·귀촌인, 은퇴도시민 창농 지원 및 정착 지원 사업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입자 주소이전 지원금(경북 포항 등) 경북형 작은정원 클라인가르텐 사업(경북도) 귀농인 정착 장려금 지원(경북 청도 등) 고령 은퇴도시민 영농 및 생활 지원(전북 무주)
정주기반 및 마을 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빈집 등 유휴시설 리모델링을 통한 주거공간 조성, 청년·귀농·귀촌인 등 대상 마을 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이웃사촌 시범마을사업(경북 의성) 행복 보금자리 조성(충북 괴산) 집 리모델링 지원(경남 함양) 농촌형 팜프라 조성사업(경북 군위)
일자리 및 산업 진흥	<ul style="list-style-type: none"> 스마트팜 창농, 청년농업인 육성, 가업승계 지원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업승계 청년 지원(전남 고흥) 청년 인재 지역정착 지원사업(경북 칠곡) 스마트팜 창농 지원(경북 의성) 청년농업인 드론 방재단 육성(경남 창녕)
교통편의 및 정보시스템	<ul style="list-style-type: none"> 버스공영제, 천원택시, 행복택시, 인구정책 원클릭 홈페이지 운영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버스 공영제 추진(강원 정선) 농촌형 교통모델(천원택시) (경북 청송 등) 인구정책 원클릭 통합홈페이지 운영(경북 구미 등)

자료: 차미숙 등, 2021, 지방소멸 대응 대책 수립 연구, 국토연구원, pp.48-50 내용 재구성

〈표 2-20〉 지자체 수요조사: 지역특화 및 신규 시책 제안(142건)

구분	제안 사업명(예시)	지자체수(중복)
일자리 및 산업진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년 노동자 생활 임금 보장 지원 • 지역특산물을 활용한 '얼굴있는 로컬푸드형 융·복합 상품' 개발 • 지역 온라인몰 모바일 할인권을 연계 방안 등 	33건
보육·교육여건 및 놀이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손주 공동 돌봄나눔터 조성 • 어린이집 특성화 및 특별활동비 지원 등 	26건
생활편의 및 복지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년 커뮤니티센터(동아리방) 조성 • 스마트 경로당 시스템 개발 및 구축 등 	16건
정주기반 및 마을조성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촌형 청년특화거리 조성 • 체류형 농촌유학프로그램 참여자 공유공간 조성 등 	14건
문화·관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양한 목적·유형의 생활형 숙박시설 조성 • 영화관(아트트랜스포머-예술극장으로 변신하는 이동차량) • 문화시설(어르신 대상 추억의 영화관) 확충 등 	11건
전입, 귀농·귀촌 정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년활력센터 및 쉼어하우스 조성 • 도시민 체험농원 조성 및 체류형 가족정원 조성 등 	10건
교통편의 및 물류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통약자를 위한 콜택시·천원택시 이용지원 • 어촌공동체 온라인 시장 진입시 유통비(택배비) 지원 등 	10건
의료·건강·치유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강도시 조성 및 운영 • 식생활 증진 스마트센터 구축 • 폐교를 활용한 생활체육 활성화 혁신교육지구 조성 등 	10건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성농업인 주거시설 신박한 정리지원 • 각종 현금성 지원 서비스 정보 통합관리 	12건

자료: 차미숙 등, 2021, 지방소멸 대응 대책 수립 연구, 국토연구원, p.52

2) 일본 정책 및 사례 분석

마을소멸은 인구 공동화, 토지 공동화, 공동체(마을기능) 공동화라는 ‘3가지 공동화’와 관련이 있다. 마을 인구가 감소하면 마을 토지(건축물, 대지, 농지 등)가 관리되지 않는다. 또한 마을 인구가 감소하면 마을의 행사(회의, 축제, 경로 행사 등)가 추진되지 않고 중지된다. 마을 행사가 중지되고 주민이 모이는 기회가 감소하면 마을에 대한 자부심이 결여되는데 이것을 ‘자부심 공동화(誇りの空港化)’라고 한다(小田切徳美, 2009).³²⁾

마을소멸에 대한 대응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어떤 마을을 ‘유지할 것인지’, 어떤 마을을 ‘소멸시킬 것인지’에 대한 의사 결정이 요구된다. 이러한 결정은 당사자인 마을 주민의 의견 수렴을 통해 결정해야 하는 사안이다.

이와 같은 마을유지 및 소멸은 ‘마을재편’에 대한 정책과제에 속한다고 볼 수 있으며 마을재편 유형은 조영재 등(2014)이 연구하였다. 연구는 마을재편을 일본 정책사례 등을 참고하여 마을재편을 ‘공간적재편’, ‘행정적 재편’ ‘기능적재편’으로 구분하였다. 공간적 재편은 주거를 집단으로 다른 곳으로 이전하여 마을을 소멸시키는 적극적인 마을재편 방법이다. 행정적 재편은 마을 기능을 상실한 마을을 인근마을과 합병하거나 흡수·편입하는 경우이다. 기능적 재편은 마을이 상호 협력·보완을 통해 마을의 기능을 유지 발전하는 경우이다.³³⁾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마을소멸정책은 마을재편 측면에서 다루어질 필요가 있으며, 일본의 마을소멸 대응 정책 사례를 마을재편 관련 정책 관점인 ① 공간적 재편(마을 이전), ② 행정적 재편(마을 행정구역의 통합), ③ 기능적 재편(마을 연계·보완을 통한 마을유지) 측면에서 살펴보았다.

32) 小田切徳美, 2009, 農山村再生「限界集落」問題を越えて, 岩波ブックレットNO.768, 岩波書店

33) 조영재·윤정미·김두환·조은정, 2014, 농촌마을 과소화·고령화에 대응한 마을재편 방안 연구

(1) 재편 관련 정책

① 공간적 재편 관련 정책(마을 이전)

□ 마을 이전 관련 사업

일본 총무성은 과소지역 대응 정책으로서 1969년에 ‘집락재편모델사업’(1969년~1974)을 추진하였고 후속 사업으로 ‘과소지역집락정비사업’(1971~1988)을 거쳐 이후 ‘과소지역집락재편정비사업’(1989~)을 추진하고 있다.

일본 국토교통성은 자연재해가 발생한 지역 또는 발생 위험이 있어 거주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지역에 존재하는 마을(주거)을 안전한 지역으로 집단이전을 촉진하는 목적으로 ‘방재 집단이전 촉진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마을이전 사업은 생활이 불편한 배후마을을 지역의 중심 마을로 이전하는 것이다.

마을 이전을 위해 필요한 새로운 마을 기반 조성(신규주택단지, 마을공동시설, 도로·상하수도 등) 및 마을공동시설(마을회관, 마을공동창고 등) 정비를 지원한다. 사업 목적에 따라 마을 이전 전의 기존 마을의 토지 매매 및 보상, 마을주민의 주거 이동, 농림업 등 생산 조건 정비, 이농 촉진 및 전직 원활화 등도 지원한다. 현재 추진 중인 총무성의 ‘과소지역집락재편성정비사업’은 ① 정주촉진단지정비사업, ② 집락등이전사업, ③ 계절주거단지정비사업, ④ 정주촉진빈집활용사업으로 구성된다.

마을 주민의 집단 이전을 추진하는 ‘집락 등 이전사업’의 실적은 미비하며 지자체는 주로 중심 마을에 공공주택 건축을 지원하는 ‘정주 촉진 단지 정비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표 2-21〉 마을이전 관련 사업 개요

사업명	소관 부처	사업 개요
집락재편 모델사업 (1969~1974)	총무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촌의 분산된 소규모 집락을 이전·통합 ○ 지원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택재건 이자 지원 • 주택단지 관련 공공시설 정비 • 농림업 등 생산 조건 정비 • 이농 촉진, 전직 원활화
과소지역 집락정비 사업 (1971~1988)	총무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통 조건이 나쁘고, 의료교육 등 공공서비스의 확보가 곤란한 마을의 이전을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호이상의 마을로서 모든 가구가 이전하는 경우 • 이전하는 마을의 상당수가 이전 대상지역에 주거 단지를 형성 ① 원활한 거주지 이전을 위해 필요한 경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전자의 이전 및 이농 등을 원활히 하기위하여 이전자에게 지급하는 경비 ② 주택용지 조성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새로운 주택용지 조성에 필요한 경비 ③ 이전대상지 주택건설 등 조성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전자가 시·정·촌이 이전 대상지역으로 선정한 단지에서 주택을 건설 혹은 구입하기위하여 필요한 자금을 주택금융공고(公庫)에서 빌린 경우, 당해 대출 이자에 상당하는 금액 전부 혹은 일부를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비 ④ 관련 공공시설 정비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전으로 수반되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도로, 공원, 녹지, 광장, 집회시설, 급수 시설 등 공공시설 정비에 필요한 경비 ⑤ 관련 공동시설 정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전으로 수반되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공동작업소, 공동창고, 공동축사 등 농림어업 근대화를 위한 공동시설 정비에 필요한 비용
과소지역 집락 재편성 정비사업 (현재)	총무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정주촉진단지정비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의 정주를 촉진하기 위한 기간적 집락 등에 주택 단지를 조성하기 위한 보조를 시행 • 5호 이상이 단지를 형성 ② 집락등이전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활조건이 현저히 저하된 집락 혹은 고립, 산재하는 거주를 기간적 집락으로 이동하는데 필요한 경비 보조를 시행 • 대략 5호 이상(집락이동) 혹은 3호 이상(벽지점재주거이전)가 이동하여 단지를 형성할 것

사업명	소관 부처	사업 개요
과소지역 집락 재편성 정비사업 (현재)	총무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③ 계절주거단지정비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통조건이 열악하고 기초적 공공서비스 확보가 곤란한 지역에 존재하는 주거 • 점진적으로 집락이동을 유도하기 위하여 겨울철에 거주하기 위한 주거단지를 조성하는 데 필요한 경비에 대한 보조 • 단지로 3호 이상이 같이 이동 ④ 정주촉진빈집활용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주를 촉진하기 위하여 기간적 집락에 점재하는 빈집을 활용하여 정비하는데 필요한 경비 보조
방재집단 이전촉진 사업 (현재)	국토교통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연재해가 발생한 지역 또는 발생 위험이 있는 구역에서 지역*이 일체적으로 거주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지역의 집단이전을 촉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5호 이상 또는 이전하려는 주거 수가 1/20 이상 • 아래 지역 외에서 이전하는 경우는 10호 이상 * 재해위험구역, 침수재해방지구역, 산사태방지구역, 토사재해특별경계구역, 긴급경사지붕과위험구역 ○ 지원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택단지 용지 취득 및 조성(기 조성 분양용지는 미해당) • 이전자의 주택 건설 및 토지구입 비용 • 주택단지 안의 공공시설 정비 • 기존 지역(이전촉진구역)의 토지 판매 및 건물 보상 • 농기계 등 보관하는 공동창고 등 정비 • 이전자의 주거 이동 비용 • 사업계획 수립 경비

• 마을 이전의 실질적 어려움

마을 이전은 모든 마을 주민의 동의, 토지소유자의 동의가 없이는 불가능하며 마을 이전 후 남겨진 토지 활용 문제가 발생하므로 마을 이전은 과감한 정책지원이 없이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 일본의 경우도 ‘방재집단이전촉진사업’을 통한 마을 이전 사례 이외 과소지역 마을의 마을 이전 사례는 많지 않은 실정이다.

• 마을 이전 후의 토지 활용 문제

1971년에 과소지역의 집락재편성사업을 제안한 (재)과소지역문제조사회는 마을 이전 후 기존마을의 토지 활용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였다.

〈표 2-22〉 기존 마을 토지 활용 여부에 따른 마을이전 유형

유형	마을 왕래 여부		고려 사항
	토지관리	마을활동	
무거주 미왕래형	×	×	기존 토지를 지자체 등에서 매입하여 정비할 필요
무거주 왕래형	○	○	도로, 농용수로 등 지속 관리 필요

마을 이전 후 기존 마을의 토지 활용 여부에 따라 ‘무거주 미왕래형’과 ‘무거주 왕래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무거주 미왕래형’은 토지·빈집의 소유자가 관리를 거의 하지 않고 마을에 오지 않는 경우이다. 이는 기존 마을의 토지를 활용할 의사가 없으므로 민간에서 매각이 어려운 경우는 지자체가 매입하여 산림 관리 등 치산치수 측면의 정책 수단이 동시에 강구되어야 한다.

‘무거주 왕래형’은 토지·빈집의 소유자가 토지와 빈집을 관리하려 마을에 오는 경우, 마을에 거주하지 않지만 농사를 짓기 위해 마을에 오는 경우 등 어떤 목적을 위해 마을에 방문하는 경우이다. 이는 가계의 소득 등을 위해 기존 마을의 농지를 계속 활용하는 경우이며 마을 이전을 한 후에도 지자체는 농로, 도로 등의 정비를 지속해야 한다.

② 행정적 재편 관련 정책

□ 마을 합병(폐지 및 통합)

일본에서 행정적 재편에 대한 많은 연구가 진행되었다. 그러나 정책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는 형성되었으나 실제로 행정구역 상 마을을 폐지하고 통합한 사례는 거의 없다. 최근 (佐藤周平 등 2022) 연구 결과에 따르면 1개 사례(니가타현 죠에츠시의 후도 지구)가 있다.³⁴⁾

• 사례: 니가타현 죠에츠시 후도 지구

합병 전의 '후도 지구'는 시모세토(19가구 43명), 카미세토(35가구 86명), 히가시히마야(37가구 101명) 3개 마을로 존재하였다.

- 마을 각각의 자치회가 구성되어 있었으며
- 1984년에 3개 마을이 연합한 '산가지 연합회'를 조직
- 2020년 4월 3개 마을 자치회를 폐지하고 새로운 '부동자치회'를 조직
- 2020년 5월 죠에츠시로부터 '인가지역단체'로서 법인격을 부여받음

마을 병합 배경은 고령화와 인구감소에 대한 주민의 위기감이었다(佐藤周平等 2022).

새로운 마을 자치회인 부동자치회가 마을 존속 과제에 대응한 조직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부동지구의 마을 병합은 주민 자생적인 재편이라는 점에 의미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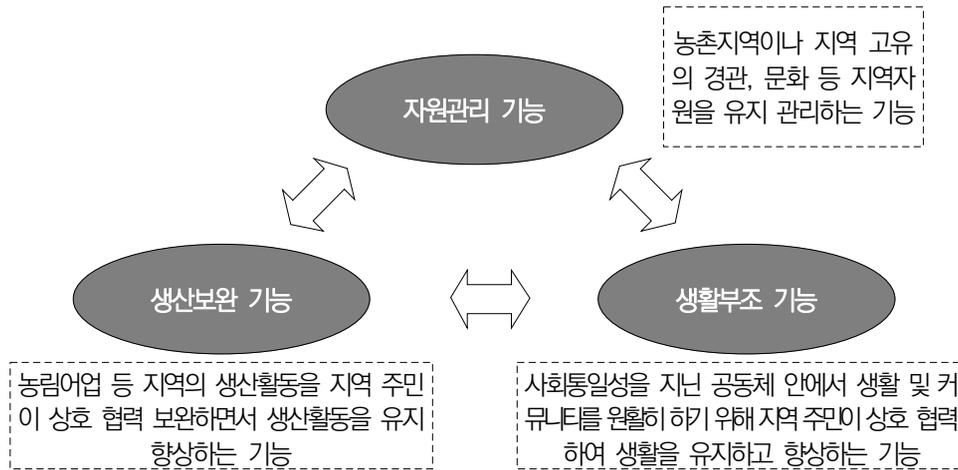
또한 3개 마을이 갑자기 병합한 것이 아니라 1984년에 마을 연합회를 통해 마을연계 활동을 하면서 단계적으로 마을 병합에 이른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34) 佐藤周平·山下詠子·竹本太郎, 2022, 新潟県上越市不動地区における集落合併の要因, Journal of Forest Economics Vol.68 No.2 (2022), pp.1-16.

③ 기능적 재편 관련 정책

□ 일본의 마을 기능³⁵⁾

국토교통성(国土交通省, 2001)에 따르면 마을 기능을 ‘자원관리 기능’ ‘생산보완기능’ ‘생활부조기능’으로 분류하고 있다. **자원관리 기능**은 농촌지역이나 지역 고유의 경관, 문화 등 지역자원을 유지 관리하는 기능이다. **생산보완기능**은 농림어업 등 지역의 생산활동을 지역 주민이 상호 협력 보완하면서 생산활동을 유지 향상하는 기능이다. 잡초제거, 농로 정비 등이 해당한다. **생활부조기능**은 사회통일성을 지닌 공동체 안에서 생활 및 커뮤니티를 원활히 하기 위해 지역 주민이 상호 협력하여 생활을 유지하고 향상시키는 기능이다.



[그림 2-14] 일본의 ‘마을 기능’ 개념

자료: 국토교통省, 2001, 「平成12年度集落の衰退による地域の社会基盤等への影響に関する調査報告書」

35) 国土交通省, 2001, 「平成12年度集落の衰退による地域の社会基盤等への影響に関する調査報告書」

□ 마을 기능 쇠퇴에 따른 영향

마을 인구 감소에 따른 사회기반 기능 저하 문제점(国土交通省, 2001)을 보면, 휴경농지 증가(59.0%), 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38.0%), 관리 방치 산림 증가(35.1%), 산림 황폐(29.2%), 전통적 행사 쇠퇴(23.3%), 주택 황폐(22.4%), 경작지 경관 황폐(18.1%) 순서로 나타났다.³⁶⁾

이러한 마을 기능의 저하는 마을 주민 개인뿐만 아니라 마을 단위, 시정촌 단위에 영향을 끼친다. 마을 인구 과소화로 경작포기지가 발생하면 연쇄적으로 주변 고령 농가의 영농의욕 저하에 영향을 끼치고 휴경농지가 증가하는 악순환 현상이 나타난다. 휴경지 증가로 마을경관이 악화되는 등의 문제가 야기된다.

일본의 사례와 같이 마을 재편 논의를 위해 우리나라의 실정에 맞는 마을 기능은 무엇이며 마을 기능 쇠퇴가 미치는(마을 단위, 지자체 단위, 수계 단위 등) 영향 등을 예측할 필요가 있다.

〈표 2-23〉 마을기능 저하에 따른 사회기반 등 현황(과소지역 시정촌)

관련 항목		마을 수	%
생활	주택황폐	1,092	22.4
	마을내 도로 및 농로 황폐	556	11.4
	집회소 및 공민관 등 황폐	240	4.9
	초등학교 등의 황폐	226	4.6
	공동묘지의 황폐	89	1.8
산업기반	용배수로, 저수지 황폐	449	9.2
	창고, 저장고 등 황폐	122	2.5
	공동작업장 황폐	121	2.5
지역문화	전통적 행사 쇠퇴	1,136	23.3
	전통예능 쇠퇴	520	10.7
	신사, 불각 등 황폐	160	3.3
자연환경	산림 황폐	1,420	29.2
	동식물등 생태계 변화	216	4.4
	하천, 호수, 지하수 등 수량의 변화	194	4.0

36) 国土交通省, 2001, 「平成12年度集落の衰退による地域の社会基盤等への影響に関する調査報告書」

관련 항목		마을 수	%
재해	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1,852	38.0
	산사태 발생	317	6.5
	홍수 발생	67	1.4
경관	경작지 경관 황폐	1,116	22.9
	마을 경관 황폐	881	18.1
토지이용	경작포지기 증가	2,872	59.0
	관리 방지 산림 증가	1,709	35.1

자료: 国土交通省, 2001, 「平成12年度集落の衰退による地域の社会基盤等への影響に関する調査報告書」

〈표 2-24〉 마을 기능 저하에 따른 영향

〈마을기능 쇠퇴〉	〈발생 현상〉	〈개인 영향〉	〈마을 영향〉		〈시정촌 영향〉
			(1차적 영향)	(2차적 영향)	
자원관리기 능 쇠퇴	경작포지기 발생	영농의욕 저하	경작포지기 증가	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병충해 발생 마을경관 악화	일상생활 불안 확대 병충해 피해 확대 농촌경관 황폐
	관리방치림 발생	영림의욕 저하	관리방치림 증가	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산림생태계 악화 산사태 재해 발생 수질등 하천환경 악화	일상생활 불안 확대 생태계 균형 변화 대규모 재해 발생 가능성 증대 홍수토사 재해 발생 가능성 증대
	수로기능 저하	관리의욕 저하	수로 막힘, 단절, 물 넘침 발생	웅덩이 발생, 관수 쓰레기 집적, 도양침식	하천 수질 수량 악화 집중 호우 용수로 범람 발생
	역사적·문화자원 의 황폐 마을경관 악화	마을 애착 감퇴	신사불각 등 역사적 문화적 자원 붕괴 마을 고유경관 악화(마을 전통적 재산)	커뮤니티 존속 위한 기반 붕괴	매력있는 교류 자원 손실
생산보완기 능 쇠퇴	마을 유지를 위한 공동작업 감소 (풀베기, 길 청소, 농용수로 청소 등)	풀베기 등 개인 부담 증가	공동작업시설 황폐 마을공유지 황폐 공동작업 축소	커뮤니티 존속 위한 기반 붕괴	지원 비용 증가 자연재해 가능성 증대
	지역 전통적 산업 쇠퇴·소실	경제적 지주 상실	지역산업 쇠퇴·소실	산업구조 변화	지역산업 쇠퇴
생활부조기 능 쇠퇴	연중 행사, 관혼상제 등 상호부조 기능 저하	마을 애착 감퇴 관혼상제 경제 적 부담 증가	교류 희박화 마을 내 조직단위 관계 희박화		지원비용 증가
	농작업을 통한 일상적 상호부조 기능 저하	마을애착 감퇴			

자료: 国土交通省, 2001, 「平成12年度集落の衰退による地域の社会基盤等への影響に関する調査報告書」

(2) 인구감소 문제 대응 정책 및 사업

일본은 과소화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마을 단위 지원 사업과 지방창생 차원의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다.

① 마을 단위 대응 정책

마을 단위 사업으로는 과소지역집락재편정비사업(총무성), 집락기반정비사업(농림수산성), 중산간지역종합정비사업(농림수산성), 중산간지역등직접지불교부금(농림수산성), 농촌진흥종합정비사업(농림수산성), 산림공간정비사업(임야청), 방재집단이전촉진사업(국토교통성) 등으로 마을의 생산기반, 생활환경, 마을 이전, 산림 환경의 정비를 지원하고 있다.

〈표 2-25〉 일본의 마을 지원 사업 개요

사업명	소관부처	사업 개요
과소지역집락재편정비사업	총무성	<p>기초적 조건이 현저히 저하된 마을 이전 등 정주를 촉진하기 위한 주택단지 조성, 마을 이전을 유도하기 위한 계절주택단지 조성하여 마을 재편성을 추진</p> <p>① 집락등이전사업 - 집락이전 유형, 벽지점재거주이전 유형</p> <p>② 정주촉진단지정비사업</p> <p>③ 계절거주단지정비사업</p>
집락기반정비사업	농림수산성	<p>농업과 조화한 토지이용 질서화를 도모하여 농업생산기반 정비, 농촌마을의 양호한 정주기반 정비, 농촌지역의 교류 기반 정비등을 일체적으로 실시하여 농업·농촌의 발전에 기여</p> <p>①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p> <p>② 농촌정주기반정비사업</p> <p>③ 농촌교류기반정비사업</p> <p>④ 농촌환경기반정비사업</p> <p>⑤ 집락토지기반정비사업</p> <p>⑥ 특인(特認)사업</p>

사업명	소관부처	사업 개요								
중산간지역 종합정비 사업	농림수산성	<p>농업생산기반 정비와 함께 농촌생활환경기반 등을 종합적으로 정비하여 농업·농촌의 활성화를 도모하여 지역의 정주축진, 사회기반을 형성하여 국토·환경보전에 기여</p> <table border="1"> <tr> <td>① 일반형</td> <td>생활기반과 생활환경을 일체적으로 정비</td> </tr> <tr> <td>② 생산기반형</td> <td>마을을 대상으로 우량농지 등 기반정비</td> </tr> <tr> <td>③ 생활환경형</td> <td>생산기반정비를 정비를 완료한 지역에서 생활환경 등을 집중 정비</td> </tr> <tr> <td>④ 광역연계형</td> <td>여러 시정촌에 걸친 지역을 대상으로 지방단독사업 등과 일체적 구상으로 농업·농촌 활성화 도모</td> </tr> </table>	① 일반형	생활기반과 생활환경을 일체적으로 정비	② 생산기반형	마을을 대상으로 우량농지 등 기반정비	③ 생활환경형	생산기반정비를 정비를 완료한 지역에서 생활환경 등을 집중 정비	④ 광역연계형	여러 시정촌에 걸친 지역을 대상으로 지방단독사업 등과 일체적 구상으로 농업·농촌 활성화 도모
① 일반형	생활기반과 생활환경을 일체적으로 정비									
② 생산기반형	마을을 대상으로 우량농지 등 기반정비									
③ 생활환경형	생산기반정비를 정비를 완료한 지역에서 생활환경 등을 집중 정비									
④ 광역연계형	여러 시정촌에 걸친 지역을 대상으로 지방단독사업 등과 일체적 구상으로 농업·농촌 활성화 도모									
중산간지역 등직접지불 교부금	농림수산성	<p>중산간지역의 다면적 기능 유지·증진을 위해 자율적·지속적 농업생활활동 등의 체제 정비를 위한 적극적 활동을 추진</p> <p>① 마을협정에 근거한 마을의 장래상을 명확히 한 활동계획을 바탕으로 5년 이상 지속 추진하는 농업생산 활동 등</p> <p>② 마을협정에 근거한 일정 요건 하의 농용지 보전 체제 정비(필수요건)과 지역의 실정에 맞는 지속적인 농업생산 등 활동을 실시</p>								
농촌진흥 종합정비 사업	농림수산성	<p>지역의 다양한 수요에 대응한 농업생산기반 정비와 농촌생활환경정비를 종합적으로 추진</p> <p>① 농업생활기반정비사업 ②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 ③ 특인(特認)사업</p>								
산림공간 종합정비 사업	임야청	<p>다양화 고도화한 국민 수요에 대응한 산림공간을 창출하기 위해 산림환경 교육 추진 관점, 건강 만들기 관점, 마을동산정비 관점에서 지역 상황에 맞는 산림공간정비를 추진</p> <p>① 전체계획조사사업 ② 산림환경교육촉진정비사업</p>								
방재집단 이전촉진 사업	국토교통성	<p>재해가 발생한 지역 또는 재해위험 지역 중 거주하기에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구역의 거주를 집단이전을 추진</p> <p>① 주택단지 용지 취득 및 조성(기 조성 분양용지는 미해당) ② 이전자의 주택 건설 및 토지구입 비용 ③ 주택단지 안의 공공시설 정비 ④ 기존 지역(이전촉진구역)의 토지 판매 및 건물 보상 ⑤ 농기계 등 보관하는 공동창고 등 정비 ⑥ 이전자의 주거 이동 비용 ⑦ 사업계획 수립 경비</p>								

자료: 国土交通省(国土審議會計画部会), 2006, 第6回自立地域社会専門委員會議事次第, 資料4-2 参考資料 (今後の集落のあり方関係)

② 지방창생 관련 대응 정책

마을 단위를 넘은 지자체 차원의 정책으로 지방창생추진교부금 및 지방창생거점정비교부금(내각부), 과소지역등자립활성화추진교부금(총무성), 모두의 학교 프로젝트(문부과학성), 농산농촌진흥교부금(농림수산성), 사회자본정비종합교부금(국토교통성), ‘작은거점’을 핵으로한 ‘고향집락생활권’ 형성사업(국토교통성) 등으로 지역의 실정을 고려하여 지자체의 선구적 활동, 마을간 연계 활동, 소득 창출, 지역의 생활 서비스 확보를 위한 작은거점 만들기 등을 추진하고 있다.

〈표 2-26〉 일본의 지방창생 관련 정책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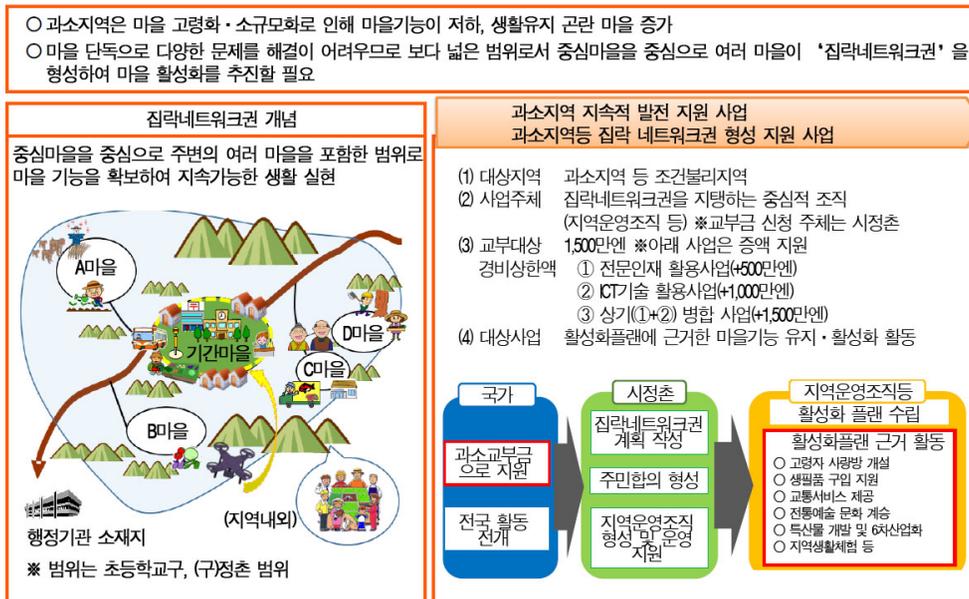
시책명	소관부처	시책 개요
지방창생추진교부금 지방창생거점정비교부금	내각부	지자체의 인구 현황, 장래 전망을 바탕으로 직지역의 실정을 고려한 기본목표와 구체적 시책을 담은 ‘지방판종합전략’에 근거하여 지방공공단체의 자주적·주체적인 선구적 활동을 지원
과소지역등자립활성화추진 교부금	총무성	기간 마을을 중심으로 한 여러 마을로 구성된 ‘집락네트워크권’에서 ‘지역운영조직’의 활동을 지원
모두의 학교 프로젝트	문부 과학성	미활용 폐교 시설의 정보를 공개하고, 활용 수요와의 매칭을 촉진하고 폐교시설 활용 사례와 이용가능한 보조 지원 제도를 소개
농산농촌진흥교부금	농림 수산성	지역의 창의적 활동에 근거한 계획수립을 비롯하여 농업인 등을 포함 지역주민 취업 기회 확대, 농산어촌의 소득 향상, 고용 확대 위한 활동을 종합적으로 지원
사회자본정비종합교부금	국토 교통성	지자체의 ‘사회자본종합정비계획’에 근거한 정책목적 실현을 위해 기간적 사회자본정비사업 등 사회자본정비 등을 종합적·일체적으로 지원
‘작은거점’을 핵으로한 ‘고향집락생활권’ 형성사업	국토 교통성	중산간지역의 기간적 집락의 여러 서비스와 지역활동의 장을 집적하여 주변마을과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작은거점’ 형성 추진 기존시설을 활용한 생활기능 재편·집약에 관한 시설 정비 지원

자료: 文部科学省, 2018, 地方創生に関連した関係省庁の支援策の例(資料 1 - 5)

□ 과소지역등 집락 네트워크 형성 지원 사업(총무성)

과소시정촌의 중심마을을 중심으로 하여 주변 마을로 구성된 마을네트워크권(작은거점)에서 지역운영조직 등의 활동(주민 생활 지원 활동 등)을 과소지역등 자립 활성화 추진 교부금으로 지원한다. 시정촌은 주민합의를 거쳐 지역 운영조직의 형성과 운영지원 등의 내용을 포함한 '집락네트워크권계획'을 작성하고 '활성화계획'을 수립 후 계획의 내용을 지원한다.

내용은 과소지역의 유희시설을 활용한 지역간 교류와 지역진흥을 위한 활동으로서 고령자 사랑방 개설, 생필품 구입 기능 확보, 생활교통 개선, 전통예능 및 문화의 계승, 특산물 개발 등 6차산업화, 지역생활체험 등이 있다.



[그림 2-15] 과소지역등 집락네트워크권 형성지원사업 개요

자료: 総務省(地域力創造グループ過疎対策室), 2022a, 過疎地域等集落ネットワーク圏形成支援事業について

• 사례: 집락네트워크권(시마네현 마스다시 마사고지구)

시마네현의 마스다시의 중산간지역에 위치한 마사고지구(175가구, 394명)는 집락네트워크권을 형성하였다.

활동 공간 확보를 위해 농협 시설을 임대하고 주민 사랑방 및 외부 교류 공간, 아동학습지원공간, 생필품 판매공간, 카페 등으로 정비하였다.

지역운영조직으로서 4개 부회(분과)(키라메키 부회, 돌봄 부회, 학습 부회, 연대 부회) 구성된 '토키메키 사토 마사고'를 조직하여 산업진흥, 지역내외 교류, 고령자와 청년의 교류장소 만들기, 마을만들기 인재양성을 추진하였다.

• 사례: 집락네트워크권(교토부 미야즈시 카미미야즈지구)

교토부의 카미니야즈지역은 시가지의 남부에 위치한 옛 마을과 신시가지가 혼재하는 지역이다. 6마을(551가구, 1,147명)이 집락네트워크권을 형성하여 특산품개발과 신산업창출을 추진하였다.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지역운영주체로서 '카미미야즈지역회의'를 조직하였다. 조직은 6개 마을 자치회, 카미미야즈 지구 산업회, 카미미야즈 지구 재산관리회, 노인회 등 11개 조직이 참여하여, 전문가와 같이 용출수를 활용한 고추냉이 재배 실증 연구, 파쇄 목재 활용을 위한 연구 등을 추진하였다.

□ 특정지역만들기사업 협동조합제도(총무성)

과소지역에서 지역만들기를 지속하기 위해서는 지역만들기의 주체가 필요하며 주체가 지속적으로 활동하기 위한 운영경비 확보가 필수적이다. 그러나 지역만들기 활동은 주민생활 지원 등 주로 비영리적인 활동이므로 수익이 창출하기 어려워 운영경비 마련이 어려운 실정이다.

일본의 총무성이 지역만들기조직(6,064단체)을 대상으로한 조사결과(総務省(地域力創造グループ過疎対策室), 2022,)를 보면 이들 단체의 수입원은 ‘시정촌의 보조금’이 62.1%, 공적시설지정관리료 9.3%, 구성원의 회비 6.6%, 시정촌의 위탁사업 수입 4.4%, 민간단체 조성금 2.3%, 이용자의 이용요금 1.9% 등으로 단체가 자체적으로 운영경비를 확보하는 데 한계가 있다.³⁷⁾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총무성은 특정지역만들기협동조합 인정과 특정지역만들기 사업 추진에 관한 조치 등을 마련하여 지역의 인재 확보와 활동을 촉진하여 지역사회의 유지화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기 위해 「**지역인구감소를 대처하기 위한 특정지역만들기사업 추진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지역만들기사업법’이라 함)을 제정(2019년6월)하였다.

이를 근거로 특정지역만들기사업을 추진하는 협동조합은 지역에서 일손이 필요한 농업인, 어업인, 식품가공업자 등에게 노동자를 파견하고 이용 요금은 조합운영을 위한 수익으로 확보한다.

노동자파견법 특례에 관한 사항에 따라 후생노동성 장관에 신고하여 (중략) 고용하는 직원(기간을 정하지 않고 고용하는 지원으로 한정)을 대상으로 노동자파견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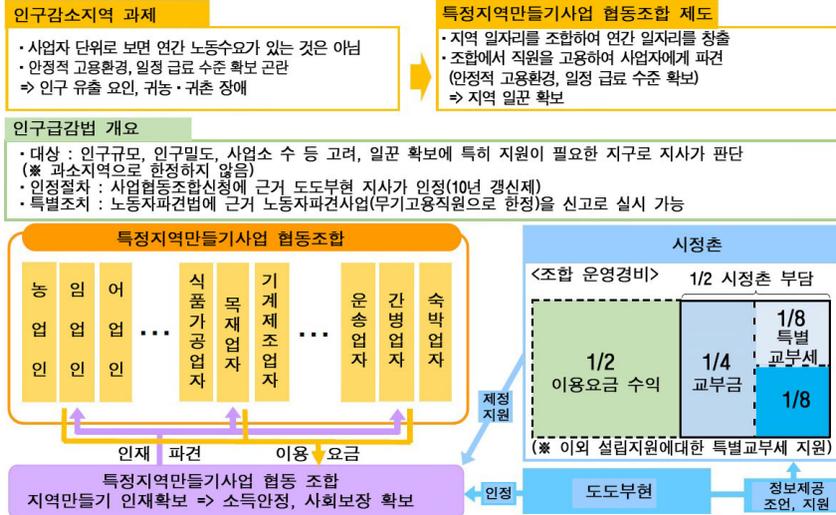
37) 総務省(地域力創造グループ過疎対策室), 2022a, 過疎地域等集落ネットワーク圏形成支援事業について

2022년 4월 기준 46개의 특정지역만들기사업 협동조합이 인정되어 사업장에 인력을 파견하고 있다. 파견 분야는 농업, 축산업, 임업, 건축공사업, 간병업, 관광업, 숙박업, 임식업, 학습지원업, 금속가공업, 부동산업, 디자인업, 판매업 등으로 다양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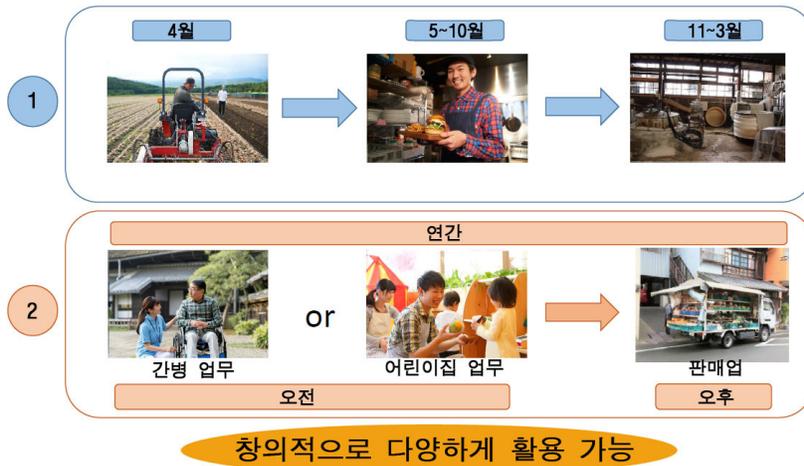
〈표 2-27〉 지역인구감소를 대처하기 위한 특정지역만들기사업 추진에 관한 법률 개요

구분	내용
I 목적	‘특정지역만들기사업’을 추진하여 ‘지역만들기 인재’ 확보 및 활동을 촉진하여 지역 사회 유지 및 지역경제활성화에 이바지
II 지역만들기 인재	지역인구 감소에 직면한 지역의 취업·노동 등 사회적 활동을 통해 지역사회유지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인재
III 특정지역만들기 사업협동조합	<p>도도부현 지사의 승인을 받은(중소기업협동조합법 상의) 사업협동조합</p> <p>1. 인정 기준</p> <p>① 자연적·경제적·사회적 조건상 일체적이고 지역만들기 인재 확보를 위해 특히 지원할 필요가 있는 지역</p> <p>② (i) 특정지역만들기사업을 적정히 추진하는 점에서 적절하고, 조합 직원의 취업조건을 충분히 배려한 계획 (ii) 해당 사업이 지역사회 유지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p> <p>③ 해당사업을 확실히 수행하는데 필요한 경제적, 기술적 기반</p> <p>④ 사업협동조합, 관계사업 단체 및 시정촌 간의 충분한 연계협력 체계</p> <p>2. 특정지역만들기사업</p> <p>① 지역만들기인재가 조합원이 사업에 종사하는 기회 제공 (i) 노동자파견사업에 해당하는 경우 신고만으로 추진 가능 (ii) 조합은 노동관계법령을 준수, 노동자파견사업을 적정 실시 (iii) 국가 및 지방공공단체를 위한 필요한 조연, 지도 등 조치 강구</p> <p>② 지역만들기인재 확보 및 육성 등 활동 추진을 위한 사업 기획 및 실시</p> <p>3. 국가 및 지방자체단체의 지원 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합에 대한 필요한 재정상의 조치 등 • 조합에 대한 필요한 정보제공, 조연, 지도 등 원조
IV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만들기 인재 활동 추진에 기여하는 활동 지원 • 홍보 등 정보 발신 활동 • 사업 실시 5년 후 사업 점검 후 결과에 따른 사업 보완

자료: 総務省(地域力創造グループ過疎対策室), 2022b, 特定地域づくり事業協同組合制度の概要について



[그림 2-16] 지역인구감소를 대처하기 위한 특정지역만들기사업 추진에 관한 법률 개요
 자료: 総務省(地域力創造グループ過疎対策室), 2022b, 特定地域づくり事業協同組合制度の概要について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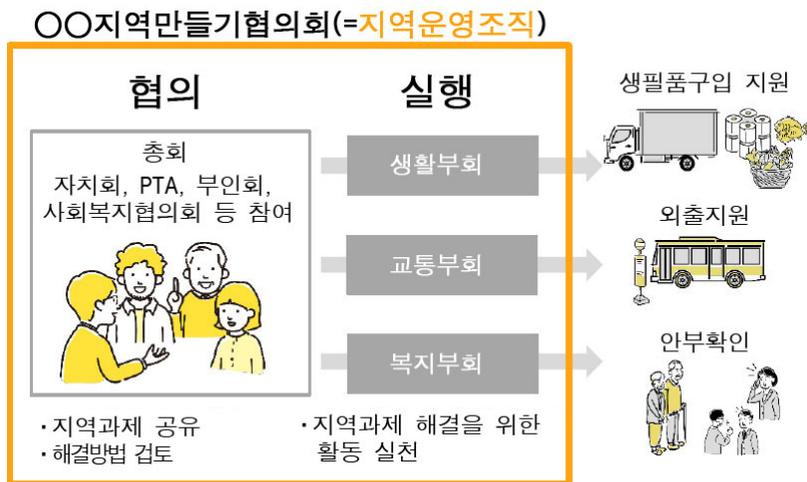
[그림 2-17] 특정지역만들기사업 협동조합 활용 방법 개념
 자료: 総務省(地域力創造グループ過疎対策室), 2022b, 特定地域づくり事業協同組合制度の概要について

□ 지역운영조직³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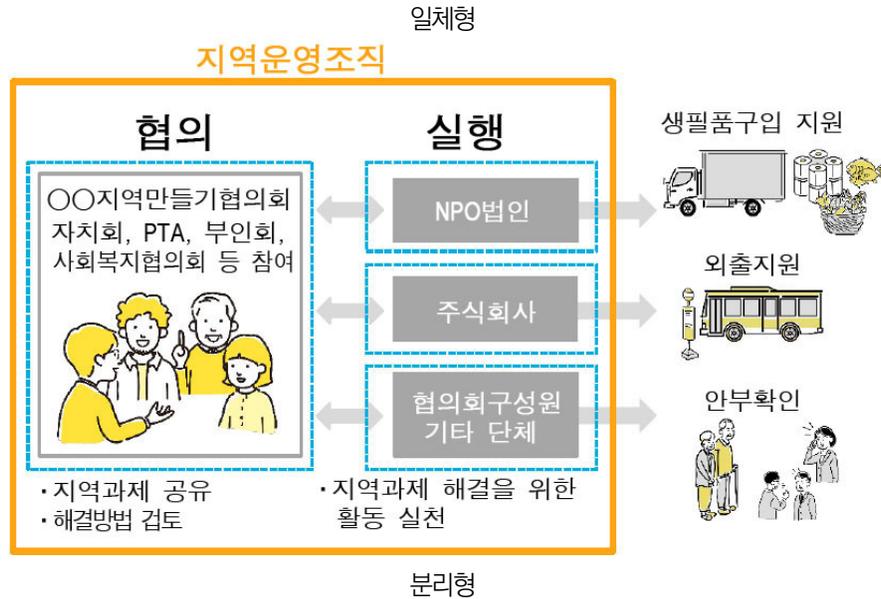
지역 운영조직은 지역의 생활을 돌보기 위해 지역에 생활하는 다양한 주체가 참여하는 협의조직이 인정한 지역운영 방침에 근거하여 지역 과제 해결을 위한 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천하는 조직이다((総務省(地域力創造グループ地域振興室), 2002).

지역운영조직의 형태는 협의기능과 실행 기능을 하나의 조직이 보유한 '일체형'과 협의 기능을 가진 하나의 조직아래 실행 기능은 별도로 독립된 조직으로 구성하여 상호 연계하는 '분리형' 등 다양한 형태가 있다(総務省(地域力創造グループ地域振興室), 2002).

지역운영조직은 주로 초등학교구를 중심 단위로 형성된 마을만들기 협의회가 주 대상이며 전국적으로 6,064개의 조직이 있다.



38) 総務省(地域力創造グループ地域振興室), 2002, 地域運営組織の形成及び持続的な運営について
 総務省(地域力創造グループ地域振興室), 2002, 地域運営組織の形成及び持続的な運営について



[그림 2-18] 지역운영조직 유형

자료: 総務省(地域力創造グループ地域振興室), 2002, 地域運営組織の形成及び持続的な運営について

지역운영조직의 사례를 보면, NPO법인, 지역자치 단체, 유한회사 등이 지역의 일용품 판매, 주유소 운영, 농산물 가공 개발, 스쿨버스 운영, 제설 작업, 고령자 돌봄 서비스 등 지역이 필요로 하는 다양한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관련사업으로 지역운영조직 형성과 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운영지역조직 형성은 지역실태파악 조사, 선진지조사, 지역연수회, 원크숍 자료 작성 등을 지원한다. 주민공동으로 추진하는 돌봄·교통·교류 활동 등 지역운영조직 운영을 지원한다.

5. 소결

1) 국내 사례 검토를 통한 전략 방향

선행연구와 정책사례를 ‘대응 기반 구축’ 부분과 ‘부문별 전략’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대응 기반 구축’ 부분에서는 다음 사항을 주요 방향으로 다루고 있다.

- 소멸에 대한 인식과 정책·사업의 관점 전환,
- 추진체계 구축과 TF 및 운영조직 구축,
- 법 또는 조례의 제정·개정,
- 행정적·재정적 지원,
- 정보 지원 및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 관련 계획 수립 또는 개편 등

‘부문별 전략’ 부분에서는 다음 부문에 대한 방향이 제안되었다.

- 정주기반/마을/공간 조성,
- 생활편의 및 복지 지원,
- 교류·상생/연계·협력 사업,
- 보육/교육/놀이 시설 및 프로그램 지원,
- 인구 유입/확충/정착 지원,
- 지역인재·인적자원 육성 및 인적역량 강화,
- 일자리/산업/자원개발/사회적경제 등

(1) 정책 대응 전략 방향

‘대응기반 구축’ 부분에서 다수 도출된 대응 방안으로부터 ‘정책적 대응 전략’ 방향을 모색하면

- ① 인식 개선 및 공감대 형성
- ② 인구 통계 및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 ③ 제도 기반 구축
- ④ 통합 추진·운영 체계 구축의 4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인식 개선 및 공감대 형성’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많은 선행 연구에서 마을소멸에 대한 인식과 관련 정책 및 사업의 관점 전환이 필요함을 지적하였다. 인구 감소 및 마을소멸의 문제는 단기간에 극복하겠다는 인식이 아니라 다양한 접근을 통해 이를 완화하고 해소하겠다는 인식에서 출발하여 노력이 지속되어야 한다. 인구정책을 추진할 때 국가 주도의 복지 정책, 저출산 방지 중심의 시책만으로는 지금의 위기가 극복되지 않으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삶의 질을 높이는 관점으로 전환하고 개인의 삶을 지원하는 역할로의 인식 전환이 선행되어야 한다(조진우, 2023)³⁹⁾.

둘째, 실태 진단을 위한 ‘인구 통계 및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지역 스스로 지역 특성에 적합한 시책을 개발·추진할 수 있도록 지자체별 인구 분석 통계 시스템 및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제공하여 각종 정보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셋째, ‘제도 기반 구축’이 요구된다. 인구감소 및 마을소멸 지역의 대응 정책

39) 조진우, 2023, 지역소멸 대응을 위한 지방자치의 법적 과제, 지방자치법연구 제77호 제1호, p.23, p.13

이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법률적 기반(법 또는 조례)의 구축 및 개정이 필요하다. 더불어 지역 여건과 수요에 따라 지원시책과 특례사항을 자율적으로 선택 운영하도록 하며 이를 위해 행정적·재정적 지원도 함께 마련되어야 한다.

넷째, '통합 추진 및 운영 체계'가 구축되어야 한다. 중앙-지방-마을, 지방 상호 간, 마을 상호 간 협력 및 연계를 강화하여 인구 감소에 공동으로 대응하고, 다양한 주체의 참여를 통해 지속가능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중앙과 지방이 유기적으로 협력하는 통합적 추진체계를 구축하고, 주민, NGO, 대학 및 연구원 등의 전문가 등도 시책 추진의 거버넌스에 참여하여 활성화를 유도하며, TF 및 운영조직을 구축하여 기능을 보다 강화·확대하도록 한다.

(2) 사업 전략 방향

'부문별 전략' 부분에서 다수 도출된 대응 방안으로부터 '사업 전략'을 구상하면

- ① 인구 부문 전략(인구 유치 및 정착, 관계인구, 지역인재 및 인적자원 발굴 육성)
- ② 공간 부문 전략(정주기반 조성, 생활편의 및 복지 지원, 농촌다운 경관 활용)
- ③ 경제 부문 전략(양질의 일자리, 지역 자원을 활용한 산업화, 6차 산업 촉진, 마을 산업 및 사회적 경제)
- ④ 커뮤니티 부문 전략(지역커뮤니티 형성, 지역간 연계협력 사업 추진)의 4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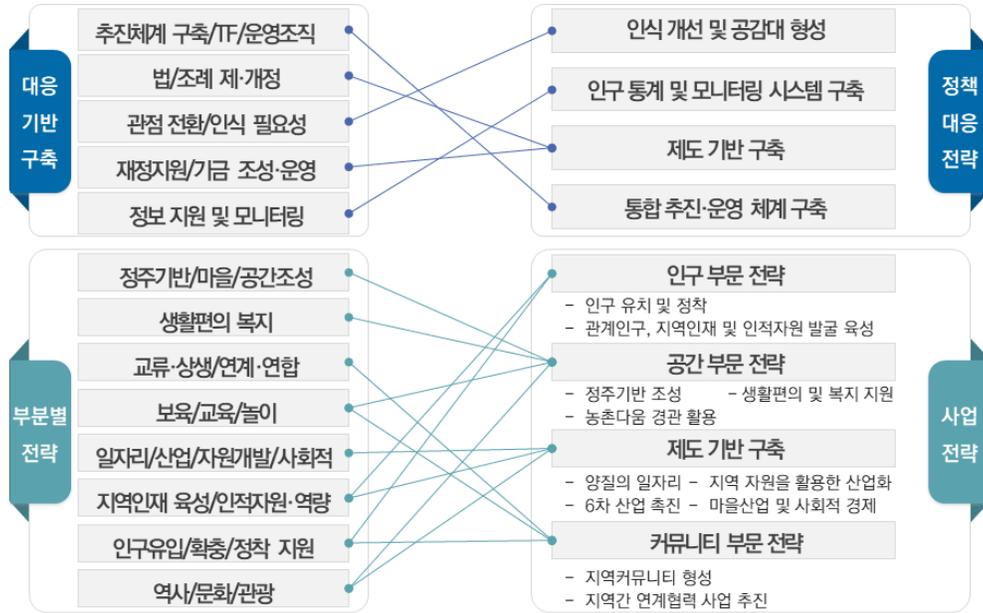
첫째, 인구 유입 및 인구 활력을 촉진하기 위한 '인구 부문 전략' 지원이 추진되어야 한다. 지역으로 새로운 인구의 흐름을 촉진하고 이들을 지역으로 유치하고 정착시킬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 정주 인구뿐만 아니라 '관계인구' 확충을 위한 사업도 고려해야 한다. 또한 자립하는 지역을 만들기 위해서는 지역인재 및 인적자원의 발굴·육성 전략이 추진되어야 하며, 인적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연계하여 운영하여 주민들이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둘째, 인구 부문 전략이 정착할 수 있도록 ‘공간 부문 대책’이 함께 시행될 필요가 있다. 인구 유입 및 정착을 유도하기 위한 전략이 추진되더라도 마을 인구들이 살아가는 공간과 생활환경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사업의 효과를 발휘할 수 없다. 따라서 삶의 질 만족도를 보장할 수 있는 수준의 정주기반/마을/공간을 조성하도록 하고, 생활편의 및 복지(보육, 교육, 돌봄, 놀이, 여가 등)를 지원(시설 및 프로그램 지원)하여 질 높은 생활의 실현이 가능한 마을 기능을 형성하도록 한다. 또한 도시에는 없는 농촌만이 가지고 있는 농촌다움 경관을 이용한 정책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셋째, 인구 감소의 원인으로 작용하는 기제인 ‘경제 부문의 활성화 전략’이 필요하다. 마을소멸 위기의 원인은 특히 지역의 일자리 부족 및 경제기반 부족 등과 밀접한 관련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경제 소득 창출을 유도할 수 있는 양질의 일자리 마련 방안을 구상하도록 한다. 그리고 마을 산업 및 자원개발 측면에서 지역 고유의 자원을 활용한 산업화 및 고부가가치화, 6차 산업화 촉진 방안도 제안되었다. 마을 주민이 주도하는 마을 산업(사회적 경제 등)을 육성함으로써 내부 마을경제 활성화 및 경제순환을 도모하여 전략사업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넷째, 인구 유출을 억제하고 활력있는 공동체를 유지할 수 있도록 ‘커뮤니티 부문 전략’이 요구된다. 인구 유출을 억제하고 다양한 사람들과 교류하며 커뮤니티를 맺음으로써 활력 있는 지역사회 공동체가 조성될 수 있도록 커뮤니티 형성을 촉진하며, 교류를 불러일으키는 지역만들기 및 지역 간 연계·협력 사업을 추진하여 지속가능한 지역활성화를 도모하도록 한다.



2) 일본 사례 검토를 통한 전략 방향

일본 정책사례 검토 결과를 바탕으로 정책적 대응 전략 방향과 부문별 사업 전략 방향, 마을재편 관련 방향을 도출하면 다음과 같다.

(1) 정책적 대응 전략 방향

정책적 대응 전략 방향으로는 ① 법률 제·개정, ② 지방자치단체 주체의 정책 추진체계 구축 및 재정적 지원책 마련, ③ 정부-지자체 간의 상호협의를 통한 계획 수립의 3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⁴⁰⁾

첫째, 정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해 법률을 제·개정하고, 관련 사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야 한다. 일본은 인구감소지역의 활성화 정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

40) 김현호 등, 2021, 국가위기 대응을 위한 지방소멸 방지전략의 개발, 한국지방행정연구원

기 위해 관련 법률을 제·개정하였다. 지방창생정책을 위해 2014년 「마을·사람·일자리 창생법」을 제정하였고, 과소지역의 지속적 발전지원을 위해서 「과소지역의 지속적 발전 지원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개정해 2021년 4월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2019년 12월에는 「지역인구 급감에 대처하기 위한 특정지역 만들기 사업추진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인구급감지역에서 특정마을만들기 사업을 경제살리기 시책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마을소멸 지역을 중심으로 종합적인 지원책을 담은 별도의 법률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둘째, 마을소멸 및 인구감소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 주체의 정책대응 추진체계를 구축하고 재정적 지원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일본에서는 인구감소에 대응하는 정책을 직접 추진해야 하는 지방자치단체를 주체로 하는 시책과 함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재정적 지원책 마련에 노력하고 있다. 지방창생전략의 경우 제1기 전략의 추진과정에서 중앙주도의 국민통합을 재구축하려는 시도라는 비판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제2기 전략에서는 지방자치단체를 주체로 하는 시책과 더불어 민간의 주체적 시책과의 연계 강화에 보다 초점을 두었다. 우리나라도 지방자치단체 스스로 자신의 지역에 맞는 활성화 정책을 수립·집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셋째, 정책의 수립과정에서 국가와 광역·기초자치단체 간의 상호 협의를 통한 계획 수립이 될 수 있도록 제도화가 필요하다. 특히 지역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해서 재원 마련이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해 다양한 재정지원과 더불어 세제개편을 통해 지역활성화 사업의 추진을 도모할 수 있는 체계적인 정책방안 모색이 필요한 시점이다.

(2) 사업 전략 방향

사업 전략 방향으로는 ① 마을 공간의 물리적 변화 대응 전략(빈집), ② 교류 및 연계 사업을 통한 마을 활성화, ③ 지역운영조직 형성 및 지원, ④ 소득 창출 및 일자리 마련 사업, ⑤ 행정적·공간적·기능적 재편의 5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인구감소로 야기된 마을 공간의 물리적 변화에 대한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인구감소에 의한 변화는 마을의 물리적 공간 침체와 빈집의 증가 등으로 연결되며, 정주환경의 질적 저하를 유발하여 타 지역으로 이주 및 인구감소로 인한 마을소멸을 가속화한다. 따라서 인구감소로 변화된 마을 공간에 대해 물리적 해결 방안을 어떻게 추구하고, 어떠한 전략을 수립해야 하는지에 대한 고찰이 요구된다. 마을 구조와 인구 구조의 상관관계 등 현재의 마을이 직면한 문제의 종합적인 분석과 종합적인 미래 발전 방향 등을 연계하여 사업의 특성과 방향이 정확하게 설정되어야 한다.

둘째, 교류 및 연계 사업을 통한 마을 활성화를 도모하여야 한다. 침체되어 있는 농촌마을을 재생하기 위해서는 마을 주민들 스스로 마을 활성화를 위한 관심과 자구책이 필요하며, 타 마을, 기관, 기업, 지자체 등과의 연계·교류를 통해 마을의 활성화를 도모해야 한다. 일본의 작은 농촌마을인 가와바 마을은 세타가야와 41년째 교류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학생들을 위한 자연학교와 계절교실, 어른들을 위한 농업기술교실, 모내기 및 벼 베기 체험, 사과 과수원 체험, 임대 텃밭 가꾸기, 수제 소바 만들기, 농가 지붕교체 실습, 산림 가꾸기, 목공예와 낚시 교실 등 다채로운 교류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마을소멸을 극복하고 농촌마을 활성화를 실현시켰다⁴¹⁾.

41) <https://m.blog.naver.com/newroad2015/222878304962>(일본 작은 농촌마을 가와바, 200만 관광객 몰리는 까닭은?)

셋째, 지역운영조직을 형성하고 활동을 지원한다. 지역 운영조직은 지역의 생활을 돌보기 위해 지역에 생활하는 다양한 주체(NPO법인, 지역자치 단체, 유한회사 등)가 참여하며, 협의조직이 인정한 지역운영 방침에 근거하여 지역 과제 해결을 위한 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천하는 조직이다. 지역운영조직은 일용품 판매, 주유소 운영, 농산물 가공 개발, 스쿨버스 운영, 제설 작업, 고령자 돌봄 서비스와 같이 돌봄·교통·교류 활동 등 지역이 필요로 하는 다양한 서비스를 실시·지원하고 있다. 이를 통해 농촌마을의 기본적인 정주생활 서비스의 안정적 공급을 지원할 수 있으며 마을 스스로 마을소멸에 대처하여 사회적 공동체 회복 및 유지에 기여할 수 있다.

넷째, 소득 창출 및 일자리 마련을 위한 경제적 활동 사업이 도입되어야 한다. 일본 가와바 마을의 전원플라자는 마을 살리기의 핵심 거점으로써 가와바를 상징하는 명소로 자리잡으며 지방소멸을 극복하는 대안이 되었다. 전원 플라자는 가와바를 농업과 관광을 결합한 관광 전원마을로 만들기 위해 설립하였는데, 농업과 임업을 주업으로 하는 주민의 소득 안정에도 크게 기여하고 주민을 위한 안정적인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다.⁴²⁾ 이처럼 마을소멸을 방지하고 대응하기 위해서는 소득 향상과 고용 증대를 도모할 수 있는 시설 등의 정비를 지원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행정적·공간적·기능적 재편 전략이다.

- 행정적 재편(마을 폐지 및 통합)은 주민의 우려와 마을기금의 통합 문제 등으로 인해 일본에서도 거의 없지만 행정에서 마을 통합을 전제로 한 마을연계 활동 시 지원 혜택을 높이는 등의 인센티브를 통해 추진할 수 있다. 일본의 후도지구 사례에서 마을 연합회를 만들어 마을연계 활동을 하면서

42) <https://m.blog.naver.com/newroad2015/222878304962> (일본 작은 농촌마을 가와바, 200만 관광객 몰리는 까닭은?)

단계적으로 마을 통합에 성공한 사례가 있다. 이를 위해 마을이 처한 문제를 이해하고 공감대 형성을 통해 단계적으로 추진하여야 할 것이다.

- 공간적 재편(집단 거주지 이전)은 마을 주민 거주지를 집단으로 이전하여 해당마을에 주민이 더 이상 거주하지 않게 하는 것이다. 마을 이전 정책은 지자체에서 마을 토지를 매입하여 공원 등 공공적인 목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전제가 되어야 한다.
- 기능적 재편(커뮤니티 재편)은 우선 해당 마을의 기능을 파악하여, 마을의 기능을 제고하여 거점 기능을 담당하게 하거나, 동일 생활권 단위의 행정리 마을들을 묶어 마을별로 다른 기능을 담당하도록 하여 연계·보완하도록 추진하여야 한다. 일본의 정책 사례에서 주목할 점은 지역의 사회서비스 제공이나 지역에서 필요한 일꾼의 확보를 위해 '지역운영조직'양성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제 3 장

청양군 마을 실태 및 지원사업 효과 분석

1. 청양군 인구 현황
2. 청양군 마을 인구 현황
3. 청양군 인구정책 추진 현황
4. 청양군 마을만들기사업 추진 현황 및 효과 분석
5. 소결

1. 청양군 인구 현황

1) 인구 및 세대 현황

청양군 인구는 2022년 12월 기준 30,991명으로 최근 5년간 매년 -1.5% 감소하고 있다(2018년 32,910명). 인구는 감소추세이나 세대는 2018년 16,274명에서 2022년 말 16,575명으로 세대당 인구는 2.02(2018년)에서 1.83명(2022)으로 많이 감소되지 않아 1인 가구가 많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3-1〉 최근 5년간 인구 및 세대 현황(명, %)

연도	총인구	세대수	세대당 인구	인구증가율(%)
2022	30,991	16,567	1.83	-0.23
2021	31,062	16,426	1.85	-1.64
2020	31,571	16,378	1.89	-2.44
2019	32,359	16,296	1.95	-1.67
2018	32,910	16,274	2.02	-1.54

자료: 청양군 내부자료

인구구조를 살펴보면 유소년인구 6.41%(1,939명), 생산가능인구 55.58%(16,821명), 노인인구 38.0%(11,506명)이다. 2020년과 비교해보면 유소년인구 6.88%(2020년)에서 6.41%(2022년), 생산가능인구 57.39%에서 55.58%, 고령인구 35.72%에서 38.02%로 나타나 유소년인구와 생산가능인구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노인인구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또한 청년인구(18-45세)를 살펴보면 2020년 6,956명에서 2022년 6,388명으로 568명 감소하였다. 청년의 해 선포식을 비롯하여 많은 청년 정책을 추진함에도 불구하고 청년인구 감소가 심각한 실정이다.

〈표 3-2〉 최근 3년간 인구 구조 현황(명, %, 12월 기준)

연 도	총인구	0~14세	15~64세	65세 이상	18~45세
2022	30,266	1,939 (6.41%)	16,821 (55.58%)	11,506 (38.02%)	6,388
2021	30,440	2,056 (6.75%)	17,092 (56.15%)	11,292 (37.1%)	6,490
2020	30,948	2,129 (6.88%)	17,760 (57.39%)	11,059 (35.73%)	6,956

자료: 청양군 내부자료

2) 자연적 인구 및 사회적 인구 증감 현황

청양군 자연적 인구 증감인 출생과 사망을 살펴보면 2022년 기준 출생 82명(2021년 87명, 전년대비 5명 감소), 사망 520명(2021년 489명, 31명 증가)로 출생자 수 대비 사망자 수가 많아 지속적으로 인구 감소 양상을 보이고 있다.

사회적 인구 증감을 살펴보면 2021년에는 전입자 수와 전출자 수가 동일하게 2,904명으로 사회적 인구가 감소하지 않았으나, 2022년 전입자 수 2,857명, 전출자 수는 2,599명으로 258명의 사회적 인구가 증가했다.

청양군은 고령화로 인한 사망 증가로 자연적 인구는 감소하고 있으나 전입 대비 전출인구가 적어 사회적 인구는 증가하고 있다.

〈표 3-3〉 청양군 자연적 인구 및 사회적 인구 증감(명)

연도	자연적 인구		사회적 인구	
	출생	사망	전입	전출
2021년	87	489	2,904	2,904
2022년	82	520	2,857	2,599

자료: 청양군 내부자료

읍면별로 살펴보면 전출보다 전입이 더 많은 읍면은 정산면, 화성면, 목면, 청남면, 남양면 순으로 사회적 인구가 증가하였고, 전입보다 전출이 더 많은 읍면은 대치면, 청양면, 비봉면, 장평면, 운곡면 순으로 사회적 인구가 감소하였다.

〈표 3-4〉 청양군 읍면별 인구 증감 현황(명)

구분	2021 총인구	2022 총인구	전입		전출		출생		사망	
			2021	2022	2021	2022	2021	2022	2021	2022
계	31,062	30,266	2,904	2,857	2,904	2,599	87	82	489	520
청양읍	10,138	9,983	1,116	1,169	1,129	1,045	48	43	110	106
운곡면	2,145	2,117	189	203	195	144	6	1	50	48
대치면	2,259	2,218	189	207	206	169	3	3	45	37
정산면	3,603	3,481	376	306	354	349	10	15	48	50
목면	1,518	1,481	136	110	127	105	4	2	36	30
청남면	1,961	1,828	156	121	154	138	4	4	31	50
장평면	2,318	2,268	162	168	169	120	5	4	45	61
남양면	2,758	2,655	220	215	219	215	1	3	49	61
화성면	2,217	2,141	186	174	168	177	1	5	38	41
비봉면	2,145	2,094	174	184	183	137	5	2	37	36

자료: 청양군 내부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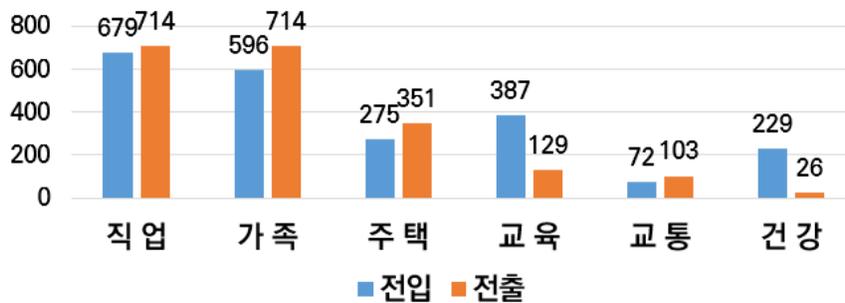
3) 전입·전출 사유

관내 전입자를 제외한 관외 전입자 사유를 살펴보면 직업 27.9%, 가족 24.5%, 교육 15.9%, 주택 11.3%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관외 전출자의 전출 사유를 살펴보면 직업과 가족이 32.8%로 가장 높으며 주택 16.2%, 교육 5.9%로 나타났다.

청양군은 직업의 사유로 사회적 인구 증감 변화가 높고 다음으로 가족의 사유로 변화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3-5〉 전출·전입 사유(명, %)

구분(관외)		합계	직업	가족	주택	교육	교통	건강	기타
전입	2022	2,432	679 (27.92)	596 (24.51)	275 (11.31)	387 (15.91)	72 (2.96)	229 (9.42)	194 (7.98)
	2021	2,475	658 (26.59)	638 (25.78)	410 (16.57)	286 (11.56)	93 (3.76)	189 (7.64)	201 (8.12)
전출	2022	2,174	714 (32.84)	714 (32.84)	351 (16.15)	129 (5.93)	103 (4.74)	26 (1.20)	137 (6.30)
	2021	2,475	775 (31.31)	892 (36.04)	369 (14.91)	149 (6.02)	76 (3.07)	28 (1.13)	186 (7.52)



[그림 3-1] 2022년 전입·전출 사유

2. 청양군 마을 인구 현황

청양군 인구 현황 분석은 읍면 단위에서는 읍면별 인구 현황, 읍면별 인구 구조 현황을 살펴보고, 행정리 단위로는 2013년, 2018년, 2023년 시계열로 분석하였다. 분석 내용은 행정리별 인구 변화, 행정리 고령인구 비율(70세 이상) 변화, 청년인구(20-44세) 변화, 청년 여성인구(여성 20-44세) 변화, 전입인구 변화, 전출인구 변화, 과소고령마을 변화, 마을소멸지수 변화를 분석하였다.

〈표 3-6〉 마을 인구 분석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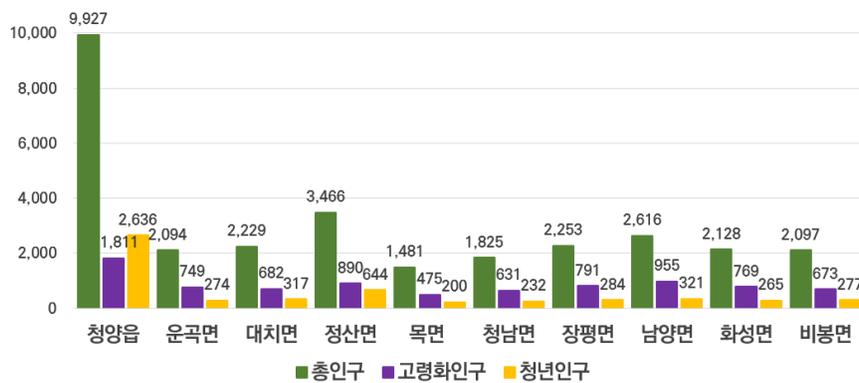
구분		내용
공간 단위	읍면 단위	인구 현황
		인구 구조 현황
	행정리 단위	행정리별 인구 변화
		행정리 고령인구 비율(70세 이상)
		청년인구(20-44세) 변화
		청년 여성인구(여성 20-44세) 변화
		전입인구 변화,
		전출인구 변화
		과소고령마을 변화
		마을소멸지수 변화
시간적 범위	2013년, 2018년, 2023년 2월 기준 인구	
	전입인구과 전출인구는 이전 연도 1년간	

1) 읍면별 인구 현황

청양군은 인구 33%가 청양읍에 압도적으로 거주하고 정산면 11.5%, 남양면 8.7% 거주하고 있다. 청양군 전체 70세 이상 고령인구 비율은 28.0%이고 청양읍과 정산면을 제외하고 모두 30% 이상 고령인구가 거주하고 있다. 청년인구(20-44세)는 청양읍(26.6%)에 가장 많이 거주하고, 정산면 18.6%, 목면 13.5% 순으로 도출되었다.

〈표 3-7〉 청양군 읍면별 인구 현황(명)

구분	법정리수	행정리수	2023 총인구	인구 비율	고령 인구수 (70세)	고령 인구 비율	청년 인구수 (20-44)	청년인구 비율
계	119	183	30,116	100	8,426	28.0%	5,450	18.1%
청양읍	11	26	9,927	33.0	1,811	18.2%	2,636	26.6%
운곡면	10	15	2,094	7.0	749	35.8%	274	13.1%
대치면	16	17	2,229	7.4	682	30.6%	317	14.2%
정산면	16	21	3,466	11.5	890	25.7%	644	18.6%
목면	7	14	1,481	4.9	475	32.1%	200	13.5%
청남면	11	17	1,825	6.1	631	34.6%	232	12.7%
장평면	13	17	2,253	7.5	791	35.1%	284	12.6%
남양면	13	27	2,616	8.7	955	36.5%	321	12.3%
화성면	12	15	2,128	7.1	769	36.1%	265	12.5%
비봉면	10	14	2,097	7.0	673	32.1%	277	13.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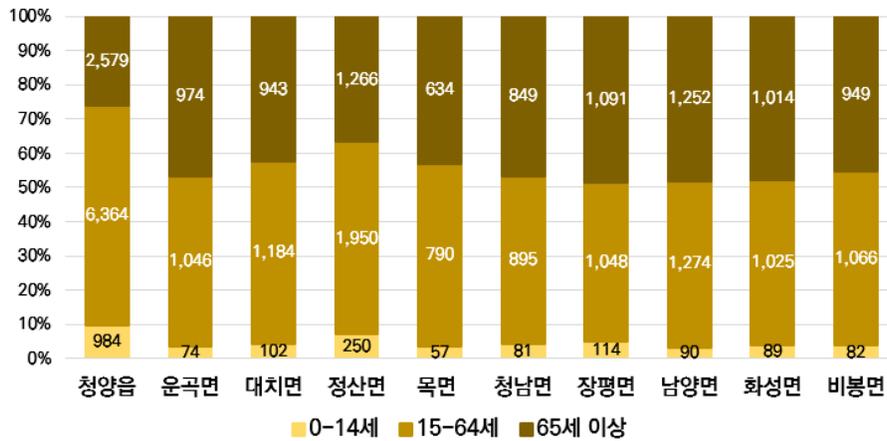


[그림 3-2] 읍면별 인구 현황

청양군 인구 구조를 살펴보면 15세 미만 6.4%, 15-64세 55.3%, 65세 이상 38.4% 인구 구조를 보이고 있으며 15세 미만 인구는 청양읍이 9.9%, 정산면 7.2%로 높으며 15-64세 인구는 청양읍만 64.1%로 매우 높고, 65세 이상 인구는 청양읍과 정산면을 제외하고 모두 40%를 넘고 있다.

〈표 3-8〉 청양군 읍면별 인구 구조 현황(명)

구분	총인구수	0~14세	0~14세 비율	15~64세	15~64세 비율	65세 이상	65세 이상 비율
계	30,116	1,923	6.4%	16,642	55.3%	11,551	38.4%
청양읍	9,927	984	9.9%	6,364	64.1%	2,579	26.0%
운곡면	2,094	74	3.5%	1,046	50.0%	974	46.5%
대치면	2,229	102	4.6%	1,184	53.1%	943	42.3%
정산면	3,466	250	7.2%	1,950	56.3%	1,266	36.5%
목면	1,481	57	3.8%	790	53.3%	634	42.8%
청남면	1,825	81	4.4%	895	49.0%	849	46.5%
장평면	2,253	114	5.1%	1,048	46.5%	1,091	48.4%
남양면	2,616	90	3.4%	1,274	48.7%	1,252	47.9%
화성면	2,128	89	4.2%	1,025	48.2%	1,014	47.7%
비봉면	2,097	82	3.9%	1,066	50.8%	949	45.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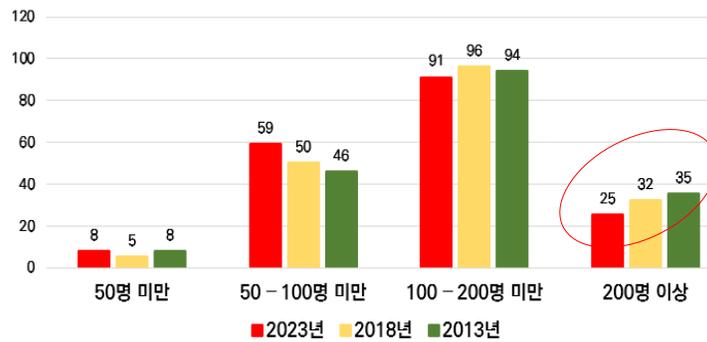
[그림 3-3] 읍면별 인구 구조 그래프

2) 행정리별 인구 현황

행정리마을 인구 현황을 2013년, 2018년, 2023년 시계열로 살펴보면 인구 50명 미만 행정리는 2018년(5개)만을 제외하고 2013년과 2018년은 8개 마을로 동일하다. 인구 50-100명 미만 행정리 마을은 2013년 46개, 2018년 50개, 2023년 59개로 조금씩 늘어나고 있다. 인구 200명 이상 많은 인구가 거주하는 행정리는 2013년 35개에서 2023년 25개로 10개 마을이 줄어들었다.

〈표 3-9〉 행정리 인구 분포

구분	2023년		2018년		2013년	
	행정리 수	비율	행정리 수	비율	행정리 수	비율
50명 미만	8	4.4	5	2.7	8	4.4
50 - 100명 미만	59	32.2	50	27.3	46	25.1
100 - 200명 미만	91	49.7	96	52.5	94	51.4
200명 이상	25	13.7	32	17.5	35	19.1
합계	183	100.0	183	100.0	183	100.0



[그림 3-4] 행정리별 시계열 인구 분포

인구 70명 미만 분포를 살펴보면 2013년 19개, 2018년 17개, 2023년 22개로 크게 변화는 나타나지 않았다. 읍면별로는 2013~2023년까지 남양면과 청남면에 과소인구 마을이 있다. 청양군은 타 시도에 비해 인구 과소지역이 거의 없다.

3) 행정리 마을 연평균 인구 증감 분석(2014~2023년)

행정리 183개 마을의 10년간 연평균 인구 증감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청양군은 29.0% 행정리가 연평균 인구 증가, 71.1% 행정리가 연평균 인구 감소하고 있다. 특히 2% 이상 연평균 인구가 증가하고 있는 행정리 6.6%, -2% 이상 연평균 인구 감소 행정리 20.8%로 타 시군과 유사하게 인구 감소가 심각하다.

〈표 3-11〉 행정리 마을의 10년간 연평균 인구 증감 실태

증감 구분	행정리 수	비율
2% 이상 증가	12	6.6%
1~2% 증가	18	9.8%
0 - 1% 증가	23	12.6%
0- -1% 감소	45	24.6%
-1~ -2% 감소	47	25.7%
-2% 이상 감소	38	20.8%
총합계	183	100%

인구 증가 2% 이상 된 읍면은 청양읍 33.3%, 남양면 25.0%이고 1~2% 증가된 읍면은 대치면, 목면, 장평면이다. 2% 이상 인구가 증가된 행정리는 벽천1리, 개곡리, 내초리, 송방1리, 교월3리, 신대1리, 온암1리, 신왕1리, 금천리, 청소2리, 교월2리, 송암1리이며, 청양읍 벽천1리가 8.2%의 연평균 인구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2% 이상 감소가 많이 된 읍면으로는 청양읍 21.1%, 청남면 18.4%, 장평면 15.8%이며 -1~-2% 감소가 많이 된 읍면은 청양읍, 정산면, 비봉면, 장평면으로 나타났다. 3% 이상 연평균인구가 감소된 행정리는 죽림리, 산정1리, 대봉2리, 지곡1리, 구룡1리, 천내1리, 정좌1리, 미당1리, 읍내2리, 학당2리, 천장리, 화산2리이며, 장평면 죽림리(-4.5%)가 연평균인구감소가 가장 심각한 마을이다.

〈표 3-12〉 행정리 마을의 10년간 연평균 인구 증감 읍면별 실태

구분	증가						감소						계
	2% 이상		1~2%		0 - 1%		0 - -1%		-1~ -2%		-2% 이상		
청양읍	4	33.3%	1	5.6%	2	8.7%	5	11.1%	6	12.8%	8	21.1%	26
운곡면	1	8.3%	1	5.6%	1	4.3%	6	13.3%	3	6.4%	3	7.9%	15
대치면	1	8.3%	4	22.2%	5	21.7%	3	6.7%	4	8.5%		0.0%	17
정산면	1	8.3%		0%	4	17.4%	5	11.1%	6	12.8%	5	13.2%	21
목면	1	8.3%	4	22.2%	2	8.7%	1	2.2%	4	8.5%	2	5.3%	14
청남면	1	8.3%	2	11.1%		0%	4	8.9%	3	6.4%	7	18.4%	17
장평면		0%	3	16.7%		0%	3	6.7%	5	10.6%	6	15.8%	17
남양면	3	25.0%	1	5.6%	5	21.7%	6	13.3%	7	14.9%	5	13.2%	27
화성면		0%	1	5.6%	2	8.7%	7	15.6%	3	6.4%	2	5.3%	15
비봉면		0%	1	5.6%	2	8.7%	5	11.1%	6	12.8%		0.0%	14

〈표 3-13〉 연평균인구증감율 상위, 하위 마을

구분	증가		구분	감소	
	행정리명	연평균인구 증감율		행정리명	연평균인구 증감율
목면	송암2리	2.0%	장평면	죽림리	-4.5%
청양읍	교월2리	2.2%	화성면	산정1리	-4.2%
청남면	청소2리	2.4%	남양면	대봉2리	-4.0%
남양면	금천리	2.7%	목면	지곡1리	-3.8%
남양면	신왕1리	2.8%	남양면	구룡1리	-3.7%
남양면	운암1리	3.0%	청남면	천내1리	-3.3%
운곡면	신대1리	3.3%	청양읍	정좌1리	-3.2%
청양읍	교월3리	3.6%	장평면	미당1리	-3.1%
청양읍	송방1리	3.7%	청양읍	읍내2리	-3.1%
정산면	내초리	3.7%	청양읍	학당2리	-3.1%
대치면	개곡리	4.5%	정산면	천장리	-3.0%
청양읍	벽천1리	8.2%	장평면	화산2리	-3.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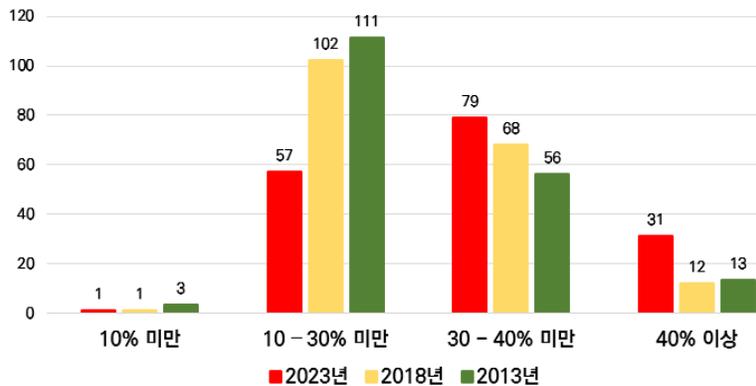
4) 행정리 고령인구 비율(70세 이상) 변화 분석

(1) 고령인구 비율(70세 이상)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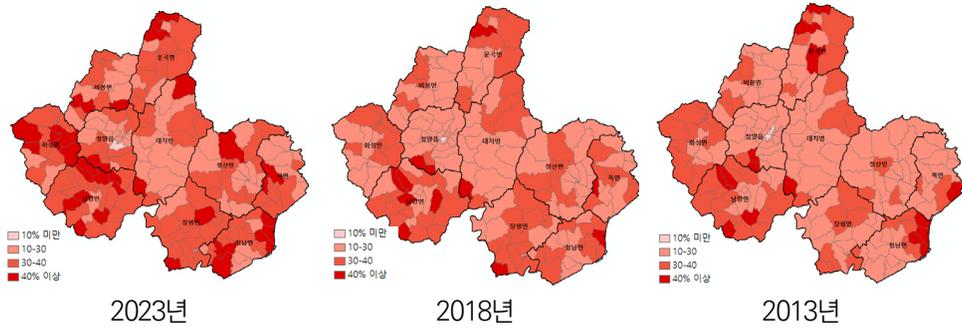
농촌은 인구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매우 높기에 65세 기준이 아닌 70세 고령인구 비율을 살펴보았다. 70세 이상 고령인구 비율 행정리 분석 결과 40% 이상 거주하는 행정리는 2013년 13개, 2018년 12개, 2023년 31개로 2013년 대비 고령인구가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30% 이상으로 거주하는 행정리는 2013년 69개(37.7%)에서 2023년 110개(60.1%)로 41개(22.4%) 마을이 증가되어 고령화가 심각하게 진행된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 3-14〉 행정리 고령인구 변화 분석(70세 이상)

구분	2023년		2018년		2013년	
	행정리 수	비율	행정리 수	비율	행정리 수	비율
10% 미만	1	0.5	1	0.5	3	1.6
10 - 30% 미만	57	31.1	102	55.7	111	60.7
30 - 40% 미만	79	43.2	68	37.2	56	30.6
40% 이상	31	16.9	12	6.6	13	7.1
합계	183	100.0	183	100.0	183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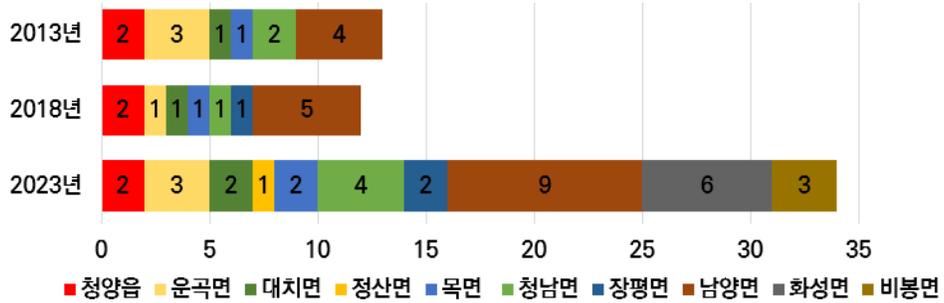
[그림 3-7] 행정리 고령인구(70세 이상) 변화 분석 그래프



[그림 3-8] 청양군 70세 이상 고령화율 행정리 인구 분포

(2) 고령인구(70세 이상) 40% 이상 행정리 분석

70세 이상 고령인구 40% 이상 거주하고 있는 행정리를 읍면별로 살펴보면 2013년에는 운곡면이 20.0%로 높았으나 2018년에는 남양면이 18.5%로 높았다가 2023년에는 화성면(40.4%)과 남양면(33.3%)이 높게 도출되었다.



[그림 3-9] 읍면별 행정리 고령인구 40% 이상 그래프

〈표 3-15〉 읍면별 행정리 고령인구 40% 이상 분포

구분	행정리수	2023년		2018년		2013년	
		행정리수	비율	행정리수	비율	행정리수	비율
청양읍	26	2	7.7%	2	7.7%	2	7.7%
운곡면	15	3	20.0%	1	6.7%	3	20.0%
대치면	17	2	11.8%	1	5.9%	1	5.9%
정산면	21	1	4.8%	0	0%	0	0%
목면	14	2	14.3%	1	7.1%	1	7.1%
청남면	17	4	23.5%	1	5.9%	2	11.8%
장평면	17	2	11.8%	1	5.9%	0	0%
남양면	27	9	33.3%	5	18.5%	4	14.8%
화성면	15	6	40.0%	0	0%	0	0%
비봉면	14	3	21.4%	0	0%	0	0%
계	183	34	18.6%	12	6.6%	13	7.1%



[그림 3-10] 고령인구(70세 이상) 40% 이상 행정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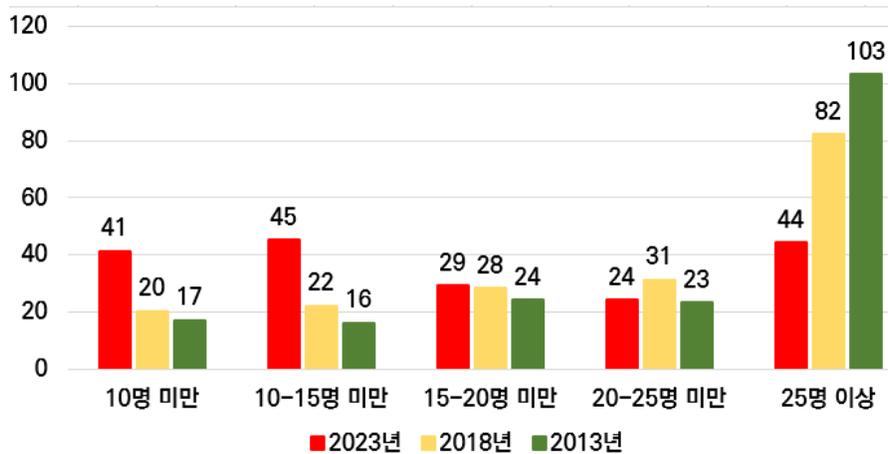
주: 붉은색 고령인구(70세 이상) 40% 이상 행정리

5) 청년인구(20-44세) 변화 분석

청년인구는 20-39세로 구분하여 분석하지만 현재 청년인구가 농촌지역에는 많이 없기에 청년인구를 확대하여 20-44세로 분석하였다. 청년인구(20-44세) 10명 미만 행정리 마을은 2013년 17개에서 2018년 20개였다가 2023년에는 41개로 2018년 대비 2배 이상 증가하였다. 또한 25명 이상 거주하는 행정리는 2013년에는 103개 행정리로 56.3%였다가 2023년에는 44개 마을 24.0%로 2배 이상 감소되었다.

〈표 3-16〉 행정리 청년인구(20-44세) 변화 분석

구분	2023년		2018년		2013년	
	행정리 수	비율	행정리 수	비율	행정리 수	비율
10명 미만	41	22.4	20	10.9	17	9.3
10-15명 미만	45	24.6	22	12.0	16	8.7
15-20명 미만	29	15.8	28	15.3	24	13.1
20-25명 미만	24	13.1	31	16.9	23	12.6
25명 이상	44	24.0	82	44.8	103	56.3
합계	183	100.0	183	100.0	183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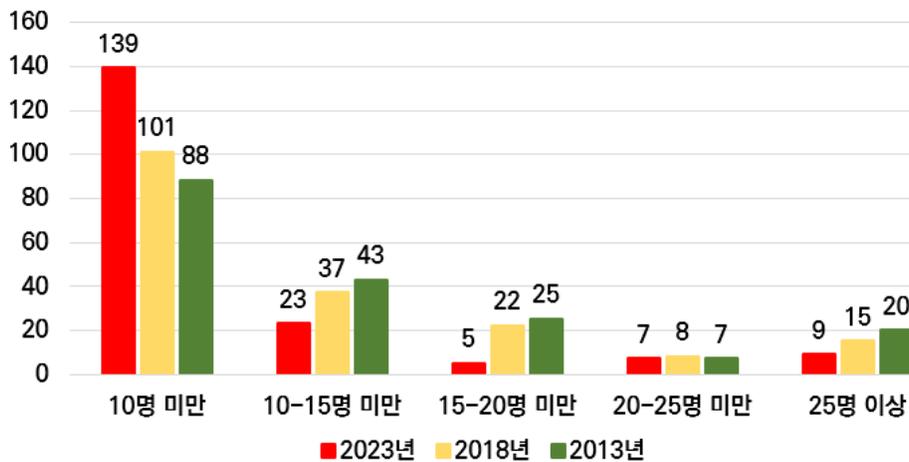
[그림 3-11] 행정리 청년인구(20-44세) 변화 그래프

6) 청년 여성인구(여성 20-44세) 변화 분석

청년 여성인구(20-44세) 시계열 분석 결과 청년 여성 10명 미만이 거주하는 행정리는 2013년에는 48.1% 88개 마을에서 2023년에는 76.0% 139개 마을로 약 30% 마을이 증가하였다. 시간이 지날수록 농촌마을에 청년인구 뿐 아니라 청년 여성인구 감소세도 뚜렷하게 나타난다.

〈표 3-17〉 행정리 청년 여성 인구(20-44세) 변화 분석

구분	2023년		2018년		2013년	
	행정리 수	비율	행정리 수	비율	행정리 수	비율
10명 미만	139	76.0	101	55.2	88	48.1
10-15명 미만	23	12.6	37	20.2	43	23.5
15-20명 미만	5	2.7	22	12.0	25	13.7
20-25명 미만	7	3.8	8	4.4	7	3.8
25명 이상	9	4.9	15	8.2	20	10.9
합계	183	100.0	183	100.0	183	100.0



[그림 3-12] 행정리 청년 여성인구(20-44세) 변화 그래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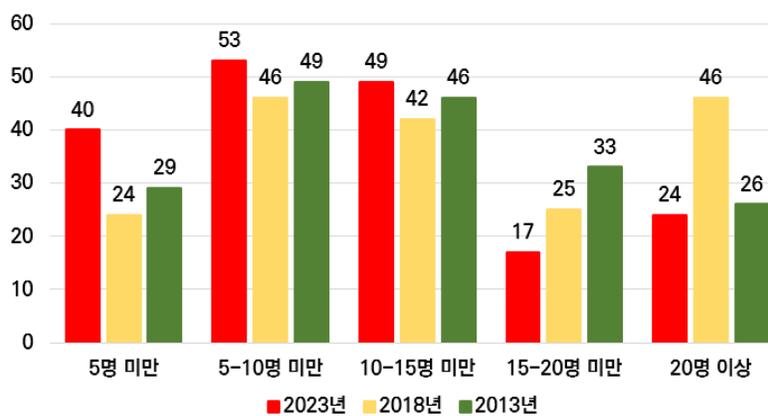
7) 전입인구 변화 분석

전입인구는 2013년 2,775명, 2018년 3,600명, 2023년 2,796명으로 2018년에는 타 연도보다 800명 이상 전입인구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과거에는 15명 이상 유입된 마을 비율이 높았다가 2023년에는 5명 이하로 유입되는 마을이 증가되었다.

〈표 3-18〉 행정리 전입인구 변화 분석

구분	2023년		2018년		2013년	
	행정리 수	비율	행정리 수	비율	행정리 수	비율
5명 미만	40	21.9	24	13.1	29	15.8
5-10명 미만	53	29.0	46	25.1	49	26.8
10-15명 미만	49	26.8	42	23.0	46	25.1
15-20명 미만	17	9.3	25	13.7	33	18.0
20명 이상	24	13.1	46	25.1	26	14.2
합계	183	100.0	183	100.0	183	100.0

주: 전입인구 수 2013년 2,775명, 2018년 3,600명, 2023년 2,796명



[그림 3-13] 전입인구 그래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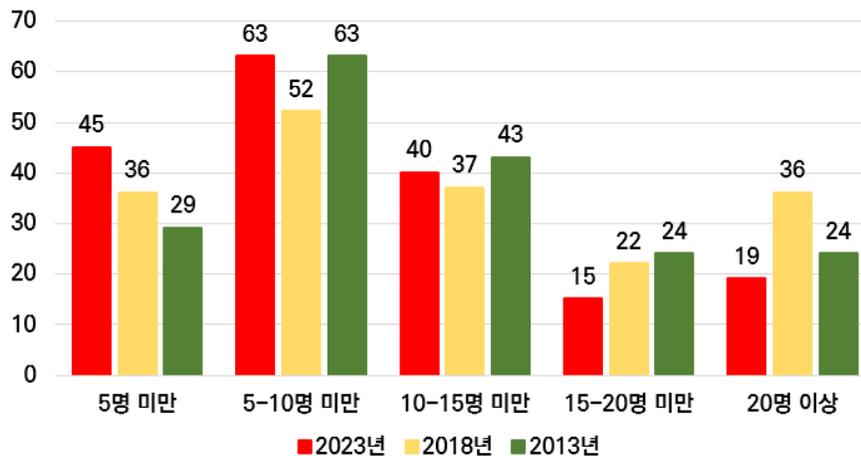
8) 전출인구 변화 분석

전출인구는 2013년 2,634명, 2018년 3,085명, 2023년 2,621명으로 앞에서 분석한 전입인구보다 다소 적어 청양군은 사회적 인구 증가가 일어나고 있다. 타 시군은 전입인구보다 전출인구가 더 많아 사회적 인구 감소가 일어나고 있는데 청양군은 전입인구 수가 더 많아 효과적인 인구정책을 수립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표 3-19〉 행정리 전출인구 변화 분석

구분	2023년		2018년		2013년	
	행정리 수	비율	행정리 수	비율	행정리 수	비율
5명 미만	45	24.6	36	19.7	29	15.8
5-10명 미만	63	34.4	52	28.4	63	34.4
10-15명 미만	40	21.9	37	20.2	43	23.5
15-20명 미만	15	8.2	22	12.0	24	13.1
20명 이상	19	10.4	36	19.7	24	13.1
합계	183	100.0	183	100.0	183	100.0

주: 전출인구 수 2013년 2,634명, 2018년 3,085명, 2023년 2,621명



[그림 3-14] 전출인구 그래프

9) 과소고령마을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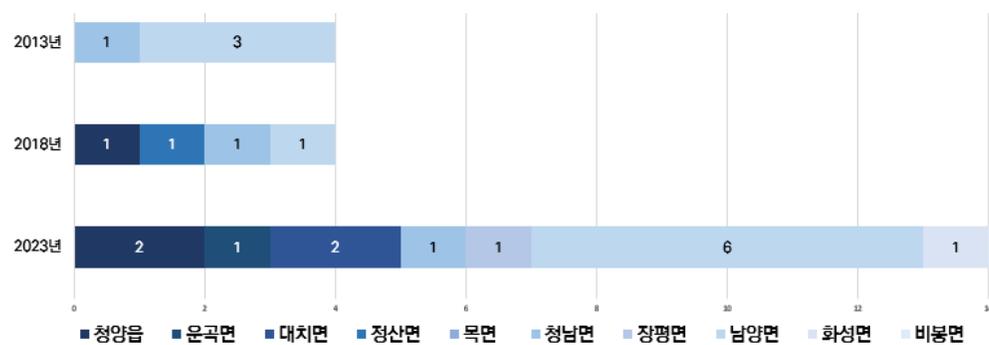
인구 70명 이하이면서 65세 고령화율 50% 이상 행정리 마을을 ‘과소고령마을’로 명명하고 분석한 결과 2013~2018년에는 4개 마을이었다가 2023년 10개가 증가한 14개 마을로 도출되었다.

〈표 3-20〉 과소고령마을 변화 분석(인구 70명 이하 and 65세 고령화율 50% 이상)

구분	행정리수	2023년		2018년		2013년	
		행정리수	비율	행정리수	비율	행정리수	비율
청양읍	26	2	7.7%	1	3.8%	0	0%
운곡면	15	1	6.7%	0	0%	0	0%
대치면	17	2	11.8%	0	0%	0	0%
정산면	21	0	0%	1	4.8%	0	0%
목면	14	0	0%	0	0%	0	0%
청남면	17	1	5.9%	1	5.9%	1	5.9%
장평면	17	1	5.9%	0	0%	0	0%
남양면	27	6	22.2%	1	3.7%	3	11.1%
화성면	15	1	6.7%	0	0%	0	0%
비봉면	14	0	0%	0	0%	0	0%
계	183	14	7.7%	4	2.2%	4	2.2%

주: 2018년: 남양면 매곡2리, 정산면 내초리, 청남면 천내2리, 청양읍 정좌2리

2013년: 청남면 천내2리, 남양면 매곡2리, 신왕1리, 운암1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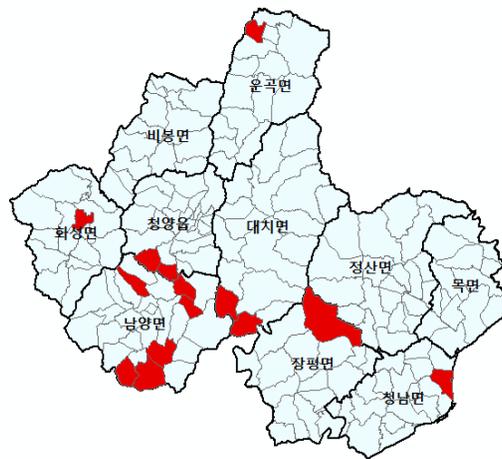


[그림 3-15] 과소고령마을(인구 70명 이하 & 65세 고령화 50% 이상)

2013년에는 남양면 3개, 청남면 1개 마을, 2018년 청양읍, 정산면, 청남면, 남양면 각각 1개씩, 2023년에는 남양면 6개, 청양읍과 대치면 2개, 운곡면, 청남면, 장평면, 화성면에 각각 1개씩의 과소고령마을이 도출되었다.

〈표 3-21〉 2023년 과소고령마을 현황(인구 70명 and 65세 고령화율 50% 이상)

시군명	읍면명	법정리	행정리	2023년 총인구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율
청양군	청양읍	정좌리	정좌2리	49	63.3%
청양군	청양읍	정좌리	정좌3리	67	59.7%
청양군	운곡면	미량리	미량2리	67	53.7%
청양군	대치면	개곡리	개곡리	48	52.1%
청양군	대치면	구치리	구치리	67	61.2%
청양군	청남면	천내리	천내2리	51	52.9%
청양군	장평면	적곡리	도림리	53	52.8%
청양군	남양면	구룡리	구룡2리	65	52.3%
청양군	남양면	금정리	금정1리	57	52.6%
청양군	남양면	매곡리	매곡2리	47	63.8%
청양군	남양면	온암리	온암1리	40	50.0%
청양군	남양면	온암리	온암2리	65	52.3%
청양군	남양면	용두리	용두2리	40	50.0%
청양군	화성면	광평리	광평리	69	53.6%



[그림 3-16] 2023년 과소고령마을 분포

주: 붉은색 과소고령마을

※ 과소고령마을 (인구 50명 이하 & 65세 고령화 50% 이상) 현황

- 일반적으로 과소고령마을 또는 한계마을을 분석할 때 인구 50명 이하 & 65세 고령화 50% 이상으로 분석함
- 그러나 청양군은 이 기준을 사용할 때 2013년과 2018년은 1개 마을, 2023년 5개 마을로 거의 분포되지 않아 기준을 인구 70명으로 변경하여 분석함

< 표 > 읍면별 과소고령마을 변화 분석(인구 50명 & 65세 고령화율 50% 이상)

구분	행정리수	2023년		2018년		2013년	
		행정리수	비율	행정리수	비율	행정리수	비율
청양읍	26	1	3.8%	0	0%	0	0%
운곡면	15	0	0%	0	0%	0	0%
대치면	17	1	5.9%	0	0%	0	0%
정산면	21	0	0%	0	0%	0	0%
목면	14	0	0%	0	0%	0	0%
청남면	17	0	0%	0	0%	0	0%
장평면	17	0	0%	0	0%	0	0%
남양면	27	3	11.1%	1	3.7%	1	3.7%
화성면	15	0	0%	0	0%	0	0%
비봉면	14	0	0%	0	0%	0	0%
계	183	5	2.7%	1	0.5%	1	0.5%

10) 마을소멸지수 시계열 분석

마을소멸지수를 적용한 2023년 청양군 행정리 마을소멸 단계를 살펴보면 마을소멸고위기 마을 20개(10.9%), 마을소멸위기 마을 63개(34.4%), 마을소멸진입마을 66개(36.1%), 마을소멸보통 마을 21개(11.5%)로 도출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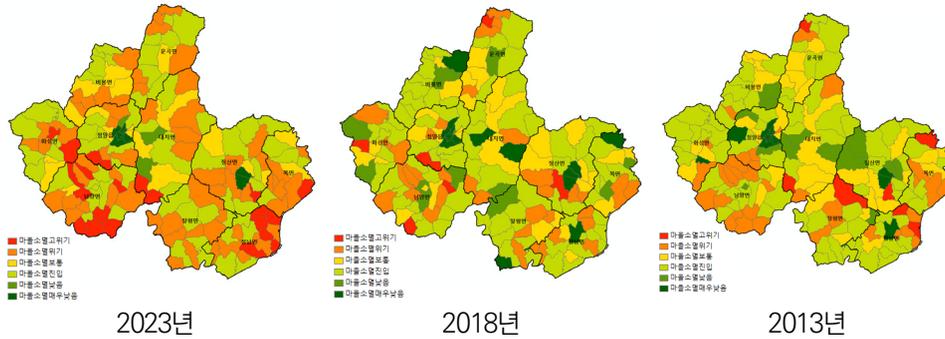
이를 시계열로 분석하면 마을소멸고위기 마을이 2013년과 2018년에는 7개 3.8%에서 2023년 20개 10.9%로 약 6% 이상 증가하였고, 마을소멸위기 마을은 약 20%였다가 현재 34.4%로 2배 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마을소멸진입 구간은 2013년 81개 44.3%에서 2023년 66개 36.1%로 줄어들어 과거 마을소멸진입 구간의 마을이 마을소멸위기 구간으로 전이된 것으로 나타났다. 동일하게 마을소멸보통인 마을도 35개 19.1%에서 2023년 21개 11.5%로 줄어들어 마을소멸보통과 마을소멸진입 구간의 행정리 마을들이 소멸위기마을로 전이된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2013년 마을소멸매우낮음은 15개 8.2% 마을에서 2023년 10개 5.5% 마을로 5개 감소되었다.

〈표 3-22〉 마을소멸지수별 행정리 분포

구분		범례	지수	2023년		2018년		2013년	
소멸 위기 마을	마을소멸 고위기		0.2 미만	20	10.9%	7	3.8%	7	3.8%
	마을소멸 위기		0.2~0.5 미만	63	34.4%	36	19.7%	32	17.5%
마을소멸 진입			0.5~1.0 미만	66	36.1%	77	42.1%	81	44.3%
마을소멸 보통			1.0~1.5 미만	21	11.5%	33	18.0%	35	19.1%
마을소멸 낮음			1.5~2.0 미만	3	1.6%	12	6.6%	13	7.1%
마을소멸 매우 낮음			2.0 이상	10	5.5%	18	9.8%	15	8.2%



[그림 3-17] 청양군 마을소멸지수 분포

마을소멸고위기 마을은 2023년 기준 남양면 8개, 청남면 4개, 청양읍과 대치면과 화성면 2개로 도출되었다. 청양읍 정좌2리와 3리는 2018년부터 마을소멸고위기 마을이고, 대치면 구치리, 청남면 내직1리, 남양면 매곡2리와 용구2리는 과거부터 마을소멸고위기 마을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3-23> 마을소멸고위기 마을 목록

읍면명	2023년	2018년	2013년
청양읍	정좌2리, 정좌3리	정좌2리, 정좌3리	
운곡면		미량2리	미량2리
대치면	개곡리, 구치리		구치리
정산면	덕성1리	신덕리	덕성2리
목면	신흥2리		송암2리
청남면	내직1리, 내직2리, 중산리, 천내1리		내직1리, 천내2리
장평면			도림리
남양면	구룡2리, 매곡2리, 신왕1리, 온암1리, 온암2리, 온작3리, 용두2리, 용마1리	매곡2리, 용두2리	
화성면	광평리, 매산2리	농암2리	
계	20개	7개	7개



[그림 3-18] 마을소멸고위기 행정리 시계열 분포

마을소멸매우낮음 마을은 2013년 15개, 2018년 18개, 2023년 10개 마을이며 2013년 대비 2023년 마을을 비교해보면 청양읍과 정산면을 제외한 모든 마을이 마을소멸매우낮음 마을 구간에서 제외되어 마을소멸이 점점 위기임을 알 수 있다.

<표 3-24> 마을소멸매우낮음 마을 목록

구분	읍면명	2023년	2018년	2013년
마을소멸 매우 낮음	청양읍	교월2리, 벽천1리, 송방1리, 읍내1리, 읍내2리, 읍내3리, 읍내4리, 읍내5리	교월2리, 벽천1리, 송방1리, 송방2리, 읍내2리, 읍내4리, 읍내3리, 읍내5리	교월2리, 벽천1리, 송방1리, 송방2리, 읍내1리, 읍내3리, 읍내2리, 읍내4리, 읍내5리, 장승2리
	대치면		대치리, 주정1리	
	정산면	서정1리, 서정2리	서정1리, 서정2리, 역촌1리	서정1리, 서정2리
	목면		송암2리	
	청남면		청소1리	청소1리
	장평면		구룡리, 장평리	장평리
	화성면			산정1리
	비봉면		관산리	
계		10개	18개	15개

3. 청양군 인구정책 추진 현황

청양군은 인구 3만 명 유지를 목표로 전입 및 귀농·귀촌 지원, 결혼·출산·보육 지원, 노후생활 및 건강관리 지원, 지역인재 육성, 기업 유치, 일자리 창출, 정주여건 개선 7대 전략과 15대 전략과제를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다.

〈표 3-25〉 청양군 인구정책 추진 전략 및 과제

전략	과제
1. 전입 및 귀농·귀촌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귀농·귀촌인 정착 인프라 구축 • 전입자에 대한 다양한 시책 지원
2. 결혼·출산·보육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년층의 결혼 후 지역 내 정착 지원 • 양육 친화 환경 조성 및 맞춤형 보육 서비스 제공
3. 노후생활 및 건강관리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행복한 노후생활을 위한 맞춤형 통합돌봄서비스 제공 • 다양한 보건 프로그램을 통한 체계적인 건강관리
4. 지역인재 육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학기금 효율적 운영으로 명품 교육도시 실현 • 다양한 주민의 수요를 반영한 평생학습프로그램 운영
5. 기업 유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업단지 조성 및 중소기업 지원강화를 통한 기업 유치 환경 조성 • 기업의 안정적인 정주기반 구축 및 근로자 후생복지시설 확충
6. 일자리 창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양한 청년정책 확대 및 청년 일자리 사업 다각화 • 노인, 여성 등을 위한 실질적인 일자리 제공 • 사회적경제 혁신타운 조성으로 창업기업 육성 및 일자리 제공
7. 정주여건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령사회 대응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주거환경 조성 • 주민 정주서비스 기능 총족과 농촌지역 거점 공간 조성

자료: 청양군 내부자료

전입 및 귀농·귀촌 지원 13개 사업, 결혼·출산·보육 지원 12개 사업, 노후생활 및 건강관리 지원 4개 사업, 지역인재 육성 7개 사업, 기업 유치 2개 사업, 일자리 창출 6개 사업, 정주여건 6개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

사회적 인구 증가 사업인 전입 및 귀농·귀촌 사업이 26%로 비중이 가장 높고 자연적 인구 증가 사업인 결혼·출산·보육 사업이 24%로 다음으로 비중이 높았다. 청양군은 인구 과소 군지역이기에 정주민구 증가 사업에 주력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최근 인구 정책은 저출산으로 인해 정주민구 증대보다는 생활인구에 대한 증가 정책의 패러다임으로 변화되고 있으나 청양군은 생활인구 증가에 대한 정책은 부족한 실정이다.

각 사업의 부서별 사업 현황을 살펴보면 기획감사실 1개, 민원봉사실 1개, 복지정책과 6개, 통합돌봄과 2개, 사회적경제과 7개, 투자유치과 3개, 안전총괄과 1개, 문화체육관광과 1개, 환경정책과 1개, 농촌공동체과 3개, 농업정책과 2개, 산림축산과 1개, 건설정책과 1개, 도시건축과 1개, 재무과 1개, 행정지원과 10개, 보건의료원 3개, 농업기술센터 3개, 공공시설사업소 1개, 맑은물사업소 1개로 추진되고 있다.

행정지원과 10개, 사회적경제과 7개, 복지정책과 6개로 사업이 집중되고 그 외 부서는 1~3개로 추진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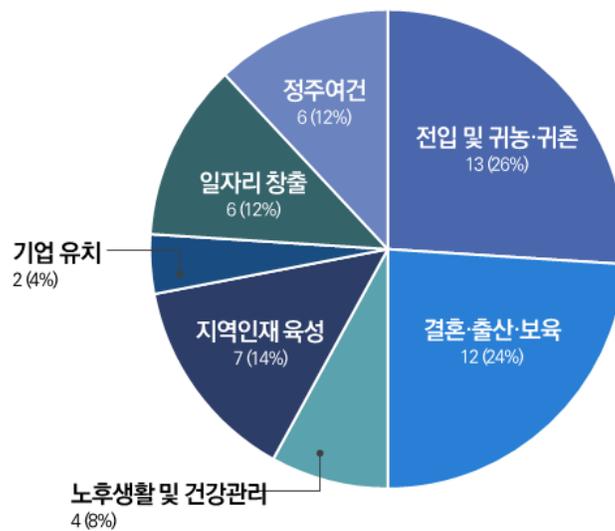
〈표 3-26〉 각 분야별 부서별 추진과제(50개)

정책 방향	주요 정책(안)	
전입 및 귀농·귀촌 지원(13개)	① 미디어를 활용한 '스·카·이 인구정책 홍보' 추진	기획감사실
	② 기업체 근로자 주소지 전입 유도	투자유치과
	③ 전입 주민 청양시네마 영화상품권 배부	문화체육관광과
	④ 전입가구 쓰레기 처리용품 지원	환경정책과
	⑤ 외국인 주민을 위한 지방세 안내 및 홍보	재무과

정책 방향	주요 정책(안)	
전입 및 귀농·귀촌 지원(13개)	⑥ 스마트청양 범군민운동 추진	행정지원과
	⑦ 전입 주민 축하금 지급	행정지원과
	⑧ 충남도립대학교 전입지원	행정지원과
	⑨ 인구 1천명 늘리기 운동 추진	행정지원과
	⑩ 청양군 귀농·귀촌 밀착형 체험·교육	농업기술센터
	⑪ 귀농인의 집 및 농업창업 보육센터 운영	농업기술센터
	⑫ 귀농·귀촌인 관계 형성 및 영농활동 지원	농업기술센터
	⑬ 산림휴양·체육시설 이용료 감면혜택	공공시설사업소
결혼·출산· 보육 지원(12개)	① 출생신고자녀 주민등록 초본 무료발급 서비스	민원봉사실
	② 보육 지원 사업	복지정책과
	③ 아이돌보미 이용 본인부담금 지원	복지정책과
	④ 다문화가족 지원	복지정책과
	⑤ 가족문화센터 조성	복지정책과
	⑥ 관내 출생아 영유아 교통 안전용품 지원	안전총괄과
	⑦ 우산 어린이와 함께하는 테마공원 조성	산림축산과
	⑧ 건강한 결혼문화 장려	행정지원과
	⑨ 일·가정 균형 직장환경조성 지원사업	행정지원과
	⑩ 출산 장려 분위기 조성을 위한 지원	보건의료원
	⑪ 건강한 임신·출산을 위한 모자 보건사업	보건의료원
	⑫ 다자녀가구 상·하수도 요금 지원	맑은물사업소
노후생활 및 건강관리 지원(4개)	① 정산 다목적복지관 건립	복지정책과
	② 지역사회 통합돌봄	통합돌봄과
	③ 건강하고 활력이 넘치는 노후생활 지원	통합돌봄과
	④ 맞춤형 건강 관리사업	보건의료원
지역인재 육성(7개)	① 청양군 청소년문화의 집 확대 운영	복지정책과
	②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사업	농촌공동체과
	③ 농촌 신활력플러스 사업	농촌공동체과
	④ 청년농업인 맞춤형 복지 확대	농업정책과
	⑤ 청양사랑인재육성 장학사업	행정지원과
	⑥ 방학 중 퇴근 시까지 방과후 학교 운영	행정지원과
	⑦ 맞춤형 평생학습 운영	행정지원과

정책 방향	주요 정책(안)	
기업유치 (2개)	① 청양 일반산업단지 조성	투자유치과
	② 솜벌리 농산물 가공공장 유치	농업정책과
일자리 창출 (6개)	① 청양 맞춤형 청년정책 추진	행정지원과
	② 충남 사회적경제 혁신타운 조성사업	사회적경제과
	③ 사회적경제 활성화	사회적경제과
	④ 청년 일자리 사업	사회적경제과
	⑤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사회적경제과
	⑥ 구인구직 활성화	사회적경제과
정주여건 개선(6개)	① 대중교통 이동지원 군민 교통복지 향상	사회적경제과
	② 도시가스 공급	사회적경제과
	③ 기업체 근로자 주거비 지원	투자유치과
	④ 농촌지역개발사업	농촌공동체과
	⑤ 농촌환경 개선을 통한 “살고 싶은 농촌” 조성	건설정책과
	⑥ 공공임대주택 건립	도시건축과

자료: 청양군 내부자료



[그림 3-19] 청양군 인구정책사업 전략별 비중

4. 청양군 마을만들기사업 추진 현황 및 효과 분석

1) 마을만들기사업 추진 현황

마을만들기사업은 예비단계(마을사업시작), 1단계(소규모 실행사업), 2단계(하드웨어 구축), 3단계(마을종합정비), 4단계(사후유지관리), 네트워크 사업으로 구분된다. 기본적으로 각 단계를 거쳐야만 다음 단계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그림 3-20] 청양형 마을만들기 단계별 사업 지원

자료: 청양군, 2023, 청양군 마을공동체지원센터 사업계획안, p.47

첫 번째, 예비단계로서 마을학교, 농촌현장포럼과 같이 주민들의 참여의지, 관심도를 제고시키는 단계이다. 주민들을 대상으로 교육과 토론이 이루어지면서 주민들이 마을사업의 필요성을 체감할 수 있게 한다.

두 번째, 1단계 사업으로서 약 6천만 원 이하의 마을사업을 추진하는 단계이다. 삼삼오오 소액사업, 희망마을 선행사업으로 비교적 적은 예산으로 마을 소득사업을 추진하는 것이다.

세 번째, 2단계 사업으로서 약 5억 원 이하의 마을사업을 추진하는 단계이다. 소공원조성, 마을밥상, 마을단위 자율개발, 마을회관 리모델링, 정보화기기 설치, 농업용 드론, 충남형마을만들기사업 등 중규모의 예산을 투입하여 주민의 정주여건 개선 및 소득사업 등을 추진하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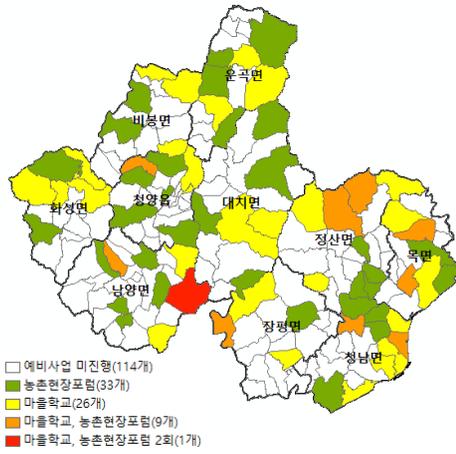
네 번째, 3단계 사업으로서 약 10억 원 이하의 마을사업을 추진하는 단계이다. 마을단위종합개발, 농촌마을종합개발, 지역경관개선 등이 해당된다. 예산 규모가 비교적 큰 사업으로서 지역에서의 농산물 가공, 지역축제, 소공원 조성 등의 사업에 예산을 투자하였다.

다섯 번째, 4단계 사업은 체험휴양마을 또는 인성학교를 설립·운영하는 단계이다. 고인돌마을, 사자산마을, 칠갑산산꽃마을, 장곡마을, 칠갑뜨락마을, 칠갑사니마을, 가파마을 등이 해당된다. 마을에서 본격적으로 체험휴양마을, 인성학교 운영을 통하여 소득을 창출하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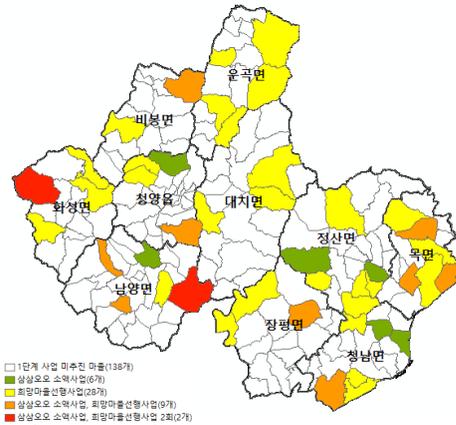
마지막으로 네트워크 사업은 약 100억 이상이 투자되는 도시재생활성화사업, 약 20억 원 이상 투자되는 생활여건개선사업, 그리고 중심지 사업이다. 그동안의 마을사업에 비하여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이다.

〈표 3-27〉 청양군 마을사업 추진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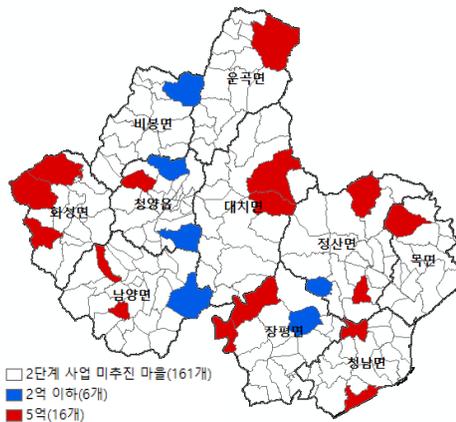
단계	사업내용	해당마을
예비 단계	마을학교, 농촌현장포럼	백천리, 교월3리, 적누1리, 군량리, 송방1리, 청수1리, 청수2리, 학당2리, 위라1리, 후덕리, 모곡리, 신대2리, 영양1리, 영양2리, 추광리, 탄정리, 작천리, 광대리, 대치리, 이화리, 상갑리, 역촌1리, 남천리, 송학리, 대박리, 마치1리, 내초리, 학암리, 덕성1리, 덕성2리, 광생리, 신흥1리, 신흥2리, 안심2리, 본의1리, 본의2리, 대평2리, 지곡리, 내직1리, 내직2리, 천내1리, 천내2리, 동강리, 왕진1리, 인양리, 중추1리, 적곡리, 지천리, 죽림리, 구룡3리, 신왕1리, 흥산1리, 매곡1리, 온직1리, 온직3리, 용두1리, 금정2리, 봉암1리, 화강리, 화암리, 기덕리, 수정리, 용당리, 신정리, 신원1리, 관산리, 장재리, 강정리, 양사2리 (총 69개 마을)
1단계	희망마을선행사업, 삼삼오오소액사업	적누1리, 청수1리, 청수2리, 학당2리, 위라1리, 후덕리, 신대2리, 영양2리, 추광리, 탄정리, 오룡리, 이화리, 대박리, 천장리, 내초리, 학암리, 덕성1리, 덕성2리, 광생리, 신흥1리, 신흥2리, 안심2리, 본의1리, 본의2리, 대평2리, 지곡리, 내직2리, 천내2리, 왕진1리, 왕진2리, 인양리, 적곡리, 지천리, 죽림리, 신왕1리, 흥산1리, 온직1리, 용두1리, 봉암1리, 화강리, 화암리, 용당리, 신정리, 관산리, 양사2리 (총 45개 마을)
2단계	소공원조성, 마을밥상, 마을단위 자율개발, 마을회관 리모델링, 정보화기기 설치, 농업용 드론, 충남형마을만들기사업 등	적누1리, 청수1리, 학당2리, 추광리, 오룡리, 이화리, 송학리, 내초리, 덕성2리, 본의2리, 지곡리, 왕진1리, 적곡리, 지천리, 죽림리, 신왕1리, 흥산1리, 온직1리, 화강리, 화암리, 수정리, 관산리 (총 22개 마을)
3단계	마을단위종합개발, 농촌마을종합 개발, 지역경관개선 등	신대2리, 형산리, 이화리, 시전리, 상갑리, 서정1리, 역촌1리, 대박리, 용두기, 마치2리, 천장리, 내초리, 용두1리, 용두2리, 양사2리, 용천리, 방한2리 (총 18개 마을)
4단계	체험휴양마을, 인성학교	후덕리, 신대2리, 광금리, 장곡리, 광대리, 상갑리, 백곡 2리, 남천리, 천장리, 본의2리, 지천리, 화산2리, 화암리, 관산리 (총 14개 마을)
5단계	도시재생활성화사업, 생활여건 개조사업, 중심지사업	읍내3리, 읍내4리, 화양1리, 인양리, 미당1리, 신원1리 (총 6개마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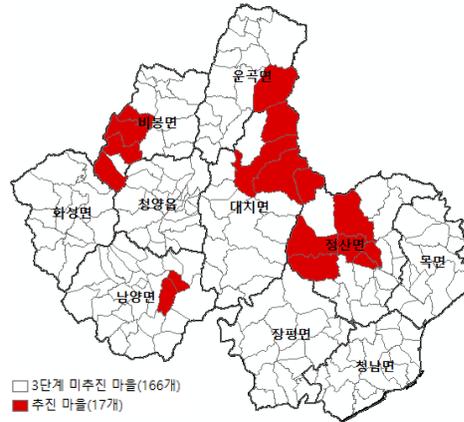
예비 단계 추진 마을 현황



1단계 사업 추진 마을 현황



2단계 사업 추진 마을 현황



3단계 사업 추진 마을 현황

[그림 3-21] 마을만들기 사업 단계별 추진 현황

참고. 청양군 마을만들기 사업과 연계사업

구분	마을만들기 사업		연계사업	
	실과	사업명	실과	사업명
예비단계	농촌공동체과	마을대학	기획감사실	마을 전경사진 제작
	농촌공동체과	동네자치 소액사업	통합돌봄과	독거노인 공동생활제
	농촌공동체과	농촌현장포럼	건설도시과	고령자 주거환경개선사업
			건설도시과	도시재생 예비사업
			미래전략과	청년 갭이어프로그램
			농업기술센터	농촌에서 살아보기
			행정지원과	맞춤형 평생학습 운영
			행정지원과	스마트 청양 범 군민운동
1단계			보건의료원	우리마을 주치의제
	농촌공동체과	삼삼오오 소액사업	농촌공동체과	물품공유센터 청양곳간
	농촌공동체과	희망마을 선행사업	농촌공동체과	마을단위 출하 공동체 발굴 육성
	농촌공동체과	주민자치 특색사업	사회적경제과	맞춤형 창업 컨설팅
	사회적경제과	협동조합발굴 육성 지원	통합돌봄과	행복경로당 조성 운영
			통합돌봄과	마을봉사의 날 운영
			통합돌봄과	경로당 공공급식 지원
			통합돌봄과	이동발래방차
2단계			문화관광과	찾아가는 동네방네 영화관
	농촌공동체과	마을만들기자율개발	문화관광과	관광두레주민사업체지원
	사회적경제과	마을기업육성사업	산림축산과	그루경영체 육성
			환경보호과	기후변화경로당지원
			청양교육청	학교교실 주민 공동이용활성화
			농업정책과	사회적농업활성화
			교육지원청	행복교육지구사업
			건설도시과	마을회관증개축, 쉼터정비
3단계			건설도시과	고령자 공동시설지원
	농촌공동체과	마을만들기종합개발	건설도시과	도시재생 뉴딜사업
	농촌공동체과	마을만들기 신규마을	산림축산과	산림휴양치유마을
	농촌공동체과	마을자치시스템구축		
4단계	사회적경제과	사회적기업 발굴 육성		
	농촌공동체과	마을차방전	농촌공동체과	농어촌인성학교
			농촌공동체과	농촌체험휴양마을
			산림축산과	산촌생태마을지원
네트워크 단계	농촌공동체과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기획감사실	청양형 뉴딜사업
	농촌공동체과	기초생활거점육성사업	통합돌봄과	커뮤니티케어(통합돌봄)
	농촌공동체과	신활력플러스사업	건설도시과	농촌형 공공임대주택
	농촌공동체과	주민자치회 전환		

자료: 청양군 마을만들기지원센터, 2023, 청양군 마을공동체 정책과 지원시스템 발표자료

2) 마을만들기사업 효과 분석

(1) 모형 설정

본 연구에서는 마을사업 추진의 효과를 분석하기 위하여 더미(dummy) 변수를 활용한 다중회귀분석을 활용하였다. 먼저 종속변수로 전체 청양군 인구 중 마을별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을 활용하였다. 마을 인구비율은 지리적·사회적 특성에 따라 마을별로 다를 수 있으나, 인구비율이 높다는 것은 그만큼 마을이 활력적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마을의 활력 척도를 나타내는 대리변수로서 마을 인구비율을 사용하였다.

$$\text{마을인구비율}(\%) = \frac{\text{마을별 인구}}{\text{청양군 전체인구}} \times 100 \quad (1)$$

독립변수는 0과 1로 구성된 더미변수를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마을사업의 성격에 따라 예비사업, 본 사업, 소득사업으로 구분하였으며, 각각 더미변수로 변환시켜 독립변수로 사용하였다.

예비사업은 마을만들기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이전의 단계로서 주민들의 동기부여를 위한 교육이 주로 이루어진다. 따라서 본격적으로 마을사업이 추진되는 단계로는 볼 수 없어 예비사업으로 분류하였으며, 마을학교, 농촌활성화 포럼이 실시되었던 마을은 1, 그렇지 않은 마을은 0으로 설정하였다.

본 사업은 본격적으로 마을만들기가 추진된 1단계, 2단계, 3단계, 5단계 사업이 해당된다. 각 단계별로 사업비 차이가 있고, 그 목적이 다를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정책사업이 추진되고 사업비가 투입되었다. 따라서 마을사업의 실시이라는 측면이 강하여 ‘본 사업’으로 명명하였다. 본 사업이 실시되었던 마을

은 1, 그렇지 않은 마을은 0으로 설정하였다.

소득사업은 마을 소득을 위하여 체험휴양마을, 인성학교를 운영하는 경우이다. 앞의 본 사업과는 달리 소득사업에 초점을 맞춰 체험휴양마을, 인성학교를 운영하는 마을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두 사업을 실시하는 마을은 1, 그렇지 않은 마을은 0으로 설정하였다.

마지막으로, 통제변수로서 고령화율(%)과 귀촌가구 수를 포함시켰다. 마을 인구문제에서 핵심 현안인 고령화와 귀촌을 포함시켜 마을 인구비율과의 인과 관계를 분석하였다. 이상을 수식으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다.

$$\text{모형 1: 마을인구비율} = \beta_0 + \beta_1 \text{예비사업} + \beta_2 \text{본사업} + \beta_3 \text{소득사업} + \epsilon_1 \quad (2)$$

$$\text{모형 2: 마을인구비율} = \beta_0 + \beta_1 \text{예비사업} + \beta_2 \text{본사업} + \beta_3 \text{소득사업} + \beta_4 \text{고령화율} + \beta_5 \text{귀촌가구} + \epsilon_2 \quad (3)$$

여기서, β_0 는 상수, β_i 는 계수, ϵ 는 오차항

(2) 분석 결과

위의 식 (2), (3)에 대한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이 제시될 수 있다. 모형 1은 더미변수(예비사업, 본사업, 소득사업)로만 구성되었고, 모형 2는 통제변수(고령화율, 귀촌가구)가 포함된 모형이다. 먼저 각 변수의 통계량을 살펴보면 다음 <표 3-26>과 같다.

각 변수의 표본 수는 183개이고, 이는 청양군의 모든 마을이 대상이 되는 것을 의미한다. 마을 인구비율은 평균 0.546%로, 최솟값 0.126%에서 최댓값 6.578%로 나타났다. 표준편차는 0.743으로 마을 간의 편차가 큰 편은 아니다. 예비사업, 본사업, 소득사업은 더미변수로 최솟값 0과 최댓값 1을 갖고 있다.

연속변수인 고령화율은 평균 31.284%이고, 최솟값 6.522%에서 최댓값 55.102%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귀촌가구 수는 평균 3.678가구로서, 최솟값 0가구에서 최댓값 30가구로 나타났다.

〈표 3-28〉 변수의 통계량

변수명	n	Mean	St. Dev.	Min	Max
인구비율	183	0.546	0.743	0.126	6.578
예비사업	183	0.372	0.485	0	1
본사업	183	0.344	0.476	0	1
소득사업	183	0.077	0.267	0	1
고령화율	183	31.284	8.320	6.522	55.102
귀촌가구	183	3.678	5.675	0	30

〈표 3-29〉 분석 결과

변수명	모형 1	모형 2
예비사업	-0.323** (0.133)	-0.346*** (0.120)
본사업	0.400*** (0.135)	0.416*** (0.122)
소득사업	-0.159 (0.208)	-0.144 (0.189)
고령화율		-0.039*** (0.006)
귀촌가구		-0.002 (0.009)
Constant	0.541*** (0.071)	1.755*** (0.194)
Observations	183	183
R2	0.055	0.242
Adjusted R2	0.039	0.221
Residual Std. Error	0.729 (df = 179)	0.656 (df = 177)
F Statistic	3.466** (df = 3; 179)	11.317*** (df = 5; 177)

Note: *p<0.1; **p<0.05; ***p<0.01

위의 <표 3-29> 에서 보는 바와 같이 모형 1에서는 예비사업과 본 사업이 인구비율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예비사업은 인구비율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예비사업이 이루어지면 인구비율이 유의하게 감소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마을만들기 사업이 인구가 많은 사업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 인구가 적은 마을에서 실행된다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한편, 본 사업은 인구비율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을단위종합개발, 농촌마을종합개발, 충남형마을만들기 사업 등 본 사업이 실시되면 인구비율이 0.4%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형 2는 통제변수로서 고령화율과 귀촌가구수를 포함한 모형이다. 모형 1과 마찬가지로 예비사업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본 사업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형 2의 결과를 보면, 예비사업이 실시되면 인구비율이 0.346% 감소하고, 본 사업이 실행되면 인구비율이 0.416% 증가한다. 이 모형에서의 두 변수는 모형 1의 계수와 거의 같은 값을 보여주고 있다. 한편 통제변수 중에서 고령화율은 인구비율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령화율이 1% 증가하면 인구비율은 0.039%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고령화율이 인구비율 감소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으로 의미한다.

여러 독립변수 중에서 소득사업, 귀촌가구 수는 어느 모형에서도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특히 체험휴양마을, 인성학교를 의미하는 소득사업이 인구비율 증감에 유의한 영향을 주지 못했다는 점은 추가적인 고찰과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다.

3) 결론 및 시사점

본 연구는 청양군 마을사업 추진 현황을 바탕으로 더미변수를 활용한 다중회귀모형을 추정하였다. 이를 위하여 마을사업을 예비사업, 본 사업, 소득사업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고, 추가적으로 고령화율, 귀촌가구 수를 통제변수로 포함하여 분석하였다. 그 결과, 예비사업은 인구비율과 부정적인 관계에 있었고, 본 사업은 긍정적인 관계에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리고 고령화율은 부정적인 관계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비사업은 인구가 적고 과소화된 마을을 대상으로 실시되기 때문에 부정적인 관계가 있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하지만 본격적으로 마을사업을 실시하게 되면 인구비율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도 확인될 수 있다. 한편, 고령화율은 인구비율 감소를 촉진시키는 요인으로 작용될 수 있었다.

본 연구는 마을사업 추진 현황을 바탕으로 마을 인구문제를 다루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하지만 데이터의 한계상 더미변수를 사용할 수 밖에 없었고, 이를 통하여 사업실행 여부에 따른 효과만을 측정했다는 점에서 한계로 지적될 수 있다. 또 인구비율 증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여러 통제변수를 고려할 수 있으나, 데이터의 한계상 이를 충분히 반영할 수 없었다는 점도 한계로 지적될 수 있다.

5. 소결

1) 청양군 인구 현황

1인 가구가 많이 증가하고 있으며, 유소년인구와 생산가능인구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노인인구는 증가하고 있다. 청년의 해 선포식 및 청년 정책 추진에도 불구하고 청년인구 감소는 심각하며, 고령화로 인한 자연적 인구 감소와 전입대비 전출인구가 적어 사회적 인구가 증가하고 있다. 특히, 정산면, 화성면, 목면, 청남면, 남양면의 사회적 인구가 증가하고 있으며, 전입·전출 사유로는 직업, 가족으로 인한 사유가 높게 나타났다.



- 1인 가구 많이 증가
- 유소년인구, 생산가능인구 지속적 감소
- 노인인구 증가
- 청년 정책 추진에도 청년인구 감소 심각
- 사회적 인구 증가(전입 > 전출)
 - 정산면, 화성면, 목면, 청남면, 남양면 사회적 인구 증가
- 전입·전출 사유 - 직업, 가족 높음

2) 청양군 마을 인구 현황

청양군의 인구는 청양읍에 압도적으로 거주하고 있으며, 청양읍과 정산면을 제외하고 고령화율 40% 이상이다. 청양군은 타 시도에 비해 인구 50명 이하의 과소지역이 거의 없어 과소마을의 기준을 50명이 아닌 70명으로 변경하여 분석할 정도이다. 최근 10년간 고령인구가 2배 이상 증가하였고 특히, 화성면과 남양면의 70세 이상 인구 비율 높다.

청년 인구도 많이 줄어들어 확대 청년(20-45세)이 10명 미만 거주하는 마을이 10년간 2배 이상 증가하였다.

청양군은 사회적 인구가 조금 증가하여 비교적 효과적인 인구정책을 수립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으며, 10년 전 과소고령마을이 4개에서 현재 14개로 증가하였다. 남양면은 과소고령마을이 많이 있으며, 마을소멸위기 마을이 10년 동안 약 2배 증가하였다. 청양읍과 정산면을 제외한 모든 마을이 마을소멸위기 마을이 많은 실정이다.



- 청양읍에 압도적 거주
- 청양읍과 정산면을 제외하고 고령화율 40% 이상
- 청양군은 타 시도에 비해 인구 50명 이하의 과소지역이 거의 없음
- 고령인구 -10년간 2배 이상 증가
 - 화성면과 남양면의 70세 이상 인구 비율 높음
- 사회적 인구가 조금 증가하여 비교적 효과적인 인구정책 수립
- 마을소멸위기 마을 - 10년 동안 약 2배 증가
- 청양읍과 정산면을 제외한 모든 마을이 마을소멸위기 마을 많음

3) 청양군 인구정책 추진 현황

청양군은 귀농귀촌 지원사업, 결혼·출산·보육지원 사업이 압도적으로 많아, 사회적 인구 증가와 자연적 인구 증가 사업이 균형을 맞춰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4) 청양군 마을지원사업 추진 현황 및 효과 분석

마을사업 효과분석을 위해 마을사업을 예비사업, 본 사업, 소득사업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고, 추가적으로 고령화율, 귀촌가구수를 통제변수로 포함하여 분석하였다.

효과 분석 결과, 예비사업은 인구 비율과 부정적인 관계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인구가 적고 과소화된 마을을 대상으로 사업이 추진되기에 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난 것으로 사료된다.

그러나 본격적으로 마을사업을 실시하게 되면 인구비율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어 마을사업이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고령화율은 인구비율 감소를 촉진시키는 요인으로 작용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제 4 장

설문 및 인터뷰조사

1. 설문조사
2. 인터뷰조사

1. 설문조사

1) 조사 개요

자료는 2020년 행정조사를 통해 구축된 자료로 행정리 마을 실태, 마을소멸에 대한 의식을 조사하는 목적으로 진행되었다. 2020년 6월부터 10월까지 진행되었고, 조사방법은 1차적으로 행정에서 행정리 마을 이장을 대상으로 진행하였으며 미응답 행정리에 대해서는 1:1 면접조사를 병행하여 추진했다.

조사대상은 청양군 183개 전체 행정리 마을이며, 조사내용은 인구 부문, 토지 및 경제 부문, 커뮤니티 부문, 마을 전망 부문에 대해 조사하였다.

〈표 4-1〉 설문조사 개요 및 항목

구분	내용	
조사목적	행정리 마을 실태, 마을소멸에 대한 의식 조사(충남연구원 전략과제 연구)	
조사대상	183개 행정리 이장, 행정리 마을 전수조사	
조사기간	2020. 6~10월	
조사방법	행정 조사 및 1:1 면접조사 병행	
조사내용	인구 부문	미취학아동수, 학생수, 독거노인수, 귀농귀촌인 수
	토지 및 경제 부문	휴경지 정도, 공가 및 폐가 수, 마을소득시설 유무, 사업추진 유무
	커뮤니티 부문	정주 만족도, 공동체 활력 정도, 마을 주민참여 적극성
	마을 전망 부문	향후 마을소멸 가능성, 향후 인구 전망, 귀농귀촌 인구 유입 가능성, 외부인 마을 유입에 대한 개방성

2) 전체 행정리 설문조사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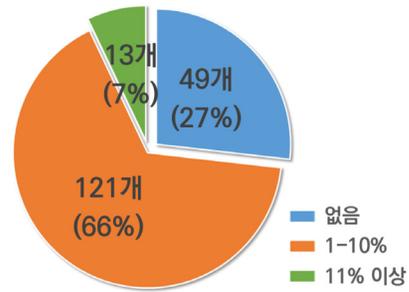
(1) 인구 부문 현황

<p>■ 미취학아동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취학아동 0명 행정리는 40% 높고 • 1-2명 31%, 5명 이상 32개 17%에 해당 • 마을 내 미취학아동 많이 없음 	<table border="1"> <thead> <tr> <th>구분</th> <th>개수</th> <th>비율</th> </tr> </thead> <tbody> <tr> <td>0명</td> <td>73개</td> <td>40%</td> </tr> <tr> <td>1-2명</td> <td>56개</td> <td>31%</td> </tr> <tr> <td>3-4명</td> <td>22개</td> <td>12%</td> </tr> <tr> <td>5명 이상</td> <td>32개</td> <td>17%</td> </tr> </tbody> </table>	구분	개수	비율	0명	73개	40%	1-2명	56개	31%	3-4명	22개	12%	5명 이상	32개	17%
구분	개수	비율														
0명	73개	40%														
1-2명	56개	31%														
3-4명	22개	12%														
5명 이상	32개	17%														
<p>■ 학생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초중고 학생수 1-4명 거주 마을 83개 45%, 5-9명 거주 마을 45개 25% • 10명 이상 거주 마을 38개 21%로 학생 거주 마을 90% 달함 	<table border="1"> <thead> <tr> <th>구분</th> <th>개수</th> <th>비율</th> </tr> </thead> <tbody> <tr> <td>0명</td> <td>17개</td> <td>9%</td> </tr> <tr> <td>1-4명</td> <td>83개</td> <td>45%</td> </tr> <tr> <td>5-9명</td> <td>45개</td> <td>25%</td> </tr> <tr> <td>10명 이상</td> <td>38개</td> <td>21%</td> </tr> </tbody> </table>	구분	개수	비율	0명	17개	9%	1-4명	83개	45%	5-9명	45개	25%	10명 이상	38개	21%
구분	개수	비율														
0명	17개	9%														
1-4명	83개	45%														
5-9명	45개	25%														
10명 이상	38개	21%														
<p>■ 독거노인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독거노인 15명 이상 거주 마을 36%, 10-15명 미만 마을 24% • 독거노인 5명 이상 거주 마을은 92%에 달함 	<table border="1"> <thead> <tr> <th>구분</th> <th>개수</th> <th>비율</th> </tr> </thead> <tbody> <tr> <td>5명 미만</td> <td>14개</td> <td>8%</td> </tr> <tr> <td>5-10명 미만</td> <td>58개</td> <td>32%</td> </tr> <tr> <td>10-15명 미만</td> <td>45개</td> <td>24%</td> </tr> <tr> <td>15명 이상</td> <td>66개</td> <td>36%</td> </tr> </tbody> </table>	구분	개수	비율	5명 미만	14개	8%	5-10명 미만	58개	32%	10-15명 미만	45개	24%	15명 이상	66개	36%
구분	개수	비율														
5명 미만	14개	8%														
5-10명 미만	58개	32%														
10-15명 미만	45개	24%														
15명 이상	66개	36%														
<p>■ 귀농귀촌인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귀농귀촌인이 없는 마을 28개 15%, 1-5명 미만 38%, 5-10명 미만 29% • 귀농귀촌인이 마을 내 있는 편임 	<table border="1"> <thead> <tr> <th>구분</th> <th>개수</th> <th>비율</th> </tr> </thead> <tbody> <tr> <td>0명</td> <td>28개</td> <td>15%</td> </tr> <tr> <td>1-5명 미만</td> <td>69개</td> <td>38%</td> </tr> <tr> <td>5-10명 미만</td> <td>53개</td> <td>29%</td> </tr> <tr> <td>10명 이상</td> <td>33개</td> <td>18%</td> </tr> </tbody> </table>	구분	개수	비율	0명	28개	15%	1-5명 미만	69개	38%	5-10명 미만	53개	29%	10명 이상	33개	18%
구분	개수	비율														
0명	28개	15%														
1-5명 미만	69개	38%														
5-10명 미만	53개	29%														
10명 이상	33개	18%														

(2) 토지 및 경제기반 부문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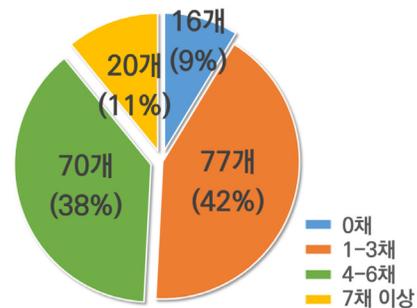
■ 휴경지 정도

- 휴경지 없는 마을 49개 27%
- 10% 이하 마을 121개 66%
- 13개, 7%는 11% 이상 휴경지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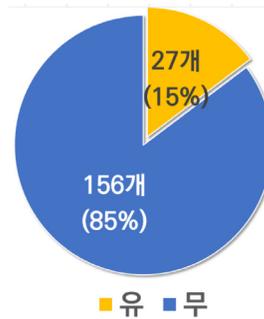
■ 공폐가수

- 농촌마을에 심각한 문제인 공폐가수가 없는 마을 9%, 1-3채 42%, 4-6채 38%
- 7채 이상 마을은 20개(11%) 마을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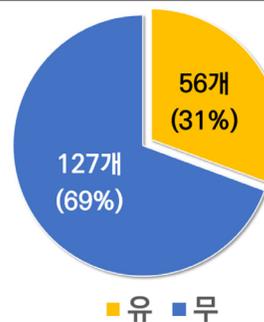
■ 마을소득시설

- 마을 내 소득시설은 156개 마을 85%가 없음



■ 마을사업추진 유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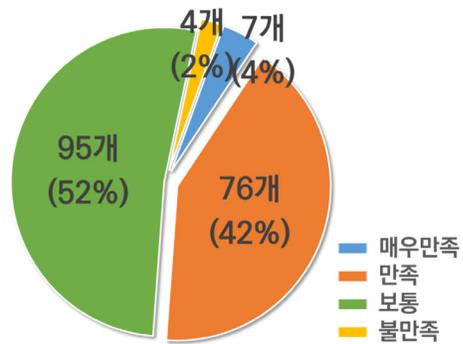
- 마을사업추진 경험이 없는 마을 127개 69%



(3) 커뮤니티 부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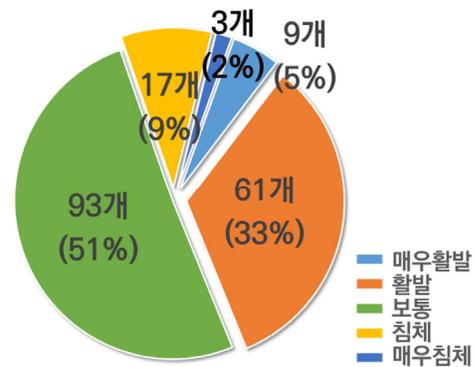
■ 정주만족도

- 청양군민의 정주만족도는 높음 편임
- 만족 42%이며 보통 이상으로 응답한 군민은 98%로 매우 높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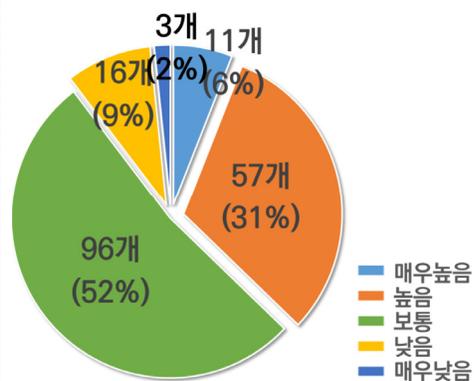
■ 공동체 활력도

- 공동체 활력도는 비교적 높은 편임
- 활발 이상 38%, 보통 51%로 보통이상 응답자는 89%
- 침체된 마을은 11%에 해당됨



■ 주민참여 적극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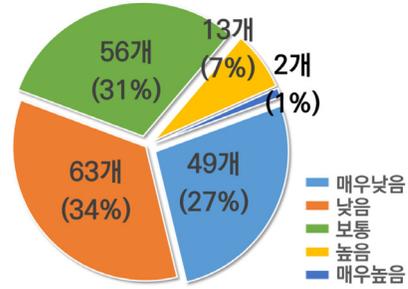
- 주민참여도 높음 이상 37%, 보통 이상 89%
- 적극성 낮음(매우 낮음) 마을은 11% 마을



(4) 마을 전망 부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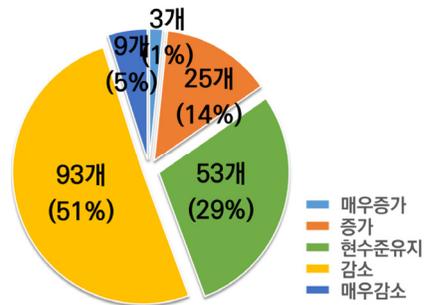
■ 향후 마을소멸 예측

- 소멸 예측에 대해 매우 낮음 27%, 낮음 34%로 소멸에 대해 61% 주민이 낮음으로 응답
- 높음(매우 높음) 응답자는 8%로 낮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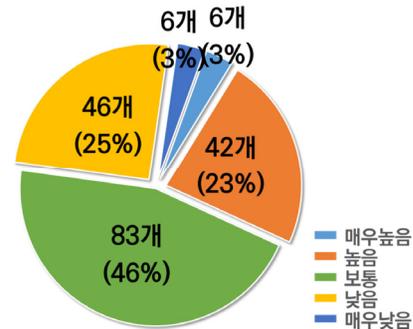
■ 향후 인구 전망

- 향후 인구에 대해서는 56%가 감소할 것으로 응답
- 현수준 유지 29%
- 증가(매우 증가) 15% 응답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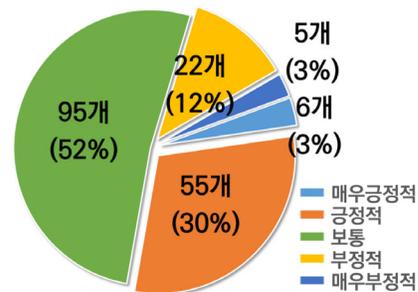
■ 귀농귀촌인구 유입 가능성

- 귀농귀촌인구 유입 가능성은 높음 보다 낮음이 다소 높음
- 보통 응답자 46%
- 귀농귀촌인구 유입 가능성에 대해 매우 긍정적이지 않음



■ 외부인 마을 유입 개방성

- 마을 거주민들이 외부인에 대한 호응도 질문으로 긍정적 30%, 부정적 12%로 긍정적인 응답이 높음
- 보통 응답자 52%



(5) 소결

① 인구 부문

청양군뿐 아니라 국가 합계출산율 0.78로 출생률이 점점 낮아져 마을 내 미취학아동인구 많이 없다. 그래도 청양군은 초중고 학생이 거주하고 있는 마을은 90%로 매우 많다.

인구는 감소했지만 가구 수는 거의 변화가 없기에 1인 가구, 독거노인이 증가함을 알 수 있고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독거노인 5명 이상 거주 마을은 92%로 매우 높다.

귀농귀촌인이 없는 마을은 15%이지만 마을 내 귀농귀촌인이 있는 편이다. 청양군은 청정지역이고 교통 접근성이 높아지고 있기에 귀농귀촌인의 유입 가능성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전국 및 충남에서 귀농귀촌인 유입 비율이 높지 않기에 이에 대한 정책이 우선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② 토지 및 경제기반 부문

휴경지가 있는 마을은 92%이나 대부분 10% 이하(66%)이다. 인구 고령화로 인해 휴경지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마을에 공·폐가는 조금씩 있는 편이고 7채 이상 있는 마을 20개의 경우 공·폐가로 인한 농촌 경관 및 쓰레기 방치 등으로 인한 문제가 야기되기에 이에 대한 정책이 필요하다.

마을 내 소득시설은 85% 마을이 없으며, 사업 추진 경험이 있는 마을도 30%로 낮다.

③ 커뮤니티 부문

청양군민들은 정주민족도가 높은 편이며, 공동체 활력도도 비교적 높은편이다. 정주민족도가 낮고 공동체 활력도가 낮은 마을에 대한 조사와 이에 대한 대응이 필요할 것이다. 주민 참여 적극성도 보통 이상이 89%로 비교적 높은 편이다. 청양군은 마을활력 및 적극성 등이 높아 커뮤니티가 공동화 단계는 아닌 것으로 분석되었다.

④ 마을 전망 부문

마을소멸에 대해 61%가 낮음으로 응답하여 마을소멸에 대한 위기감은 없으며 인구는 56%가 감소할 것이라 응답하였으나, 현수준 유지 응답 29%로 인구가 매우 감소할 것이라는 전망도 낮다. 귀농귀촌 유입 가능성에 대해 매우 긍정적이지는 않지만 외부인 유입 개방성은 다소 긍정적으로 응답하였기에 소멸에 대한 공감대 형성 사업 등을 통해 외부인 유입에 대한 의식 전환이 필요할 것이다.

〈표 4-2〉 설문조사 소결

구분	내용	진단
인구 부문	미취학아동인구는 많이 없음/ 초중고 거주 마을 많음 1인 가구가 매우 많으며, 독거노인 비율도 높음 귀농귀촌인이 있는 마을이 많음	귀농귀촌 정책 우선적 추진
토지 및 경제 부문	휴경지가 있는 마을이 대부분임(면적 많지 않음) 공 폐가는 있는 편이나, 이용가능한 빈집도 많은 편임 85% 이상 마을에 소득시설 없음 사업 추진 경험이 있는 마을 비율 낮음	사업 추진 필요 빈집 활용방안 필요
커뮤니티 부문	정주민족도 높음/ 공동체 활력도도 비교적 높음 주민참여 적극성도 비교적 높음	정주민족도와 활력도가 높기에 공동체의 공동화 단계는 아님
마을 전망 부문	소멸에 대한 위기감 낮음 인구 감소할 것이라는 전망 낮음 외부인에 대한 거리감은 높지 않아 외부인 유입 가능성 있음	소멸 공감대 형성으로 외부인 유입에 대한 의식 전환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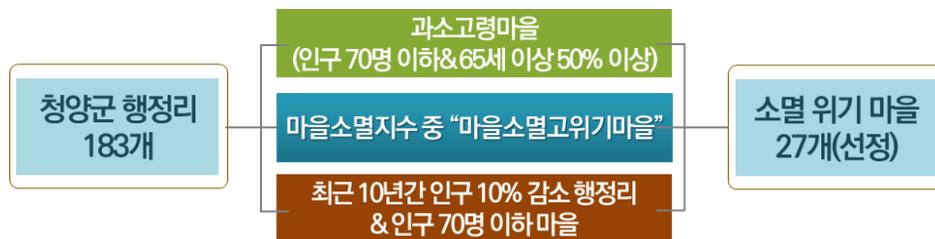
3) ‘소멸 위기 마을’ 설문조사 결과

(1) ‘소멸 위기 마을’ 선정

소멸 위기 마을(마을소멸이 심각하게 우려 되는 마을)을 선정하여 실태를 분석하였다. 청양군 ‘소멸 위기 마을’ 선정 기준은 아래 3개에 해당되는 마을이다 (2023년 기준으로 분석).

- “과소고령마을(인구 70명 이하 & 65세 이상 고령인구 50% 이상)”
- 마을소멸지수 중 “마을소멸고위기마을”
- “최근 10년간 인구 10% 감소 행정리 & 인구 70명 이하 마을”

즉, “과소고령마을”이거나 “마을소멸고위기마을”이거나 “최근 10년간 인구 감소&과소마을”에 해당되는 행정리 마을을 청양군 ‘소멸 위기 마을’로 정의하고 실태를 분석하였다. 선정된 마을은 “과소고령마을” 14개 행정리, “마을소멸 고위기마을” 20개 행정리, “최근 10년간 인구 감소&과소마을” 9개로 중복된 마을을 제외하고 최종 27개이다.



[그림 4-1] ‘소멸 위기 마을’ 선정 방식

〈표 4-3〉 청양군 ‘소멸 위기 마을’ 선정

읍면명	2023년 과소고령마을 (인구 70명 이하 & 65세 이상 50% 이상) A	2023년 마을소멸 고위기 (마을소멸지수 활용) B	최근 10년간 인구 감소 & 과소마을 (인구 10% 감소, 인구 70명 이하) C	청양군 소멸 위기 마을 A+B+C
청양읍	정좌2리, 정좌3리	정좌2리, 정좌3리	정좌2리, 장승1리	정좌2리, 정좌3리, 장승1리
운곡면	미량2리			미량2리
대치면	개곡리, 구치리	개곡리, 구치리	구치리	개곡리, 구치리
정산면		덕성1리		덕성1리
목면		신흥2리		신흥2리
청남면	천내2리	내직1리, 내직2리, 중산리, 천내1리	대흥2리, 천내2리	내직1리, 내직2리, 중산리, 천내1리, 천내2리, 대흥2리
장평면	도림리			도림리
남양면	구룡2리, 금정1리, 매곡2리, 온암2리, 온암1리, 온암2리, 용두2리	구룡2리, 매곡2리, 신왕1리, 온암1리, 온암2리, 온직3리, 용두2리, 용마1리	구룡2리, 온암2리, 용두2리, 금정1리	구룡2리, 금정1리, 매곡2리, 신왕1리, 온암1리, 온암2리, 온직3리, 용두2리, 용마1리, 금정1리
화성면	광평리	광평리, 매산2리		광평리, 매산2리
계	14개	20개	9개	27개

(2) 소멸 위기 마을의 실태

① 인구 부문

청남면 중산리를 제외하고 모두 인구 90명 이하이며, 용마1리, 매산2리, 내직2리, 덕성1리는 80명대, 천내1리, 온직3리, 신왕1리 70명대, 그 외 마을은 모두 70명 이하이다. 내직1리는 38명, 온암1리와 용두2리 40명으로 인구 과소마을이다.

〈표 4-4〉 ‘소멸 위기 마을’의 인구 부문 실태

읍면명	마을	2023년 주민등록인구				2020년 실거주 인구			
		총인구	20~44 여성인구	70세 이상비율	65세 이상비율	미취학 아동수	초중고학 생수	독거 노인 수	귀농 귀 촌인 수
청양읍	정좌2리	49	4	53.1	63.3	0	0	7	3
	정좌3리	67	3	53.7	59.7	0	2	13	0
운곡면	미량2리	67	3	44.8	53.7	0	2	13	0
대치면	개곡리	67	1	52.2	61.2	0	2	9	5
	구치리	48	1	37.5	52.1	0	0	11	1
정산면	덕성1리	81	3	30.9	42.0	2	3	7	2
목면	신흥2리	42	1	28.6	33.3	0	2	7	7
청남면	내직1리	38	3	31.6	36.8	0	9	7	3
	내직2리	82	2	29.3	43.9	0	9	9	5
	천내1리	77	2	48.1	58.4	2	2	11	1
	천내2리	51	3	45.1	52.9	1	1	14	1
	중산리	161	4	28.6	46.6	2	7	18	2
장평면	도림리	53	4	35.8	52.8	1	2	7	0
남양면	구룡2리	65	4	41.5	52.3	1	5	7	4
	신왕1리	71	1	35.2	46.5	0	0	5	3
	용마1리	87	4	41.4	47.1	3	3	12	7
	매곡2리	47	1	57.4	63.8	0	0	7	5
	온암1리	40	2	42.5	50.0	0	0	5	4
	온암2리	65	0	36.9	52.3	1	3	8	0
	온직3리	75	2	37.3	44.0	2	1	6	7
	용두2리	40	1	45.0	50.0	0	4	5	0
	금정1리	57	2	43.9	52.6	0	1	6	0
화성면	광평리	69	0	40.6	53.6	2	6	3	7
	매산2리	85	1	41.2	62.4	3	2	14	6

주: 27개 행정리 중 장승1리, 중산리, 대흥2리 3개 행정리는 데이터 미획득으로 분석에서 제외함

확대 청년 여성(20-44세) 인구를 살펴보면 중산리 161명 인구에도 불구하고 20-44세 여성인구 4명이며, 24개 모든 마을이 4명 이하 거주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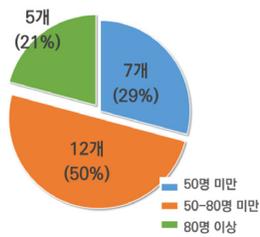
70세 이상 고령인구 50% 이상 마을도 4개, 40%대 마을 10개 마을이며, 65세 이상 고령인구 50% 이상 마을은 16개로 고령화가 심각하다.

미취학아동이 없는 마을은 13개이고 모든 마을이 3명 이하 거주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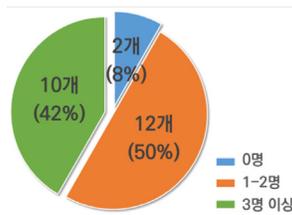
초중고 학생이 없는 마을 5개, 5명 이상 거주 마을 5개로 학생 수도 많이 없는 실정이다.

인구가 가장 많은 중산리가 독거노인 18명으로 가장 많고, 화성면 광평리를 제외하고 모든 마을에 독거노인 5명 이상이 거주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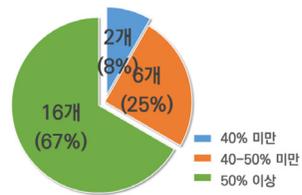
귀농귀촌인이 전혀 없는 마을 6개, 5명 이상 들어온 마을은 8개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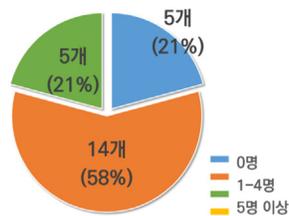
총인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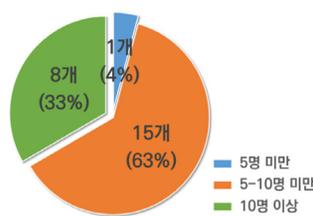
확대 청년 여성인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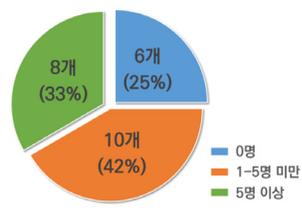
65세 고령인구



학생수



독거노인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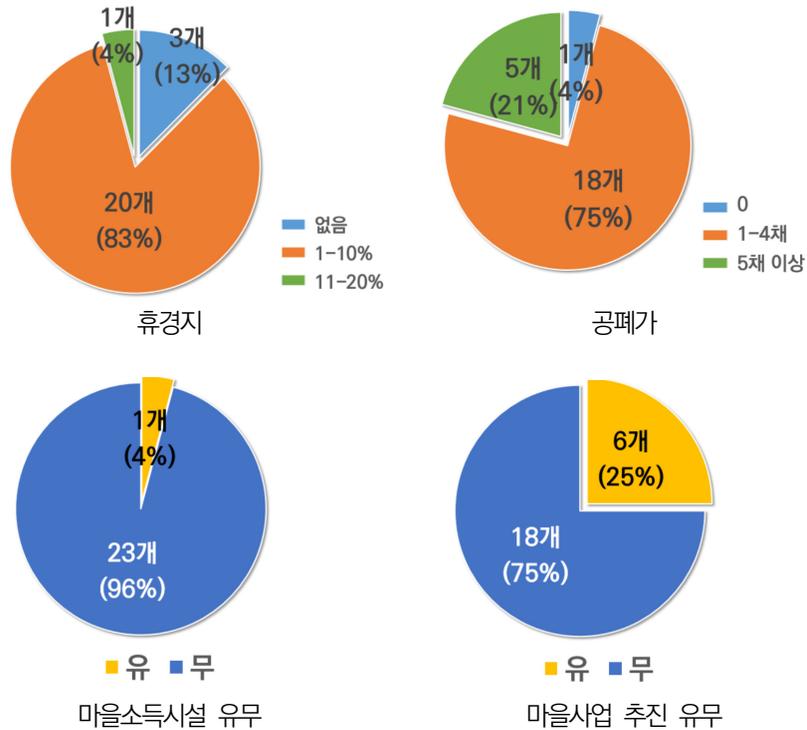
귀농귀촌인수

② 토지 및 경제기반 부문

토지 및 경제기반 부문은 휴경지, 공·폐가, 마을 내 소득시설, 마을 사업추진 항목을 선정하여 살펴보고, 대상 마을 24개 중 휴경지 10% 이하 마을 20개 (83.3%), 휴경지 없는 마을 3개(13.0%)인 것으로 나타났다. 휴경지는 비교적 많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폐가수는 4채 미만 마을이 75%(18개), 5채 이상 마을 21%(5개)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마을 내 소득시설은 1개 마을을 제외하고 모두 없었으며, 마을사업은 75% 마을이 추진해 본 경험이 없는 마을로 도출되었다.



〈표 4-5〉 '소멸 위기 마을'의 토지 및 경제기반 부문 실태

읍면명	마을	휴경지	공폐가수	마을소득시설	마을사업추진 유무
청양읍	정좌2리	1-10%	5	유	유
	정좌3리	없음	4	무	무
운곡면	미량2리	1-10%	4	무	무
대치면	개곡리	1-10%	2	무	무
	구치리	없음	1	무	무
정산면	덕성1리	11-20%	4	무	유
목면	신흥2리	1-10%	3	무	유
청남면	내직1리	1-10%	5	무	무
	내직2리	1-10%	6	무	무
	천내1리	1-10%	3	무	무
	천내2리	1-10%	3	무	무
	중산리	없음	2	무	무
장평면	도림리	1-10%	1	무	무
남양면	구룡2리	1-10%	4	무	무
	신왕1리	1-10%	6	무	유
	용마1리	1-10%	5	무	유
	매곡2리	1-10%	3	무	무
	온암1리	1-10%	1	무	무
	온암2리	1-10%	4	무	무
	온직3리	1-10%	4	무	유
	용두2리	1-10%	4	무	무
	금정1리	1-10%	2	무	무
화성면	광평리	1-10%	0	무	무
	매산2리	1-10%	1	무	무

③ 커뮤니티 부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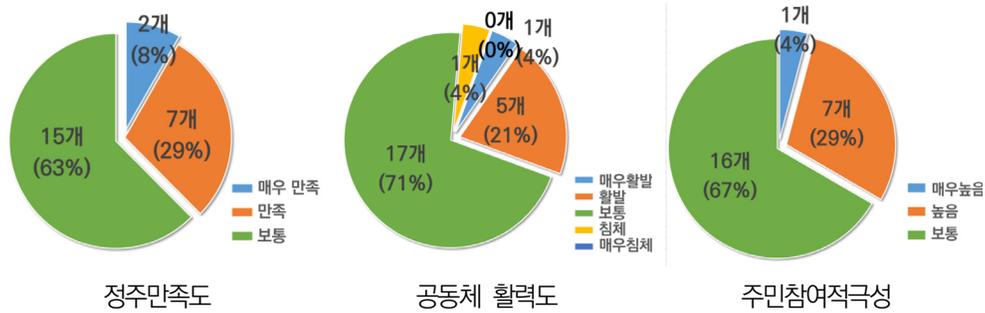
커뮤니티 부문을 분석하기 위해 정주민족도, 공동체 활력도, 주민의 참여 적극성을 조사하였다. 24개 마을의 정주민족도는 보통 63%(15개), 만족 29%(7개)로 보통 이상 응답율이 92%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공동체 활력도 보통 이상(보통, 활발) 응답이 92%로 높게 나타났다.

또한 주민 참여 적극성 항목에서도 100% 적극성 보통 이상으로 응답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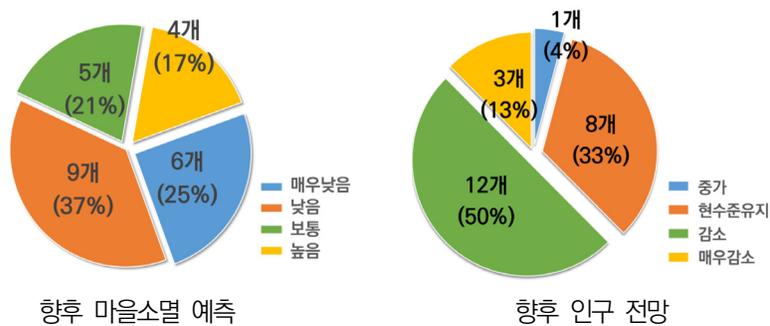
〈표 4-6〉 ‘소멸 위기 마을’의 커뮤니티 부문 실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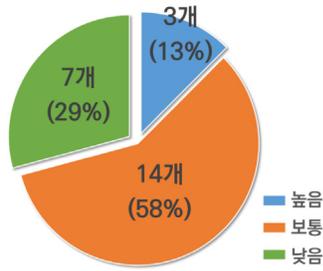
읍면명	마을	정주민족도	공동체활력도	주민 참여 적극성
청양읍	정좌2리	보통	보통	높음
	정좌3리	보통	보통	보통
윤곡면	미량2리	보통	보통	보통
대치면	개곡리	보통	보통	보통
	구치리	매우 만족	활발	높음
정산면	덕성1리	보통	보통	보통
목면	신흥2리	만족	활발	보통
청남면	내직1리	보통	보통	보통
	내직2리	보통	보통	보통
	천내1리	보통	보통	보통
	천내2리	보통	보통	보통
	중산리	보통	보통	보통
장평면	도림리	만족	활발	높음
남양면	구룡2리	보통	보통	보통
	신왕1리	만족	활발	높음
	용마1리	매우 만족	매우 활발	매우 높음
	매곡2리	보통	보통	보통
	온암1리	보통	침체	높음
	온암2리	만족	활발	높음
	온직3리	보통	보통	보통
	용두2리	보통	보통	보통
화성면	금정1리	만족	보통	보통
	광평리	만족	보통	보통
	매산2리	만족	보통	높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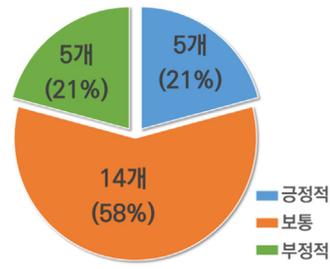
④ 향후 마을 전망 부문

향후 마을소멸 예측, 인구 전망, 귀농 귀촌인구 유입 가능성, 외부인 마을 유입 개방성을 조사하였다. 향후 10년 후 청양군 마을소멸을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질문에 낮음 37%(9개), 매우 낮음 25%(6개)로 응답하여 소멸의 위기감은 없었다. 거주하고 있는 마을의 인구 증감 전망에 대한 응답으로는 감소 50%(12개), 매우감소 13%(3개), 현수준유지 33%(8개)로 감소할 것이라는 응답이 높았다. 귀농귀촌인구 유입 가능성은 보통 58%(14개), 낮음 29%(7개)로 귀농귀촌인구 유입에 대해 다소 부정적으로 응답하였다. 외부인이 마을에 유입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질문에 보통 58%(14개), 긍정적과 부정적 모두 21%(5개)로 응답하여 외부인 유입되는 것에 대해 보통인 것으로 응답하였다.





귀농귀촌인구 유입 가능성



외부인 마을 유입 개방성

〈표 4-7〉 ‘소멸 위기 마을’의 마을 전망 부문 실태

읍면명	마을	향후 마을 소멸 예측	향후 인구 전망	귀농귀촌인구 유입 가능성	외부인 마을 유입 개방성
청양읍	정좌2리	매우 낮음	감소	보통	부정적
	정좌3리	낮음	현수준유지	보통	보통
운곡면	미량2리	매우 낮음	현수준유지	보통	긍정적
대치면 정산면	개곡리	매우 낮음	감소	보통	부정적
	구치리	매우 낮음	증가	높음	긍정적
	덕성1리	매우 낮음	감소	낮음	보통
목면	신흥2리	낮음	현수준유지	높음	긍정적
청남면	내직1리	높음	매우 감소	낮음	보통
	내직2리	높음	매우 감소	낮음	보통
	천내1리	보통	감소	낮음	보통
	천내2리	높음	감소	보통	보통
	중산리	보통	감소	보통	보통
장평면	도림리	높음	감소	낮음	보통
남양면	구룡2리	낮음	매우 감소	낮음	보통
	신왕1리	보통	현수준유지	보통	긍정적
	용마1리	매우 낮음	감소	보통	부정적
	매곡2리	낮음	감소	보통	보통
	온암1리	낮음	감소	낮음	긍정적
	온암2리	낮음	현수준유지	높음	보통
	온직3리	보통	현수준유지	보통	부정적
	용두2리	낮음	감소	보통	부정적
금정1리	보통	현수준유지	보통	보통	
화성면	광평리	낮음	현수준유지	보통	보통
	매산2리	낮음	감소	보통	보통

(3) 소결

‘소멸 위기 마을’ 중 인구 50명 이하의 과소 마을은 약 30%로 높지 않으며, 대부분 마을에 여성청년이 거주하고 있다. 미취학 아동 미거주 마을이 약 50%이 나 초중고 학생 거주 마을이 약 80%로 비교적 높다. 귀농·귀촌인 5명 이상 들어 온 마을 33%로 ‘소멸 위기 마을’에도 귀농·귀촌 인구가 많이 유입되고 있다.

‘소멸 위기 마을’임에도 휴경지가 많지 않으며 1개 마을을 제외한 모든 마을에 공·폐가가 있으며 5채 이상 공·폐가가 있는 마을도 20%를 넘는다. 마을소득 시설은 없으며, 마을사업 미추진도 75%이다.

정주민족도는 보통 이상 92%로 매우 높으며, 공동체 활력도도 보통 이상 92%로 높다. 주민참여 적극성은 보통 이상 100%로 ‘소멸 위기 마을’임에도 커뮤니티 부분은 긍정적·활성화되어 있다.

인구가 감소할 것이라고 63% 이상이 응답하였으나, 소멸에 대한 위기감은 높지 않았다. 귀농·귀촌 유입 가능성은 비교적 높고 외부인 마을 유입 가능성도 비교적 높았다.

〈표 4-8〉 청양군 ‘소멸 위기 마을’의 설문조사 소결

구분	내용
인구 부문	과소고령마을 비율 높지 않음(24개 마을 중 7개만 인구 50명 이하임) 대부분 마을에 확대 청년 여성 거주 초중고 학생 거주 마을이 비교적 많음(약80%) 귀농·귀촌인 5명 이상 들어온 마을 33%로 많은 편임
토지 및 경제 부문	휴경지는 비교적 많지 않음/ 마을 내 소득시설 없음 75% 마을이 마을사업 경험 없음
커뮤니티 부문	정주민족도와 공동체 활력도 비교적 높음/ 주민 참여 적극성 높음
마을 전망 부문	소멸에 대한 위기감 높지 않음 인구 감소에 대해서는 50% 정도마을이 감소 전망 귀농·귀촌인과 외부인 마을 유입 가능성도 비교적 높음

2. 인터뷰조사

1) '소멸 위기 마을' 심층 인터뷰

(1) '소멸 위기 마을' 심층 인터뷰 개요

'소멸 위기 마을' 인터뷰를 통해 마을 실태 및 마을소멸에 대응 전략을 발굴하고자 한다. 앞에서 선정된 27개 '소멸 위기 마을' 중 8개 마을(정좌3리, 천내2리, 구룡2리, 금정1리, 매곡2리, 온암1리, 온암2리, 용두2리)을 대상으로 심층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조사 목적은 '소멸 위기 마을'의 실태와 인터뷰조사를 통해 마을에서 원하는 소멸 대응 방안을 발굴하는 것이다.

〈표 4-9〉 심층 인터뷰 개요 및 항목

구분	내용	
인터뷰목적	마을 실태, 마을 소멸 대응 전략 발굴	
인터뷰대상	8개 - 청양읍(정좌3리), 청남면(천내2리) 남양면(구룡2리, 금정1리, 매곡2리, 온암1리, 온암2리, 용두2리)	
기간	2023. 11월 인터뷰, 2020년(청양군마을만들기센터 조사 자료)	
방법	1:1 면접조사	
내용	주거 및 환경	자연마을수, 10년 내 건축, 빈집, 활용 가능한 빈집, 소음진동약취유발 시설, 대중교통 횡수
	토지 및 경제	마을자산, 저온저장고, 자매결연마을, 팬션시설
	문화 공동체	문화복지프로그램, 공동체 조직, 마을 행사
	숙원사업 및 이슈	마을 숙원사업, 마을 이슈, 마을 갈등 및 화합

(2) 인터뷰 내용

청양군 ‘소멸 위기 마을’ 심층 인터뷰 결과 자연마을 3개 이상인 마을이 50%이며, 모든 마을에 신규 건축 행위가 있다(3채 이상 신규 건축 행위가 있는 마을도 8개 마을 중 5개 마을임). 빈집은 온암1리와 금정1리를 제외하고 3채 이상이 있으며, 활용 가능한 빈집 비율이 높은 편이다. 소음진동악취 유발시설이 있는 마을이 50%로 악취로 인해 귀농귀촌인 유입이 어려운 실정이다. ‘소멸 위기 마을’이지만 대중교통 접근성은 양호하다.

〈표 4-10〉 주거 및 환경

	자연 마을수	10년 내 건축	빈집	활용가능 빈집	소음진동악취 유발시설	대중교통 횟수
정좌3리	1	8	3	3	축사(육계)	3회/일
천내2리	3	1	4	4	축사(소)	6회/일
구룡2리	2	1	4	3	축사(돼지)공장(신기산업)	10회/일
매곡2리	4	3	5	2	없음	6회/일
온암1리	4	4	1	1	없음	6회/일
온암2리	2	2	4	3	없음	6회/일
용두2리	1	3	5	3	축사(돼지,양계)	4회/일
금정1리	3	5	0	0	없음	19회/일

모든 행정리에 마을 기금 및 마을 토지가 있으며, 마을 기금의 경우 출향민들의 기부 등으로 인해 매년 증가하고 있다.

마을 저온저장고 및 마을 소득시설(농산물 가공시설)은 없으며, 자매결연을 맺은 마을도 없고, 체험시설과 마을 내 숙박 및 펜션 시설도 전혀 없다. 즉, 마을 내 소득을 창출할 시설 및 교류 등은 없다.

〈표 4-11〉 토지 및 경제 부문

	마을자산	저온저장고(개인)	자매결연마을	팬션시설
정좌3리	마을부지(175㎡)	6	없음	0
천내2리	현금(3천만원)/ 논(3100평)	9	없음	0
구룡2리	마을통장(2000만원)	6	없음	0
매곡2리	마을통장(3백만원)	3	없음	0
온암1리	마을땅(70평)/ 마을통장(1300만원)	1	없음	0
온암2리	마을통장(4천2백만원)/마을땅(240평) 부녀회(8백만원)/ 청년회(2백만원)	7	없음	0
용두2리	마을통장(1천5백만원)/ 부녀회통장(4백만 원)/마을땅(30평)	4	없음	0
금정1리	마을통장(1천5백만원) 노인회(4백만원)/ 부녀회(5백만원)	20	없음	0

주: 기업 없음, 도시가스 없음(정좌3리 제외), 집하장 없음, 선별장 없음, 저온저장고 없음, 농산물 가공시설 없음, 체험시설 없음, 민박시설 없음

모든 마을에 일반적인 마을 행사는 있으며 정좌3리와 천내2리를 제외하고 공동급식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모든 마을에 동네계(동계)와 노인회는 결성되어 있으며, 청년회도 결성되어 있는 마을은 정좌3리, 온암2리, 용두2리이다.

문화복지프로그램이 전혀 없는 마을도 3개가 있으나 고령 주민들로 인해 프로그램 개설에 대해서는 수요가 높지 않았다.

〈표 4-12〉 문화·공동체 부문

	문화복지프로그램	공동체 조직 (동계, 노인회제외)	마을행사
정좌3리	사물놀이, 합창, 난타, 레크레이션	개발위원회, 부녀회, 청년회	정월대보름, 어버이날, 복더름, 관광
천내2리	체조교실	개발위원회 새마을부녀회	정월대보름, 칠월칠석, 복대기, 관광
구룡2리	-		마을야유회(봄, 가을) / 공동급식(농한기)
매곡2리	한글교실		마을관광(연1회), 공동급식(복날2회)
온암1리	-		공동급식(연2회)
온암2리	-	부녀회, 청년회	주민관광(4월), 공동급식(농한기, 복날)
용두2리	난타교실	부녀회, 청년회	공동급식(봄, 가을)
금정1리	요가교실	부녀회	공동급식(복날), 경로잔치(어버이날)

정좌3리의 경우 마을 내 독거노인을 위한 공동홈 구성을 위해 마을 주민들이 토지를 구매하였으나 실제 운영비의 문제로 인해 착수가 중단되었다.

천내2리는 오토캠핑장이 주변에 입지되어 마을 경관이 좋으며 공무원을 많이 배출하여 찬조금도 많은 마을이기에 경관정비 및 빈집을 이용하여 공유숙박을 추진하고자 한다.

구룡2리는 특별한 숙원사업은 없으나 파크골프장 조성계획으로 인해 인구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미취학아동을 포함한 학생이 6명 거주하고 있어 마을소멸은 매우 낮은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매곡2리는 자연부락이 4개로 마을이 동떨어져 있어 마을회관까지 모여 공동체 활동을 하기 어려움이 있다. 그러나 최근 5년간 귀향 5명으로 향후 마을소멸은 낮은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마을 내 침수 재해가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며 어르신들의 이동을 위한 노인이동 보조수단을 필요로 하였다.

온암1리는 저수지가 조성되어 경관은 좋으나 낚시 방문객들로 인해 마을이 더러워지고 있기에 낚시 방문객을 위한 화장실 조성 및 쓰레기장 조성의 시급함을 토로하였다. 그리고 저수지 주변에 주민 산책로 조성도 요구하였다.

온암2리는 2024년부터 농어촌생활개선사업을 추진한다. 이 사업으로 인해 주거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른 복지 사업 보다는 농산물 값을 높여 부자농촌을 만들면 외부인들의 유입과 정착이 높아질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용도2리는 마을 진입로 축사로 인해 귀농귀촌인 유입이 어려우며, 주민들의 안전을 위한 침수재해 개선 사업 추진과 관광객을 위한 옛백제길 되찾기 운동 및 복원 사업 추진을 희망하였다.

금정1리는 IC 인근에 위치한 마을로 인구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으며, 우물터와 역마 등 역사자원을 이용하여 관광지 구성을 요구하였다.

〈표 4-13〉 마을 이슈

	마을 이슈	숙원사업
정좌3리	청양군하수종말처리장에서 마을 기금(매년 받음) 마을회관 복지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하고 싶음 마을 독거노인 거주홈 조성을 위해 토지 구매(자녀들 후원 금) 하였으나 실제 운영비 문제로 인해 진행되지 않음	마을 공동홈 조성 문화복지프로그램 운영
천내2리	꽃길 가꾸기 및 오토캠핑장으로 인해 마을경관 좋음 빈집을 이용한 에어비앤비 사업 추진 공무원 마을(자녀 28명 공무원) 찬조금 많음	빈집을 이용한 공유숙박
구룡2리	배수로 정비 필요 미취학아동 포함한 초중고학생 6명 있음 파크골프장으로 인해 인구 증가할 것으로 전망 젊은 새마을지도사, 마을관심도 높음	
매곡2리	자연부락이 4개가 있어 마을 주민들 모이기 어려움 과소고령마을이나 최근 5년간 귀향 5명 침수재해 있음 정양 전창희씨 '양돈 우수 농가'	침수 재해 개선 노인이동 보조수단 보급
온암1리	저수지 낚시객으로 인한 쓰레기 넘침 낚시 방문객을 위한 쓰레기장 조성, 화장실 조성 필요 저수지 주변 주민 산책로 조성	저수지 쓰레기장과 화장실 조성 주민 산책로 조성
온암2리	2024년 농어촌생활개선사업 추진	농산물값을 높여 부자농촌 만들기
용두2리	마을 진입로에 둔사, 양계장으로 인해 외부인 유입 어려움 실거주 인구 34명으로 과소마을이지만 휴경지는 3%로 거 의 없음 마을 기금이 1500만원으로 많음 침수재해가 있음 옛백제길 되찾기 운동 및 복원, 다리 확포장	침수 재해 개선 옛백제길 되찾기 운동 및 복원
금정1리	귀향인 6명으로 많음 IC로 인해 인구가 매우 증가할 것으로 예상 외부인 유입에 매우 긍정적임 우물터(의자왕 관련), 역마 등 자원이 있음	역사자원을 이용하여 관광 지 조성

(3) 소결

① 청양군 개발행위 및 시설이 입지된 마을의 인구 증가 방안 필요

IC, 파크골프장, 골프장 인접 마을은 개발행위로 인해 인구가 증가하고 있거나 향후 증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빈집활용방안, 전원마을 조성 등 인구 증가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

② 경관과 역사자원이 있는 마을은 외부관광객 유입을 위한 시설 요망

자연경관이 우수한 마을은 마을 내 빈집을 이용하여 공유숙박 조성으로 마을 수익을 창출하고자 하며, 역사자원이 있고 교통 접근성이 좋은(IC 인근) 마을도 역사자원을 활용한 관광지 조성으로 외부인 유입을 증대시키고자 한다.

③ 마을 독거노인 돌봄을 위한 공동홈 조성 필요

독거노인의 외로움과 식사문제, 응급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공동홈 조성이 필요하나 이와 관련하여 운영 방안도 함께 고민되어야 할 것이다.

④ 고령 주민들의 의욕 고취 및 건강 프로그램 필요

고령자의 경우 이동도 어렵고 프로그램 참석에 대한 의욕도 매우 저하되어 있기 때문에 마을회관의 문화복지프로그램의 운영이 매우 어렵다. 그러나 자연적 인구 감소 요인인 사망을 낮추고 노인치매 방지 및 건강을 위해 프로그램의 효율적 운영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또한 마을 대중교통 접근성은 양호하기에 마을 내 이동을 위한 보행 이동 보조수단 보급이 필요하다.

⑤ 마을 생활환경, 침수재해 개선 사업 필요

주민의 고령화로 인해 마을 내 사업 추진에 대한 의욕은 거의 없으며 주거환경 개선에 대한 요구가 많은 실정이다. 마을 주민 산책길, 마을 침수 재해 개선, 깨끗한 마을을 만들기 위해 관광객이 많이 방문하는 곳에 쓰레기장과 화장실 조성 등을 요구하고 있다.

⑥ 마을 내 공동식사 봉사 운영의 어려움 해결 방안 필요

청양군에서 마을 내 공동식사 지원비 및 부식 지원이 있으며, 보통 부녀회장이 마을 회관에서 공동식사 봉사를 진행하였다. 그러나 부녀회의 고령화로 인해 공동식사 봉사의 어려움이 있기에 이를 해결할 방안이 필요하다.

⑦ 마을 내 축사로 인한 악취 문제 해결 필요

마을 초입의 축사 악취로 인해 갈등이 유발되거나 귀농귀촌인 유입 어려움이 있는 마을이 있다. 이에 악취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⑧ 마을 리더의 의식개선 필요

마을 리더에 따라 마을 활동 및 사업 적극성이 달라지기에 마을 리더의 의식 개선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고령화로 인해 문화복지프로그램을 운영하지 않는 리더도 있고 고령화로 인해 치매예방 및 건강한 생활을 위해 문화복지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싶어하는 리더도 있다. 마을 리더의 의식에 따라 사업이 진행되기에 의식 개선 사업이 필요하다.

2) 전문가 인터뷰

(1) 전문가 인터뷰 개요

전문가 인터뷰를 통해 마을소멸에 대응 전략을 발굴하고자 한다.

농촌 및 지역 전문가 8명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진행하였고, 인터뷰 목적은 타지역 사례 자문과 청양군 실태를 반영한 마을 소멸 대응 방안 발굴이다.

〈표 4-14〉 전문가 인터뷰 개요 및 항목

구분	내용
인터뷰목적	마을 소멸 대응 전략 발굴
인터뷰대상	전문가(이O신, 이O훈, 노O복, 이O신, 한O석, 이O정, 조O재, 백O진)
기간	2023. 9~11월
내용	타지역 사례 자문 / 마을 소멸 대응방안 자문

(2) 인터뷰 내용

① 사람 중심의 정책

마을인식 변화(마을자치 강화)를 기본으로 주민들이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사업 여건 마련

마을인식 변화(마을자치 강화)를 기본으로 주민들이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사업 여건이 마련되어야 한다. 즉, 개별사업의 해설서를 통해 사업을 선택할 수 있고 추진할 수 있도록 한다.

□ 사회적 인구 유입을 위해서는 살고 싶은 마을을 만들어야 하고 그 이유는 마을 주민들이 직접 만들어야 함

사회적 인구 유입을 위해서는 살고 싶은 마을을 만들어야 하고 그 이유는 마을 주민들이 직접 만들어야 한다. 이를 위해 지역의 특징을 살리는 기본적인 시스템과 소프트웨어 구축이 필요하다. 농촌을 도시와 동일한 수준으로 만들 수 없기에 지역 특징에 맞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사회적 인구 유입을 유도한다.

즉, 읍면에 최소 초등학교 하나 정도는 유지하고(시스템), 그 초등학교가 가지고 있는 특징(소프트웨어)을 잘 살려 읍에 있는 아이들 혹은 그 학교의 특징에 공감하는 외지인들이 들어오도록 한다. 어르신 돌봄 시스템도 선생님과 복지사뿐만 아니라 지역주민들도 함께 참여하도록 추진한다.

□ 마을소멸 정책이 아니라 인구감소와 고령화로 인해 주민들이 느끼는 불편함, 불안감(위기감)을 해결할 정책 수립이 필요

실제 주민들은 ‘마을 소멸’을 위기로 느끼지는 않을 것이다. 즉, 마을소멸이 되지 않도록 하는 정책이 아니라 인구감소와 고령화로 인해 주민들이 느끼는 불편함, 불안함(위기감)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정책 수립이 필요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마을 단위에서 주민들에게 필요한 정책 발굴을 위한 계획수립이 필요할 것이며 그 정책을 실행하는 것을 읍면단위에서의 전문조직 육성으로 가능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읍면 단위의 주민자치회 활동 지원, 읍면단위 발전계획 수립이 필요하다.

② 우수한 자연 경관을 활용 정책

농촌 경관자원을 활용한 워케이션 및 코워킹 공간 조성 지원

농촌의 우수한 경관 자원을 활용하고, 유희시설을 리모델링하여 마을주민에게는 생활 및 문화교류공간으로 사용하고 외부인에게는 워케이션 및 코워킹 공간을 조성하도록 지원한다.

③ 관계인구로 잠재적 인구 증대 정책

관계 맺기, 관계 유지하기 위한 정책(목적성 기부 등)이 필요

1사 1촌과 같이 형식적인 관계 맺기가 아니라 고향세의 목적성 기부와 목적성 사업이 필요하다. 지역에 필요한 사업이 있을 경우 사업 추진을 위한 비용 마련을 위해 고향세를 납부하고 사업완료 후 돌려받을 수 있는 관계 맺기가 필요하다. 예를 들어 폐교 살리기를 위한 고향세 목적성 기부 등이 필요하다.

④ 정주여건 조성 및 일자리 정책

농촌마을의 미래상에 대해 진단하고 개발·재편 방향을 설정

현재 준비 중인 특화지구의 범위를 마을 단위로 설정하고 사업을 계획한다.

예로 소멸마을 1→ 축산단지, 소멸마을 2→태양광 단지, 비소멸마을 1→ 주거단지, 비소멸마을 2→생활서비스 단지 등으로 설정한다.

유희시설 및 빈집 정책

노후 유희시설의 관리 활용을 통한 마을 경관개선 및 환경개선 필요, 빈집 및 폐교 활용 지원을 확대한다. 특히 빈집 중과세 도입 등을 통한 정주여건 개선이 필요하다.

□ 교육기반 확충 및 인재양성

지자체, 면단위 기업협력 프로그램 지원, 방과후 학교의 특성화 교육 운영 경비를 지원한다.

□ 고령자를 배려하는 스마트 기술 적용 마을 조성

고령자가 많기에 노인 안전을 위한 시설을 지원하고, 돌발사고, 생활안전을 위한 사전탐지 및 예방시스템을 구축한다. 예로 독일에서는 고령자 집에 센서를 부착하는 사업 추진을 통해 노인들의 불안감 해소, 자기 존엄성을 지키면서 마을에서 편안하게 살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었다. 마을 내 스마트 기술을 적용한 사례이다.

□ 고령자를 위한 공동홈 조성

독거노인의 갑작스러운 응급상황에 대비하고 사망률을 낮추기 위해 함께 거주하는 공동홈을 조성하여 마을에서 편안하고 안전하게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 작은 거점 발굴

중심지 - 중간거점 - 작은거점 - 배후마을(과소고령마을, 소멸마을)에 이르는 정주체계 위계에 따라 중간거점 지역 발굴 및 기능강화를 통해 과소고령마을·소멸마을의 안정적 정주체계 확립을 가능하게 하여야 할 것이다.

□ 생산·소득 및 좋은 일자리 창출

지역 및 마을 활력, 경쟁력 제고 측면에서 지역기반 소득 및 일자리 창출 확대, 지역 특산물 판매촉진, 정기 구매, 도농교류 지원이 필요하다.

⑤ 새로운 커뮤니티 조성 정책

□ 과소고령마을에 인접된 활성화된 마을과의 재편 정책

과소고령마을과 인접된 활성화 마을과 연계하여 기능적 재편 및 한계마을 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과소고령마을의 진단, 과소고령마을에 필요한 기능을 분석, 인접된 마을 중 성장하고 있는 마을과의 공간적, 기능적, 행정적 재편 방안 등에 대한 시험적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 지역민과 특성이 반영되기 위한 읍면 단위의 계획 수립 필요

과소고령화 시기에는 마을만들기가 행정리 단위에서 벗어나 면 단위로의 새로운 커뮤니티 육성과 관련된 마을만들기가 수립되어야 한다. 즉, 지역민과 특성이 반영되기 위한 읍면 단위의 계획 수립이 필요하다. 현실과 장래, 전문성이 담보될 수 있는 계획 수립과 현실성 있는 계획으로 효과성을 높여야 할 것이다.

⑧ 운영 조직 및 제도 마련

□ 마을주민참여형 지역관리와 사회적 기업 및 협동조합 설립 필요

마을 사업을 마을 자체의 힘과 역량에만 의지하지 말고 사회적기업 조직을 운영하여 일자리 창출 효과도 함께 유도한다.

□ 고령화로 인한 역량이 부족하기에 민간주체의 활동을 활성화

민간주체는 공익성과 수익성을 창출할 수 있는 조직으로 구성하여 마을의 사업을 주민과 함께 운영하도록 한다. 예로 에어비앤비 운영 사업 추진 시 마을 내 빈집을 활용하여 시설을 조성하고 지역 내 숙박업체 운영자로 구성된 조직이 이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한다.

(3) 소결

마을소멸의 대응방안은 현재 살고 있는 사람들이 살기 좋다는 생각이 들어야 지속가능한 마을이 될 수 있다. 이에 사람 중심의 정책이 우선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우수한 자연 경관 활용, 관계인구 증대, 정주여건 조성 및 일자리, 새로운 커뮤니티 조성, 운영조직 등의 정책이 추진되어야 한다.

〈표 4-15〉 전문가 인터뷰 소결

구분	내용
사람 중심의 정책	주민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사업 여건 마련 - 마을 자치 강화 - 개별 사업 해설서 주민이 살고 싶은 마을 스스로 조성 - 지역특성을 살리는 시스템과 소프트웨어 구축(교육, 어르신 돌봄 부문) 인구감소와 고령화로 주민의 불편함 인식 사업 - 읍면단위 발전계획 수립
우수한 자연 경관 활용 정책	유희공간을 리모델링하여 주민과 외지인 유입 공간 조성 - 생활 및 문화교류공간 - 워케이션 및 코워킹 공간 조성
관계인구로 잠재적 인구 증대 정책	관계 맺기, 관계 유지, 목적성 기부 사업 추진
정주여건 조성 및 일자리 정책	농촌 미래상 진단 및 재편 방향 설정 - 마을 특화지구 범위를 마을별로 설정 유희시설 및 빈집정책(빈집세) 교육기반 확충 및 인재양성 고령자 배려 스마트 기술 적용 마을 조성 고령자 공동홈 조성 작은 거점 발굴 생산 소득 및 좋은 일자리 창출
새로운 커뮤니티 조성 정책	과소고령마을과 활성화된 마을과의 재편 정책 읍면단위 계획 수립
운영 조직	마을주민참여형 지역관리 사회적 기업 및 협동조합 민간주체 활동 활성화

제 5 장

정책 대응 방안

1. 정책 방향
2. 부문별 정책 방안

1. 정책 방향

지방소멸대응을 위한 국가 차원의 노력과 정책이 추진되고 있고 지방에서도 자연적 인구 증가와 사회적 인구 증가 정책이 추진되고 있다.

자연적 인구 증가를 위해 출산율을 높이고 사망률을 감소시키는 정책, 사회적 인구 증가를 위해 인구 유출 최소화 방안과 인구 유입 방안에 대한 모색이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고령화가 점점 심화되고 출산율이 제고되지 않는 현 시점에서 자연적 인구 증가를 기대하기 어려우며, 한정된 인구를 가지고 사회적 인구 증가 정책을 추진할 때 제로섬 게임이 되기에 정책 대응 방안이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지방 뿐 아니라 마을단위의 소멸 대응 방안도 시급히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사람' 중심의 정책, '정주여건 개선 및 일자리 창출' 정책, '도시와 농촌의 소통' 정책, '우수한 자연경관 활용' 정책, '생활인구, 관계 인구' 확보로 잠재 인구 증대 정책, 늘어나는 '빈집 및 유휴공간 활용' 정책, 행정적·공간적·기능적 재편 정책, 주민자치강화와 마을만들기 사업의 지속화 정책, 인식개선 및 조직 기반 확충 정책 등에 방향을 맞춰 대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2. 부문별 정책 방안

1) '사람' 중심의 정책

'사람' 중심의 정책을 위해 연령별·계층별로 정책을 재정비하되 영유아동의 경우 국가가 아이를 책임지고 키운다는 철학에 근거하여 통합적 돌봄 정책이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통합적 돌봄, 육아 장려금, 독일의 마더센터 및 패밀리센터로 돌봄 공백 해소 등의 보육 정책을 추진하여 출산율 회복과 성공적인 가족 정책을 이끌어야 할 것이다.

또한 고령자의 경우 '보살핌 받을 권리'가 보장되어야 한다. 청양군은 노인돌봄이 잘 운영되고 있으나 고령자 돌봄에 대한 정책 개선이 고민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독거노인의 외로움과 식사문제, 응급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공동홈 조성 필요하나 이와 관련하여 운영 방안도 함께 고민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자연적 인구 감소 요인인 사망을 낮추기 위해 그리고 노인치매 방지 및 건강을 위해 프로그램의 효율적 운영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마을 내 스마트 기술을 적용하여 노인 안전 시설 지원, 돌발사고, 생활안전을 위한 사전탐지 및 예방시스템을 구축한다.

'사람' 중심의 정책 추진을 통해 지역에서의 인구 유출이 감소될 것이라 사료된다. 결국에는 공동체를 회복하고 다양한 사람들과 교류하며 커뮤니티를 맺음으로써 활력있는 마을 공동체를 조성하는 것이 성공 요인일 것이다.

2) '정주여건 개선 및 일자리 창출' 정책

정주여건 개선, 즉 공간 부문 대책이 시행될 필요가 있다. 인구 유입 및 정착을 유도하기 위한 전략이 추진되더라도 마을 인구들이 살아가는 공간과 생활환경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사업의 효과를 발휘할 수 없다.

따라서 삶의 질 만족도를 보장할 수 있는 수준의 마을 정주 여건 개선이 시행되어야 한다. 모든 마을의 정주여건 개선은 어렵겠으나, 삶의 질 개선, 인구 유입을 위해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정주여건 + 일자리 창출(일자리+주거단지+생활여건개선+공동체 강화)가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지역자원을 활용한 로컬크리에이터와 지역혁신가 양성사업, 소셜벤처, 사회적 기업 + 액셀러레이팅을 통한 일자리 창출도 함께 고민되어야 할 것이다.

마을 산업 및 자원개발 측면에서 지역 고유의 자원을 활용한 산업화 및 고부가가치화, 6차 산업화 촉진 방안이 추진되어야 한다. 마을 주민이 주도하는 마을 산업(사회적 경제 등)을 육성함으로써 내부 마을경제 활성화 및 경제순환을 도모하여 전략사업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3) '도시와 농촌의 소통' 정책

'도시와 농촌의 소통' 정책이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농촌소멸을 대응하기 위해 도시 쏠림 현상을 농촌 분산으로 전환하여야 한다. 도시와 농촌 간의 다양한 교류를 통해 농촌마을의 매력을 알리고 가치를 재발견하여 향후 농촌마을로의 유입을 꾀할 수 있을 것이다. 즉, 사람과 사람, 자연과 사람, 도시와 농촌 간의 소통을 통해 젊은 층 이주를 기대할 수 있다.

농촌마을 가치와 매력을 재발견, 지방 교류 및 유입 유도(공주 청년마을 '자

유도'), 초등학교 교육을 차별화(경남 함양 서하초등학교)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

4) '우수한 자연경관 활용' 정책

도시에는 없는 우수한 농촌 경관을 활용한 대응방안이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일본의 과소화마을인 가미야마, 와카야마의 경우 자연 경관을 활용하여 IT 기업 16개의 위성 사무실(위케이션)을 조성하고 인구 유치에 성공한 사례다.

일본 에치고츠마리의 경우 과소화된 산촌 마을에 농업과 지역을 주제로 삶의 모습을 예술작품을 통해 보여주는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1994년 시작된 이 사업은 총 6년간 준비 기간을 걸쳐 2000년 제1회 '대지의 예술제(이치고츠마리 아트 트리엔날레)'를 시작하였고 첫해 138개 팀 153개 작품, 17만명 방문하였다. 2018년에는 363개 팀 379개 작품, 54만명이 방문하여 큰 성공을 거두었다. 마을 자체가 예술품 캔버스인 이 예술제를 통해 사람과 사람, 자연과 사람, 도시와 농촌의 소통이 가능하게 되었고 죽어가던 마을에 젊은 층이 모여 들기 시작하였다.⁴³⁾

도시에는 없는 농촌다움을 활용하여 관광객 및 체류인구 증대뿐 아니라 기업 유치와 인구 유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었다.

농촌의 우수한 경관 자원을 활용하고, 유희시설을 리모델링하여 마을주민에게는 생활 및 문화교류공간으로 사용하고 외부인에게는 위케이션 및 코워킹 공간을 제공하도록 지원한다.

43) <https://brunch.co.kr/@soolstory/6>

<https://froma.co/articles/730>

안양문화예술재단, 2021, 안양공공예술프로젝트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연구 용역, 이음, pp.48-50(file:///C:/Users/yunjim/Downloads/202203301647505988982.pdf)

5) '생활인구, 관계 인구' 확보로 잠재 인구 증대 정책

'생활인구, 관계 인구' 확보로 잠재 인구를 증대하는 방안이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관계인구는 정주인구 개념을 확대하여 그 지역에 거주하지는 않지만 우리 지역과 다양한 방식으로 관계를 맺는 인구를 의미한다.

외부인이 지역에 잠시 체류할 수 있는 체재형 별장 조성(독일의 클라인가르텐, 러시아 다차, 일본 야치요초), 한 달 살이 체험 사업, 지역 자원을 활용해 지역 방문 인구를 늘리는 로컬크리에이터와 지역혁신가 양성, 교육 및 직장으로 인해 진출하더라도 대도시에서 나가서 형성된 네트워크를 지역으로 가지고 올 수 있도록 다양한 형식의 관계인구를 설정할 필요가 있다.

1사 1촌과 같이 형식적인 관계 맺기가 아니라 고향세의 목적성 기부와 목적성 사업이 필요하다. 지역에 필요한 사업이 있을 경우 사업 추진을 위한 비용 마련을 위해 고향세를 납부하고 사업 완료 후 돌려받을 수 있는 관계 맺기가 필요하다. 예를 들어 폐교를 살리기 위한 고향세 목적성 기부 등이 필요하다.

6) 늘어나는 '빈집 및 유휴공간 활용' 정책

늘어나는 '빈집 활용' 정책이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노후화된 빈집으로 인한 안전사고 위험, 도시나 마을 미관 저해, 쓰레기 무단투기 및 우범지대 등 다양한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0년 기준으로 전국 주택 1,852만 채의 8.2%에 해당하는 151만여 채가 빈집으로 나타났다.⁴⁴⁾ 외국의 경우 '빈집 중과세' 도입, '빈집세'를 부과하여 빈집 활용을 제고하려는 움직임이 있으며 최근 우리나라에서는 빈집 실태조사 및 정비계획 수립과 함께 '빈집 및

44) <https://blog.naver.com/hyg08301/222772228428>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이하 빈집법) 개정안을 마련해 나가고 있다.⁴⁵⁾

또한 화순의 10,000원 아파트 임대, 유럽 빈집 1유로 판매 및 정착금 지원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이러한 노력과 함께 귀농·귀촌인의 주거공간, 지역활동가와 문화예술인의 작업 및 전시 공간, 문화·예술공간, 쉼터 및 커뮤니티 공간, 한 달 내집, 일 년 내집 프로젝트, 일과 쉼을 병행하는 워케이션(Work+Vacation) 하우스 조성, 잠재적 귀농·귀촌인 유치를 위한 인큐베이팅 공간 등 빈집을 리모델링하여 유연하고 다양한 활용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7) 행정적·공간적·기능적 재편 정책

작은 거점 마련과 과소고령마을의 재편 정책이 필요하다.

중심지 - 중간거점 - 작은거점 - 배후마을(과소고령마을, 소멸마을)에 이르는 정주체계 위계에 따라 중간거점 지역 발굴 및 기능강화를 통해 과소고령마을·소멸마을의 안정적 정주체계 확립을 가능하게 하여야 할 것이다.

과소고령마을과 인접된 활성화 마을과 연계하여 기능적 재편 및 한계마을 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과소고령마을의 진단, 과소고령마을에 필요한 기능을 분석, 인접된 마을 중 성장하고 있는 마을과의 공간적, 기능적, 행정적 재편 방안 등에 대한 시험적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8) 주민자치강화와 마을만들기 사업의 지속화 정책

마을인식 변화(마을자치 강화)를 기본으로 주민들이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45) <https://blog.naver.com/hyg08301/222772228428>

사업 여건을 마련하도록 한다. 사회적 인구 유입을 위해서는 주민들 스스로 살고 싶은 마을을 만들어야 하기에 주민의 인식 개선과 마을자치 강화를 통해 마을 주민이 마을을 살리는 정책을 추진하도록 한다.

또한 기존 사업효과 분석 시 청양군은 마을사업을 실시하게 되면 인구비율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에 청양군 마을만들기지원센터를 중심으로 단계별 마을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할 것이다.

9) 인식개선 및 조직 기반 확충 정책

‘인식 개선 및 공감대 형성’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인구 감소 및 마을소멸에 대한 심각성이 부족하기에 이에 대한 인식 개선과 공감대 형성은 매우 중요한 숙제이다.

일본의 지역 운영조직은 지역의 생활을 돌보기 위해 지역에 생활하는 다양한 주체(NPO법인, 지역자치 단체, 유한회사 등)가 참여하며, 협의조직이 인정한 지역운영 방침에 근거하여 지역 과제 해결을 위한 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천하는 조직이다. 이를 통해 농촌마을의 기본적인 정주생활 서비스의 안정적 공급을 지원할 수 있으며 마을 스스로 마을소멸에 대처하여 사회적 공동체 회복 및 유지에 기여할 수 있다.

이에 마을주민참여형 지역관리와 사회적 기업 및 협동조합 설립이 필요하다. 마을 사업을 마을 자체의 힘과 역량에만 의지하지 말고 사회적기업 조직을 운영하여 일자리 창출 효과도 함께 유도한다.

또한 고령화로 인해 역량이 부족하기에 민간주체의 활동을 활성화한다. 민간 주체는 공익성과 수익성을 창출할 수 있는 조직으로 구성하여 마을의 사업을 주민과 함께 운영하도록 한다. 예로 에어비앤비 운영 사업 추진 시 마을 내 빈

집을 활용하여 시설을 조성하고 지역 내 숙박업체 운영자로 구성된 조직이 이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한다.

청양군 - 읍면 - 마을의 상호간 협력 및 연계를 강화하여 인구 감소에 공동으로 대응하고, 다양한 주체의 참여를 통해 지속가능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주민, NGO, 대학 및 연구원 등의 전문가 등도 시책 추진의 거버넌스에 참여하여 활성화를 유도하며, TF 및 운영조직을 구축하여 기능을 보다 강화·확대하도록 한다.

구분	내용
사람 중심의 정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유아동을 청양군이 책임지고 키우는 철학에 근거한 돌봄 정책 - 고령자의 보살핌 받을 권리 보장 돌봄 정책 - 고령자 사망요인 낮추기 위한 응급상황 대비 정책 - 활력있는 마을 공동체 조성(사람들과 교류하며 커뮤니티 형성) - 사람중심의 차별화된 시스템과 소프트웨어 구축(교육, 어르신 돌봄 부문)
정주여건 개선 및 일자리 창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자리 + 주거단지 + 생활여건 개선 + 공동체 강화 - 고령자 배려 스마트 기술 적용 마을 조성 - 고령자 공동홈 조성 - 6차 산업 촉진 - 마을 주민 주도의 마을산업(사회적 경제) 육성 - 로컬크리에이터, 지역혁신가, 사회적 기업, 액셀러레이팅을 통한 일자리 창출
도시와 농촌 소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촌마을 가치와 매력을 재발견, 알리기(청양 교류 및 유입 유도) - 사람과 사람, 자연과 사람, 도시와 농촌 소통 - 초등학교 교육 차별화하여 도시 쏠림을 농촌으로 분산 - 지방 교류 및 유입 유도(공주 청년마을 '자유도')

구분	내용
우수한 자연 경관 활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촌의 우수한 경관 자원 활용 - 일본 과소마을 가미야마 자연경관을 활용하여 IT 기업 위성사무실 16개 조성, 인구 유치 성공 - 일본 에치고초마리는 산촌 과소마을 자체를 예술품 캔버스로 활용하여 2000년 '대지의 예술제' 시작 → 최근 363개 팀 작품, 54만명 방문, 젊은 층 모여들기 시작(체류인구→정주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희시설 리모델링으로 주민 생활 및 문화교류공간 조성 - 외부인 워케이션 및 코워킹 공간 조성
생활인구, 관계인구 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말농장, 한달살이 체험 등으로 생활인구 확보 (클라인가르텐, 다차, 아치요초) - 출향민의 관계인구 형성 (대도시에서 형성된 네트워크를 지역으로 연계) - 고향세의 목적성 사업 기부 (폐교 살리기를 위한 고향세 목적성 기부 등)
빈집 및 유희공간 활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빈집세 부과(농촌 경관세 도입) ex. 외국 빈집 종과세, 빈집세 부과 움직임, 우리나라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 마련 - 화순 1만원 임대 아파트, 유럽 1유로 판매 및 정착금 지원 - 귀농귀촌인 주거공간, 예술인 작업공간, 커뮤니티 공간, 한 달 내집, 워케이션하우스 등 활용 모델
행정적·공간적· 기능적 재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작은 거점 발굴 및 기능 강화 (중심지 - 중간거점 - 작은거점 - 배후마을(과소 고령마을, 소멸마을) 정주체계) - 과소고령마을의 재편 정책
주민자치강화 마을사업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마을 자치 강화(주민 스스로 살고 싶은 마을 만들기) - 단계별 마을 사업 지속적 추진
인식개선 및 조직 기반 확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마을 소멸에 대한 공감대 형성 - 고령화로 주민의 힘과 역량 의지 어렵기에 사회적 기업 조직 운영 - 민간주체 활동 활성화 - 청양군 - 읍면 - 마을의 상호간 협력 및 연계를 강화

제 6 장

결론 및 정책 제언

1. 결론
2. 정책 제언

1. 결론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인구감소에 따라 지방소멸의 위기의식이 확대되고 있다. 이에 지방소멸에 대응하기 위해 국가차원의 정책 추진 및 제도 개정, 지자체 차원의 인구감소 대응 체계 구축 및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지방소멸에 대한 논의와 함께 농촌마을소멸에 대한 심각성을 우선적으로 인지하고 마을소멸 대응 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노력이 추진되어야 하나, 실제 마을소멸에 대한 실태 진단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실정이다.

본 연구는 본격적인 인구감소시대 도래와 함께 저출생·고령화로 소멸 위기의식이 확대되고 있는 현시점에서 지방소멸이 아닌 마을소멸 대응을 위한 마을(행정리) 단위 소멸 실태를 분석·진단하고, 이를 바탕으로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연구의 공간적 범위는 충청남도 청양군 행정리 단위를 기준으로 연구를 진행하며, 시간적 범위는 2023년, 2018년, 2013년 데이터를 이용하여 시계열 분석을 수행하였다. 연구 내용으로 선행연구 및 정책 고찰, 청양군의 소멸 실태 분석, 추진된 마을사업 효과분석, 설문조사 및 인터뷰조사를 추진하였고 이를 통해 청양군 마을소멸 대응 방안을 제시하였다.

연구 결과 사람 중심의 정책, 정주여건 개선 및 일자리 창출, 도시와 농촌 소통, 우수한 자연경관 활용, 생활인구 및 관계인구 확보, 빈집 및 유휴공간 활용, 행정적·공간적·기능적 재편, 주민자치강화 마을만들기 사업의 지속화, 인

식개선 및 조직기반 확충 9개의 정책 방향을 제시하였다.

정책 방향별 방안으로는 첫째, 사람 중심의 정책 추진을 위해 영유아동을 청양군이 책임지고 키우는 철학에 근거한 돌봄 정책, 고령자의 보살핌 받을 권리 보장 돌봄 정책, 고령자 사망 요인 낮추기 위한 응급상황 대비 정책, 활력있는 마을 공동체 조성(사람들과 교류하며 커뮤니티 형성)이 추진되어야 한다.

둘째, 정주여건 개선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해 일자리 + 주거단지 + 생활여건 개선 + 공동체 강화, 고령자 배려 스마트 기술 적용 마을 조성, 고령자 공동홈 조성, 6차 산업 촉진, 마을 주민 주도의 마을산업(사회적 경제) 육성, 로컬크리에이터, 지역혁신가, 사회적 기업, 엑셀러레이팅을 통한 일자리 창출 방안이 제시되었다.

셋째, 도시와 농촌 소통을 위해 농촌마을 가치와 매력을 재발견, 알리기(청양 교류 및 유입 유도), 초등학교 교육을 차별화하여 도시 쏠림을 농촌으로 분산, 지방 교류 및 유입 유도(공주 청년마을 '자유도') 등을 통해 사람과 사람, 자연과 사람, 도시와 농촌 소통 정책이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넷째, 농촌의 우수한 경관 자원 활용 정책으로는 외부인을 위한 워케이션 및 코워킹 공간 조성 사업, 유희시설 리모델링으로 주민 생활 및 문화교류공간이 조성되어야 한다.

다섯째, 생활인구 및 관계인구 확보를 위해 주말농장, 한달살이 체험 등으로 생활인구 확보(클라인가르텐, 다차, 야치요초), 출향민의 관계인구 형성(대도시에서 형성된 네트워크를 지역으로 연계), 고향세의 목적성 사업 기부(폐교 살리기를 위한 고향세 목적성 기부 등) 등이 제시되었다.

여섯째, 빈집 및 유희공간 활용 방안으로는 빈집세 부과(농촌 경관세 도입), 임대 아파트 및 정착금 지원, 귀농귀촌인 주거공간, 예술인 작업공간, 커뮤니티

공간, 한 달 내집, 워케이션하우스 등 활용 사업이 제시되었다.

일곱째, 행정적·공간적·기능적 재편 방안으로는 작은 거점 발굴 및 기능 강화, 과소고령마을의 재편 정책이 제시되었다.

여덟째, 주민자치강화 및 마을사업 추진 방안으로 마을 자치 강화(주민 스스로 살고 싶은 마을 만들기), 단계별 마을 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이 제시되었다.

마지막으로 인식개선 및 조직 기반 확충 방안으로는 마을 소멸에 대한 공감대 형성, 고령화로 인해 주민의 힘과 역량, 의지만으로 추진이 어렵기에 사회적 기업 조직 운영, 민간주체 활동 활성화, 청양군 - 읍면 - 마을의 상호간 협력 및 연계를 강화가 제시되었다.

사업 추진 방향 중 마을소멸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대응영역’과 인구감소 시대에 적응하는 ‘적응영역’으로 구분하여 사업을 추진하도록 한다. 마을소멸 대응영역은 정주여건 개선 및 일자리 창출, 도시와 농촌 소통, 빈집 및 유휴공간 활용, 행정적·공간적·기능적 재편, 인식개선 및 조직기반 확충 정책이고, 적응영역은 사람 중심의 정책, 우수한 자연경관 활용, 생활인구 및 관계인구 확보, 주민자치 강화 마을만들기 사업의 지속화 정책이다.

	사람 중심	정주여건 개선 및 일자리	도시와 농촌의 소통	우수한 자연경관 활용	생활인구, 관계인구 확보	빈집 및 유휴공간 활용	행정적 공간적 기능적 재편	주민자치 강화 마을만들기 사업의 지속화	인식개선 및조직 기반 확충
대응 영역		√	√				√		√
적응 영역	√			√	√	√		√	

본 연구는 청양군의 마을소멸실태를 진단하고 이를 통해 대응방안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으며, 이 연구를 통해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인구감소, 마을소멸 대응정책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 가능하다. 또한 청양군 대상의 파일럿 연구 수행을 통해 향후 충남 전역의 마을소멸 실태 분석 및 진단 시 효율적으로 진행될 것이라 사료된다.

연구 한계 및 향후 연구로는 첫째, 마을사업 효과 분석 시 마을만들기 사업으로만 한정하여 효과를 분석하였으나, 향후 범부처 단위에서 추진된 사업을 대상으로 효과분석을 수행한다면 어떠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마을소멸 대응을 위한 긍정적 요소인지 구체적으로 진단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기존 연구의 과소마을은 대부분 인구 50명 또는 가구 20가구로 설정하여 분석하고 있으나 청양군은 인구 50명 이하의 행정리 마을이 거의 없어 과소마을을 인구 70명으로 변경하여 분석하였다. 파일럿 연구를 충남 전역으로 확대 적용할 때 과소마을에 대한 재설정이 필요하다. 셋째, 마을실태 분석 시 현시점에서의 진단과 인구 시계열에 대한 진단만 하였으나, 향후 연구에서는 급격하게 마을소멸이 진행되는 행정리의 소멸원인 진단과 소멸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에 대한 진단 연구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정책방안을 구체화하는 시책사업 발굴, 사업추진상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유휴토지 활용 등)에 대한 후속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2. 정책 제언

첫째, 지방소멸에 대한 논의와 함께 농촌마을소멸에 대한 심각성을 우선적으로 인지하고 마을소멸에 대한 실태 진단을 실시한다. 지방소멸의 경우 시군, 읍면동 공간 단위에서 데이터 구축 및 분석이 진행되어 다양한 실태 진단과 정책이 추진되고 있으나, 마을 단위는 전무하기에 농촌마을소멸 대응을 위해 기초적으로 마을 단위의 소멸에 대한 시계열 분석과 진단이 필요하다.

둘째, 지방소멸 정책이 아닌 마을단위의 소멸 정책이 추진되어야 한다. 2020년 자치분권정책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의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중 거점 관련 사업을 제외한 모든 마을 단위 사업이 지방으로 이양되어 국가차원에서 마을단위의 사업이 추진되기 어렵다. 물론 지자체 차원에서 다양한 노력을 진행하고 있으나, 인구 감소시대에는 읍면소재지를 제외한 마을은 소외되어 마을소멸의 심각성이 더욱 높아질 것이다. 마을의 소멸은 즉, 지방의 소멸이기에 현 지방소멸 정책이 아닌 마을단위의 소멸 정책이 개발되고 추진되어야 한다.

셋째, 마을의 기능 재정립과 마을소멸의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 지방소멸 위기 시대에 마을소멸에 대한 문제 의식이 없다. 그러나 마을의 소멸은 지방소멸과 밀접히 연결되어있기에 마을소멸 대응을 위한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 또한 도시와 다르게 여러 사람들과의 상호관계 속에서 생활을 유지하고, 커뮤니티가 매우 강조되고 있다. 그러나 소멸의 위기 속에서 농촌마을의 제 기능에 대해 재정립하여, 기능에 따른 정책 대응방안이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넷째, 인구감소시대에 마을의 소멸은 당연한 문제이기에 마을소멸위기 마을에 대해 실태 분석을 위한 데이터 구축, 모니터링과 마을 기록 DB 구축이 필요하다. 소멸에 대응하기 위해 과거부터 현재까지 아카이브 사업을 추진하여 체계적인 마을 기록 사업이 필요하다.

다섯째, 최근 인구감소 대응방안으로 생활인구 키워드가 대두되고 있기에 마을단위에서 추진할 수 있는 생활인구 시책이 발굴되어야 한다. 그리고 고령화로 인해 주민주도의 사업 추진이 어렵기에 사업추진을 위한 민간주체의 적극적인 발굴이 필요하다.

참고문헌

- 강동우 등, 2018, 인구구조 변화 및 지방소멸에 대응하는 지역고용정책 사례 연구, 한국노동연구원
- 고문익, 2021, 한국의 지방소멸위험지수 분석과 시사점,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관계부처 합동, 2021, 지역소멸 선제대응 방안
- 구자인, 2021.05.14., 농촌지역개발사업, 반성없는 도돌이표 안된다, 한국농어민신문
- 기정훈, 2011, 인구감소 지역의 지역쇠퇴 대응을 위한 정책과제 연구, 국회입법조사처
- 기획재정부 보도자료(2022.12.28.), 인구구조 변화와 대응방안 4대분야·6대 핵심과제 선정
- 김경민, 2020, 지방재정 이양에 따른 변화와 농촌협약제도, 진안군마을만들기지원센터 마을광장 (66), p.3
- 김두환, 2015, 농촌 지역 운영 체제 만들기와 제도 구축 방향(일반 교토부 사례)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15 KREI 미래농정포럼』, pp.47-72.
- 김솔희·서교·박지영·이성우·전정배, 2020, 정부별 국정운영 방향과 농촌지역개발사업 변화 분석, 한국농촌계획학회, 26(1), pp.123-136
- 김현호 등, 2021, 국가위기 대응을 위한 지방소멸 방지전략의 개발, 한국지방행정연구원
- 김형주, 2021, 자치분권시대의 주민참여형 농촌지역개발사업 추진방안
- 농림축산식품부, 2022, 농촌 신활력플러스사업 설명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2023, 2023년도 일반농산어촌개발 사업설명회 자료
대한민국정부,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 박진경 등, 2019, 지역인구감소 대응을 위한 종합대책 마련 연구, 한국지방행정연구원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 서천군, 2018, 서천군 한계마을 실태분석 및 유형별 정책 대응방안, pp.13-14
- 신병건, 2021, 농어촌지역개발사업에 대한 성과 및 만족도 분석: 금성산성·금안·돈지권역 사업을 사례로, 전남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pp.1-2
- 안양문화예술재단, 2021, 안양공공예술프로젝트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연구
용역, 이음, pp.48-50
- 유선종·노민지, 2018 지방소멸 어디까지 왔나? 매일경제신문사, pp.33-34
- 유학열·조영재·박경철·이샘·전지훈·이도경, 2022, 지방소멸위기에 대응한
충남 농어촌 과소지역 활성화 전략 - 사람, 공간, 공동체를 중심으로,
충남연구원
- 윤정미·김동한·채명기, 2016, 충남 자연마을(소지역) 차원의 인구·가구·주택
특성분석 및 정책과제, 충남연구원
- 윤정미, 2021, 저출생·고령화에 대응한 농어촌 행정리소멸지수 개발 및 적용,
충남연구원
- 윤정미, 2021, 지방소멸지수를 이용한 행정리 마을소멸위험 변화 분석, 충남
연구원
- 윤정미·김동한, 2017, 한계마을 특성분석 및 변화예측: 충청남도를 사례지역
으로, 한국지역개발학회지
- 윤정미·김정하, 2014, 충남 기초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방안 연구 I - 마을차
원의 기초공간데이터 구축-, 충남연구원

- 이병기, 2017, 인구감소에 따른 기초자치단체의 지속가능성 강화방안, 한국 지방행정연구원
- 이상호, 한국의 지방소멸 2018, 한국고용정보원, p.9
- 장인수 등, 2020, 지역 인구 변화에 따른 정책 과제와 대응 방안,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전국 시도연구원협의회, 2017,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지역소멸 대응방안 연구
- 조영미, 2020, 도시재생수법을 적용한 지방소멸지역의 활성화 방안 연구, 영남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조영재, 2018, 한계마을정책 개발을 위한 최근 일본의 한계집락 관련 논의 및 정책 동향 연구, 충남연구원
- 조영재·유학열·윤정미·이관률·박경철·엄성준·김정하, 2013, 과소화·고령화에 대응한 ‘한계마을정책’ 도입을 위한 기초연구, 충남발전연구원
- 조영재·윤정미, 2018, 과소지역 농촌마을의 공간적 재편에 관한 정책사례 및 주민의식조사 연구, 충남연구원
- 조영재·윤정미·김두환·조은정, 2014, 농촌마을 과소화·고령화에 대응한 마을 재편 방안 연구, 충남연구원
- 조영재·윤정미·한승석, 2019, 인구감소시대에 대응한 마을 모니터링 체계 구축 및 관리방안 연구, 충남연구원
- 조영재·조봉운·유학열·윤정미·한승석, 2020, 인구감소시대에 대응한 지방정부의 농촌지역정책 구상 - 충청남도를 중심으로, 충남연구원
- 조원지, 2022, 전라북도 농촌 활성화를 위한 관계인구의 개념과 정책과제, 전북연구원 이슈브리핑 v.271
- 조은상, 2018, 지역소멸 예방을 위한 사례조사 연구-평생직업교육과의 연계,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조진우, 2023, 지역소멸 대응을 위한 지방자치의 법적 과제, 지방자치법연구

- 제77호 제1호, pp.3-27
- 차미숙 등, 2021, 지방소멸 대응 대책 수립 연구, 국토연구원
- 차미숙, 2021, 지방소멸 대응 정책 방향과 추진 전략, 국토연구원
- 충남연구원, 2018, 서천군 한계마을 실태분석 및 유형별 정책 대응방안
- 충남연구원, 2021, 청양군 인구정책 기본계획
- 충청남도, 2021, 충남형 마을만들기사업 시행지침, p.2
- 하동현, 2017, 인구감소시대의 지역활성화와 지방분권 - 일본의 지방소멸론
과 지방창생을 소재로, 한국지방행정학보 제14권 제3호, pp1-27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17, 일본 지방창생 전략과 과소화마을 사례조사 출장
보고서
- 행정안전부 보도자료(2021.10.18.), 인구감소지역 89곳 지정 지방 살리기
본격 나선다 - 행안부, 89개 지역을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 행정·재정적
지원 추진 -
- 행정안전부 보도자료(2022.05.29.), 인구감소지역, 정주여건개선·지역활력
도모 체계적 지원 확대 -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국회 본회의 통과
- 小田切徳美, 2009, 農山村再生「限界集落」問題を超えて, 岩波ブックレットNO.768,
岩波書店
- 佐藤周平·山下詠子·竹本太郎, 2022, 新潟県上越市不動地区における集落合併
の要因, Journal of Forest Economics Vol.68 No.2 (2022), pp.1-16.
- 国土交通省, 2001, 「平成12年度集落の衰退による地域の社会基盤等への影響
に関する調査報告書」
- 国土交通省(国土審議会計画部会), 2006, 第6回自立地域社会専門委員会議事
次第, 資料4-2 参考資 (今後の集落のあり方関係)
- 総務省(地域力創造グループ地域振興室), 2002, 地域運営組織の形成及び持続

的な運営について

総務省(地域力創造グループ過疎対策室), 2022a, 過疎地域等集落ネットワーク

圏形成支援事業について

総務省(地域力創造グループ過疎対策室), 2022b, 特定地域づくり事業協同組合

制度の概要について

総務省地域力創造グループ地域振興室. 2014. RMO(地域運営組織)による総合

生活支援サービスに関する調査研究報告書

農政改革特命チーム. 2009a.農政改革特命チーム第14回会合議事次第(資料4

農山漁村対策).

農政改革特命チーム. 2009b.農政改革特命チーム第13回会合議事次第(資料2

農山漁村対策).

総務省. 2015. 地域における生活支援サービス提供の実証事業等(説明資料1).

<https://www.mois.go.kr/frt/sub/a06/b06/populationDecline/screen.do>

(행정안전부/업무안내/지방자치균형발전실/지방소멸대응)

<https://m.blog.naver.com/newroad2015/222878304962> (일본 작은

농촌마을 가와바, 200만 관광객 몰리는 까닭은?)

<https://blog.naver.com/hyg08301/222772228428>

<https://brunch.co.kr/@soolstory/6>

<https://froma.co/articles/730>

부록

1. 전략과제 착수연심회 의견 및 반영 사항
2. 전략과제 중간연심회 의견 및 반영 사항
3. 전략과제 최종연심회 의견 및 반영 사항
4. 전략과제 선정위원회 의견
5. 착수연심회 사전 자문회의 의견
6. 의존도 분석 결과(충청권)
7. 행정리 조사표
8. 마을 심층 인터뷰 조사표
9. 10년간 행정리 마을 인구(6월말 기준)

1. 전략과제 착수연심회 의견 및 반영 사항

	주요 내용	반영여부
용어 정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마을소멸에 대한 조작적 정의- 소멸을 인구 0으로 볼 것인지에 대한 정의 필요 	반영
제목 수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마을 축소는 제외할 것 	반영
차별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행연구와 차별성을 명확히 할것 	반영
인구 감소 원인분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구 감소 원인 분석 필요 	반영
조사 자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집락조사 자료 참고 	반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계열 실태 분석이 필요 	반영
연구 범위 수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응방안이 필요하지만 대응방안에 대한 깊이가 한계가 있을 것 같음 - 실태만 정확히 분석하고 방향성을 제시할 것 	정책대안을 제외하지 않고 방향 제시하겠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멸 실태만으로도 시의성이 있기에 정책대안은 제외하고 연구 범위 축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맞춤형 대응방안은 한계가 있기에 범위에서 제외할 것 	
마을 지원사업 효과 분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마을 지원 사업을 유형화하여 정책 효과 분석 - 인구 증가만이 아니라 인구 감소 정도 수준을 판단하는 것 고려 - 특정 사업이 수치적으로 높게 나왔다면 대응방안의 방향성에 도움이 될것임 • 농촌마을지원사업 효과 분석은 별도의 과제로 진행할 것 - 쉽게 마을사업 추진 유무에 따라 인구 구성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인구 변화 상관관계 분석도 좋을 듯 - 어떤 사업으로 인해 인구가 증가되었는지를 밝히는 것은 쉽지 않을 것임 	마을사업을 모두 찾기에는 한계가 있기에 마을만들기사업만으로 한정하여 분석

2. 전략과제 중간연심회 의견 및 반영 사항

주요 내용	반영여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7개 마을을 살펴보는 것보다 50인 미만 8개 마을을 중심으로 마을 소멸 원인 분석을 실시할 필요가 있음 • 소멸위기의 마을을 한정하여 현장 조사 필요 <p>1) 50명 이하 8개 마을 2) 소멸위기지수 변화 마을</p>	반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마을별 분석을 통해 마을별 대응 사업 발굴 필요 - 마을 주민들의 인식조사를 통해 마을별 최적화된 지원사업을 발굴해야 함 	마을 심층 인터뷰를 통해 반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마을별 연평균 인구 증감률 추가 분석 	반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마을별 인구 전망: 소멸 시기 전망 → 의식조사 결과와 비교분석 	향후 연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마을 사업 효과 분석 필요 	반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마을 단위 연구는 그동안 지자체, 읍면동 단위의 연구와는 차별된 부분, 행정에서 접목 가능한 연구 결과 도출 요망 	반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소멸을 극복하기 위한 사업 추진 시 법적 제도적 한계에 따라 사업 목적 달성이 불가능한 원인에 대한 분석 필요 	향후 연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2장1. 3) 충남연구원 마을 소멸 관련 연구 -> 주로 충남연구원에서 수행된 연구일지라도 목차에 충남연구원을 직접 언급하는 것은 적절해 보이지 않음. 충남 대상 마을 소멸 관련 연구로 변경 필요 	반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마을만들기와 관계된 사업이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외 농촌자원 복합 산업화 사업도 관계가 있는 만큼, 농촌자원 복합산업화 사업에 대해서도 제2장 3.에 간략한 추가 기술 필요 	반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4장 정책수요조사 부문은 마을소멸 관련한 주민의식조사 및 실태파악이 주 내용인 만큼 장제목과 내용이 불일치, '마을소멸실태분석' 등으로 제목 변경 필요 	설문 및 인터뷰 조사로 변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5장 쟁점 및 대응방안과 관련한 주요 이슈들이 제4장 주민의식조사와 마을 및 전문가 인터뷰 조사를 통해 도출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제5장 내용에 대한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인터뷰 조사 항목 및 전문가 대상 예상 질의에 대한 면밀한 사전 검토 및 검증 절차 마련이 필요, 인터뷰 조사전 별도의 전문가 자문회의등을 통해 주요 이슈 및 쟁점등이 잘 드러날 수 있도록 세심한 문항 설계가 필요 	반영

3. 전략과제 최종연심회 의견 및 반영 사항

주요 내용	반영여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목차) 3장의 1, 2절, 4장의 2절 1번을 3장으로 묶어 '마을실태 및 문제점'으로 편성하고, 4장은 '관련정책 진행현황 및 과제'로 변경 제안 	주민의식조사를 설문조사로 변경하였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분석방법) 본 연구의 과소마을대상(70명 이하 마을)을 충남 전역으로 확대 적용 시 나타날 수 있는 문제 검토 	연구 한계 및 향후 연구로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태조사) 마을소멸실태 분석은 소멸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를 진단하고 공감대를 형성하는 노력이 요구되며, 마을 내 토지활용문제 조사도 필요 	향후 연구로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사점) 연구의 논리적 완결성을 위해 실태분석 및 수요조사결과의 시사점 소결 형태로 제시 	반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책과제) 연구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정책방향에 부합하는 시범사업 제시 필요 	정책방향 다음에 정책방안으로 사업을 제시하였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책제언) 인구과소화, 고령화에 대한 '대응' 영역과제와 '적응' 영역과제를 구분하고, 마을소멸로 인해 나타나는 문제점을 부각시키며, 인구감소시대 마을 만들기 사업의 지속강화가 필요함을 강조 	반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향후과제) 정책방안을 구체화하는 시책사업 발굴, 사업추진상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유휴토지 활용 등)에 대한 후속연구가 필요함을 제시 	

4. 전략과제 선정위원회 의견

주요 내용	반영여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국 사례 포함 	반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부지원사업, 충남도 사업(지역개발사업, 성장촉진지역, 활성화지역, 농촌농민사업 등) 진단 	소멸 관련 정부 지원사업 고찰 반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입장려금, 출산 장려금 등 군자체 지원사업, 도지원사업, 제도 도입에 따라 출생아 증가, 전입자 증가 등을 진단 요망 	정량적, 정성적 진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마을소멸이 아닌 축소로 제목 변경, 소멸대응, 축소대응 등 고려 	마을 축소소멸 반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 소멸은 제외하고 마을소멸에 중점을 둘 것 	반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구발전, 인구소멸 과정을 곡선을 조금 상향으로 조정하기 위해 청양군에서 무엇을 해야 할지 제시 	대응방안 제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산을 많이 투입했고(관광사업, 노인복지사업 등) 사업 투자할 때 실질적으로 마을소멸이나 지역소비에 염두를 두었는지 정책을 검토해주시기 바람 • 시행했을 때 마을소멸 속도를 늦추는데 영향을 미쳤는지 검토 	청양군 정책 검토

5. 착수연심회 사전 자문회의 의견

주요 내용	반영 여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지 선정 이유에 기술 	반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마을소멸과 지방소멸의 차이에 대해 명확히 하고 마을소멸과 관련된 정책 및 추진된 사업 고찰 필요 	반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행정리 마을을 대상으로 분석하기에 구체적으로 행정리에 투입된 사업을 조사 하여 이에 대한 사업효과를 분석하는 것이 좋겠음 	반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마을 축소라는 용어에 대해 재고찰 필요. 지방은 축소가 되지만 실제 마을은 인구 감소등으로 축소되지 않고 소멸 위험에 대해서만 논의하면 좋을 것이라 사료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성적 분석 외에 정량적 분석에 대해 고민 요망 	반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구발전, 인구소멸 과정을 곡선을 조금 상향으로 조정하기 위해 청양군에서 무엇을 해야 할지 제시 	반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진단하는 방법에 대한 다양성 필요. 지방소멸에 대한 연구는 많이 있으나 마을 소멸에 대한 연구는 많이 없기에 다양한 방법론을 제시해 주는 것 필요 	반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마을 사업 효과 분석을 통해 대응방안의 방향성 제시 필요 	반영

7. 행정리 조사표⁴⁶⁾

행정리 조사표(실제 거주인구 및 현황)			
시군명 :	읍면명 :	법정리명 :	행정리명 :

1. 이장님이 관할하시는 행정리의 실제 거주 인구를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 실제 거주 인구 수	1-2 실제 거주 가구 수	1-3 65세 이상 인구 (65세-최고령)	1-4 75세 이상 인구 (75세-최고령)	1-5 20-39세 이성 수	1-6 미취학 아동 수	1-7 초중고 학생 수	1-8 독거 노인 수	1-9 귀농귀촌인 수 (최근 5년간)
명	호	명	명	명	명		명	명

2. 다음 항목은 행정리에 대한 물음입니다.

항목	응답		항목	응답	
2-1 마을회관 유무	유	/ 무	2-2 마을만들기 사업 추진 유무	유	/ 무
2-3 마을 내 소득시설 유무	유	/ 무	2-4 공기 및 폐기 수		개소

2. 다음 항목은 행정리에 대한 물음입니다.

항목	응답		항목	응답	
2-1 마을회관 유무	유	/ 무	2-2 마을만들기 사업 추진 유무	유	/ 무
2-3 마을 내 소득시설 유무	유	/ 무	2-4 공기 및 폐기 수		개소

3. 다음 항목은 마을 실태 및 의식에 관한 물음입니다.

항목	응답				
3-1 휴경지 정도	① 없음	② 1-10%	③ 11-20%	④ 21-30%	⑤ 30% 초과
3-2 정주 만족도	① 매우 만족	② 만족	③ 보통	④ 불만족	⑤ 매우 불만족
3-3 향후 10년 내 마을 소멸 가능성	① 매우 낮음	② 낮음	③ 보통	④ 높음	⑤ 매우 높음
3-4 마을 공동체 협력 정도	① 매우 활발	② 활발	③ 보통	④ 침체	⑤ 매우 침체
3-5 귀농귀촌 인구유입 가능성	① 매우 높음	② 높음	③ 보통	④ 낮음	⑤ 매우 낮음
3-6 마을 주민 참여·적극성	① 매우 높음	② 높음	③ 보통	④ 낮음	⑤ 매우 낮음
3-7 향후 인구 전망	① 매우 증가	② 증가	③ 현수준유지	④ 감소	⑤ 매우 감소
3-8 외부인 마을 유입에 대한 주민 의식	① 매우 긍정적	② 긍정적	③ 보통	④ 부정적	⑤ 매우 부정적

46) 조영재·조봉운·유학열·윤정미·한승석, 2020, 인구감소시대에 대응한 지방정부의 농촌지역정책 구상, 충남연구원

8. 마을 심층 인터뷰 조사표

행정리 조사표					
사람의 공동화	읍면명	읍/면	행정리명	리	
	인구	실제 거주인구	명	실제 가구수	
	인구구성	미취학 아동 수	명	초중고 학생	명
		20-39세 여성수	명	귀농귀촌인 (최근 5년간)	명
	고령인구	살거주 75세이상 인구	명	독거노인수	명
	정주 및 마을미래상	정주만족도	① 매우 만족 ② 만족 ③ 보통 ④ 불만족 ⑤ 매우 불만족		
		귀농귀촌 인구유입 가능성	① 매우 높음 ② 높음 ③ 보통 ④ 낮음 ⑤ 매우 낮음		
		마을소멸에 관한 의식	① 매우 높음 ② 높음 ③ 보통 ④ 낮음 ⑤ 매우 낮음		
		향후 인구 전망	① 매우 증가 ② 증가 ③ 보통 ④ 감소 ⑤ 매우 감소		
		외부인 마을 유입에 대한 주민 의식	① 매우 긍정적 ② 긍정적 ③ 보통 ④ 부정적 ⑤ 매우 부정적		
토지 및 경제 기반의 공동화	정주공간	공가 및 폐가 수	호	휴경지 비율	%
	접근성	대중교통 운행편	대	대중교통 운행 횟수	회
	경제기반	농가인구/가수	호	겸업농 인구/가구	호
		주요 농어업 소득원(주요작목)			
공동체 의 공동화	마을 공동체	마을기금	원	마을소유 땅 및 건물	평
		마을 내 소득시설			
		공동체 활력 정도	① 매우 높음 ② 높음 ③ 보통 ④ 낮음 ⑤ 매우 낮음		
		마을 주민 참여 적극성	① 매우 높음 ② 높음 ③ 보통 ④ 낮음 ⑤ 매우 낮음		
	복지 문화	보건의료시설	문화시설		
		교육시설	교육문화복지 프로그램 운영		

	최근 5년간 공공 및 마을 자체 사업	사업기간	사업명		
	마을조직 (단체)	조직명	명		
	마을사업 조직/ 법인현황	조직명	구성인원	주요 활동	
	마을행사	행사명	개최횟수	참여인원	
	마을 내 어려움(문제)				
빈집 활용 방안					
소셜 대응 숙원 사업					

9. 10년간 행정리 마을 인구(6월말 기준)

읍면명	행정리명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청양읍	교월1리	241	237	250	225	235	237	236	229	232	232	223
청양읍	교월2리	245	250	245	275	275	272	275	314	315	309	305
청양읍	교월3리	112	118	128	125	143	133	138	128	136	153	162
청양읍	군량리	193	199	200	200	202	190	201	189	174	160	167
청양읍	백천리	268	259	252	236	242	243	227	216	225	217	217
청양읍	백천1리	478	500	516	549	523	540	625	654	805	889	1017
청양읍	백천2리	188	182	175	184	173	170	157	148	140	146	147
청양읍	송방1리	343	367	395	411	424	432	409	402	365	432	510
청양읍	송방2리	271	256	248	257	248	231	234	227	219	213	204
청양읍	송방3리	102	100	95	94	86	96	89	99	103	109	107
청양읍	읍내1리	535	538	514	508	483	501	512	506	450	433	439
청양읍	읍내2리	1134	1086	1032	973	938	911	868	908	842	852	818
청양읍	읍내3리	2240	2241	2238	2317	2298	2278	2183	2105	2051	2043	1970
청양읍	읍내4리	1953	2021	1999	1967	2049	2197	2130	1963	1976	1965	2024
청양읍	읍내5리	778	769	744	721	719	713	692	672	651	677	670
청양읍	장승1리	84	83	88	74	74	73	74	72	70	72	67
청양읍	장승2리	180	182	177	180	179	171	170	163	160	164	165
청양읍	적누1리	184	189	183	182	183	183	179	178	186	184	177
청양읍	적누2리	105	110	109	111	113	109	107	105	100	104	104
청양읍	정좌1리	121	127	127	126	134	131	122	120	118	113	95
청양읍	정좌2리	58	58	58	56	56	56	53	50	50	49	48
청양읍	정좌3리	76	76	94	87	81	79	75	70	67	68	66
청양읍	청수1리	142	146	148	152	163	159	149	151	156	145	141
청양읍	청수2리	109	106	114	112	115	110	115	121	123	128	117
청양읍	학당1리	45	51	49	50	61	57	51	48	54	47	49
청양읍	학당2리	175	176	179	172	155	155	157	154	147	138	133
운곡면	광암1리	97	95	98	93	93	89	93	91	88	91	92
운곡면	광암2리	160	168	170	180	180	171	169	165	166	162	158
운곡면	모곡리	275	277	268	271	282	271	265	260	243	229	230
운곡면	미량1리	107	102	99	102	95	91	91	91	92	89	87
운곡면	미량2리	72	71	71	74	75	72	73	68	70	69	67
운곡면	신대1리	122	125	134	136	154	186	173	187	182	184	168
운곡면	신대2리	116	118	123	127	129	128	119	119	112	114	110
운곡면	영양1리	211	209	207	213	206	199	188	176	170	163	164
운곡면	영양2리	132	141	144	142	137	137	135	127	122	122	127
운곡면	위라1리	141	136	143	138	134	129	129	122	122	126	126
운곡면	위라2리	148	132	139	135	140	144	142	142	136	143	136
운곡면	추광리	164	171	170	172	170	175	175	179	177	183	191
운곡면	효제1리	110	116	106	105	111	112	107	95	92	89	91

읍면명	행정리명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운곡면	효제2리	108	111	106	120	124	117	110	109	111	103	101
운곡면	후덕리	254	267	270	265	253	261	271	259	257	254	246
대치면	개곡리	39	33	42	44	49	43	47	51	54	47	49
대치면	광금리	98	95	96	102	107	105	108	99	102	107	106
대치면	광대리	76	74	73	75	70	74	79	76	78	85	86
대치면	구치리	84	79	90	92	95	84	84	73	69	68	69
대치면	농소리	149	148	148	149	147	147	149	157	156	152	154
대치면	대치리	74	78	89	91	102	101	110	91	92	93	91
대치면	상갑리	137	144	142	148	153	153	146	143	137	136	147
대치면	수석리	171	177	174	168	168	162	157	161	170	163	162
대치면	시전리	216	218	228	233	236	235	236	235	225	236	234
대치면	오룡리	74	72	69	76	77	79	79	80	77	78	77
대치면	이화리	131	136	129	129	129	130	127	135	130	124	129
대치면	작천리	140	139	140	138	144	136	126	128	131	129	129
대치면	장곡리	135	137	137	139	134	137	133	132	132	131	129
대치면	주정1리	228	213	207	207	207	207	194	195	184	183	187
대치면	주정2리	76	75	92	91	87	78	79	82	96	87	87
대치면	탄정리	296	281	280	262	265	271	273	271	266	255	252
대치면	형산리	139	140	143	145	140	136	147	148	141	144	146
정산면	광생리	184	186	185	187	182	181	181	174	176	178	169
정산면	남천리	156	165	160	165	167	149	146	140	141	140	143
정산면	내초리	56	51	63	66	62	59	57	68	69	74	71
정산면	대박리	165	162	173	170	171	165	160	163	166	174	159
정산면	덕성1리	104	104	97	95	95	96	92	89	86	82	82
정산면	덕성2리	88	91	89	94	82	92	91	94	95	90	91
정산면	마치1리	116	121	117	117	115	111	110	112	116	114	114
정산면	마치2리	125	116	121	113	115	117	107	102	105	99	98
정산면	백곡1리	95	94	94	93	97	98	88	84	87	81	86
정산면	백곡2리	99	111	109	99	111	117	105	111	114	115	114
정산면	서정1리	807	850	887	941	949	963	973	916	898	905	865
정산면	서정2리	302	306	301	296	289	248	230	265	283	278	255
정산면	송학리	135	133	137	133	142	151	145	144	152	151	142
정산면	신덕리	107	97	92	93	95	93	99	91	90	91	90
정산면	역촌1리	224	242	248	236	243	238	223	232	229	216	199
정산면	역촌2리	150	158	151	148	145	147	142	142	133	132	131
정산면	와촌리	128	125	124	120	128	121	128	127	125	110	109
정산면	용두리	161	160	160	161	155	157	150	143	152	148	147
정산면	천장리	116	116	108	111	98	86	86	84	88	87	88
정산면	학암리	112	108	98	103	110	101	103	104	95	102	102
정산면	해남리	207	203	198	191	187	188	181	179	177	170	175
목면	지곡1리	169	170	158	153	143	139	133	128	128	126	120
목면	지곡2리	75	79	86	84	81	86	88	87	85	78	75
목면	화양1리	126	116	124	117	123	123	127	122	127	131	124
목면	화양2리	90	85	90	91	87	84	86	87	85	89	93
목면	신흥1리	65	67	74	71	84	78	84	78	80	76	76
목면	신흥2리	43	41	43	44	44	44	47	46	46	45	43
목면	안심1리	197	195	201	190	183	187	188	182	169	166	153
목면	안심2리	176	173	182	192	195	199	193	189	188	193	189

읍면명	행정리명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목면	송암1리	102	112	101	112	112	110	103	109	95	93	96
목면	송암2리	42	41	44	48	50	57	59	49	46	51	49
목면	본의1리	172	170	168	170	171	167	165	161	162	157	156
목면	본의2리	75	70	71	70	68	72	80	79	82	79	81
목면	대평1리	121	122	120	121	119	114	114	110	112	111	111
목면	대평2리	129	119	121	119	115	113	108	115	102	104	101
청남면	내직1리	44	43	38	37	36	39	42	45	39	40	37
청남면	내직2리	74	86	92	88	89	92	89	84	87	77	83
청남면	대흥1리	120	128	113	117	115	116	118	115	113	103	106
청남면	대흥2리	64	67	67	62	60	69	64	65	58	59	56
청남면	동강리	144	140	135	135	134	136	130	128	127	120	121
청남면	상장1리	78	74	75	71	75	85	73	75	69	73	73
청남면	상장2리	67	64	60	64	66	69	72	70	80	84	76
청남면	아산리	143	135	132	130	131	137	138	135	136	139	129
청남면	왕진1리	188	196	192	189	191	183	184	172	168	154	154
청남면	왕진2리	156	155	154	166	152	151	151	143	133	127	125
청남면	인양리	210	216	225	226	219	211	206	205	208	210	207
청남면	중산리	192	183	183	183	186	187	179	171	163	163	160
청남면	지곡리	101	108	106	106	109	117	114	119	116	117	120
청남면	천내1리	100	101	100	98	97	104	95	98	98	86	75
청남면	천내2리	60	61	62	63	58	57	59	54	53	51	50
청남면	청소1리	242	246	234	233	241	235	219	206	189	178	191
청남면	청소2리	49	50	55	56	56	64	61	64	69	61	62
장평면	중추1리	154	155	151	142	150	147	152	140	139	131	131
장평면	중추2리	73	77	81	78	77	77	79	82	85	90	87
장평면	장평리	132	138	141	145	141	149	134	133	122	122	119
장평면	은곡리	187	202	219	201	202	207	201	194	187	183	176
장평면	미당1리	325	335	326	304	300	294	269	273	262	259	252
장평면	미당2리	79	82	83	83	81	78	74	70	64	67	70
장평면	적곡리	168	165	162	171	160	159	154	152	144	142	137
장평면	도림리	39	46	49	54	56	54	52	52	57	50	54
장평면	락지리	168	170	173	176	167	174	166	178	164	161	161
장평면	지천리	123	120	130	134	146	128	130	134	133	136	133
장평면	죽림리	124	123	132	123	117	119	115	110	99	90	81
장평면	화산1리	96	95	105	111	109	107	97	102	93	97	93
장평면	화산2리	190	194	191	188	184	177	170	164	163	159	148
장평면	구룡리	191	183	178	177	180	168	164	159	160	161	158
장평면	관현리	167	168	163	163	174	165	154	151	156	159	163
장평면	분항1리	200	193	189	189	183	180	168	170	162	159	156
장평면	분항2리	121	121	123	125	123	124	119	110	102	103	101
남양면	금천리	219	111	103	218	189	177	174	180	171	144	141
남양면	구룡1리	102	100	100	99	96	101	104	98	84	78	71
남양면	구룡2리	79	83	79	80	76	78	72	70	69	65	64
남양면	구룡3리	83	79	76	72	78	76	78	79	76	76	74
남양면	신왕1리	56	54	52	55	56	55	57	65	70	72	69
남양면	신왕2리	156	153	152	143	141	148	141	138	142	137	132
남양면	백금1리	101	93	92	94	97	101	110	102	99	103	98
남양면	백금2리	91	82	81	84	84	85	87	83	85	84	84

읍면명	행정리명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남양면	용마1리	102	104	105	96	91	93	93	90	90	89	90
남양면	용마2리	119	123	118	122	128	134	128	123	129	128	125
남양면	대봉1리	149	184	248	135	156	153	150	150	152	145	147
남양면	대봉2리	120	196	132	134	131	139	126	120	122	157	136
남양면	흥산1리	106	105	99	104	110	115	110	113	106	97	93
남양면	흥산2리	152	152	160	168	167	162	160	160	155	142	140
남양면	매곡1리	84	78	84	76	77	73	76	78	80	80	77
남양면	매곡2리	51	52	51	49	50	50	50	49	50	48	49
남양면	온암1리	30	30	37	33	34	41	37	40	42	43	39
남양면	온암2리	77	74	74	73	68	71	67	66	65	66	67
남양면	온직1리	182	177	175	181	174	176	183	173	162	159	155
남양면	온직2리	73	75	74	78	77	73	74	77	79	73	75
남양면	온직3리	57	62	64	74	66	77	79	89	86	82	72
남양면	용두1리	98	93	97	102	99	97	100	95	89	89	89
남양면	용두2리	52	50	46	43	47	45	44	42	41	39	44
남양면	금정1리	72	70	66	68	65	62	59	62	52	53	54
남양면	금정2리	224	229	222	229	237	237	224	211	207	202	201
남양면	봉암1리	135	143	141	148	143	141	143	138	144	144	142
남양면	봉암2리	75	80	81	82	89	92	84	87	78	80	82
화성면	광평리	77	77	73	75	78	75	71	66	67	70	73
화성면	구재리	176	182	184	179	174	171	161	153	158	169	168
화성면	기덕리	100	97	93	90	97	100	97	93	94	91	91
화성면	농암1리	108	113	120	125	129	132	119	119	119	115	111
화성면	농암2리	123	125	128	133	127	123	131	131	126	125	120
화성면	매산1리	94	82	83	86	88	92	87	88	83	76	73
화성면	매산2리	90	93	93	94	95	95	93	90	85	92	74
화성면	산정1리	363	371	355	346	316	321	309	298	281	264	252
화성면	산정2리	86	83	85	85	96	100	94	90	90	91	94
화성면	수정리	222	219	215	230	229	221	217	220	222	216	214
화성면	신정리	159	155	158	153	163	168	153	150	148	147	146
화성면	용당리	205	203	212	203	204	199	197	193	190	191	184
화성면	장계리	215	197	192	198	207	216	201	205	202	204	199
화성면	화강리	145	144	145	152	148	161	151	157	157	153	148
화성면	화암리	170	181	180	182	178	177	168	165	157	153	154
비봉면	강정리	227	220	209	196	206	204	198	190	194	191	189
비봉면	관산리	102	101	103	97	90	108	101	94	96	97	99
비봉면	록평1리	291	276	280	271	284	275	269	259	236	226	234
비봉면	록평2리	111	114	111	105	109	111	107	106	105	104	106
비봉면	방한1리	54	55	56	50	53	60	72	71	72	64	64
비봉면	방한2리	123	128	132	134	121	125	131	124	127	131	133
비봉면	사점리	127	136	138	131	127	126	124	122	120	127	119
비봉면	신원1리	138	129	140	140	138	127	124	116	117	115	114
비봉면	신원2리	148	139	133	131	133	146	143	141	128	127	128
비봉면	양사1리	129	136	133	144	148	143	134	132	135	138	146
비봉면	양사2리	185	193	188	190	196	200	196	190	187	192	189
비봉면	용천리	210	211	209	214	217	205	201	204	195	185	183
비봉면	장재리	210	209	200	199	200	207	193	189	170	179	177
비봉면	중목리	214	219	199	199	206	208	207	200	209	208	212

집필자

연구책임자 윤정미 충남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내부연구진 조영재 충남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윤향희 충남연구원 책임연구위원
외부연구진 조은정 전남대학교 대학강사
 김두환 안동시의회 정책지원관

전략연구 2023-03

충남 마을소멸 실태 분석 및 대응 방안 - 청양군을 대상으로

발행인 유동훈
발행처 충남연구원
인쇄 2023년 12월 31일
발행 2023년 12월 31일
주소 충청남도 공주시 연수원길 73-26 (32589)
전화 041-840-1114(대표)
팩스 041-840-1129
홈페이지 <http://www.cni.re.kr>
ISBN 978-89-6124-647-7

© 2023. 충남연구원

- 이 책에 실린 내용은 자료를 명기하면 자유로이 인용할 수 있습니다.
- 무단전재하거나 복사, 유통시키면 법에 저촉됩니다.
- 연구보고서의 내용은 본 연구원의 공식 견해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